

KINU 연구총서 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KINU 연구총서 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 성 훈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인 쇄 2011년 11월

발 행 2011년 11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4 (팩시밀리) 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두일디자인 (02-2285-0936)

인 쇄 처 두일디자인

ISBN 978-89-8479-605-8 93340

가 격 ₩14,500

© 통일연구원, 2011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요약	xiii
I. 서론	1
II. 핵안보정상회의 출범 배경과 동기	9
1. 핵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	13
2. 테러 방지를 위한 유엔차원의 노력	24
3. 핵테러 방지에 관련된 기존 국제규범과 협약	33
III. 핵안보와 국제 핵비확산체제	45
1. 핵비확산체제	47
2. 핵비확산체제와 핵안보	51
IV.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주요 성과	65
1. 오바마의 “포괄적 의제”(Comprehensive Agenda)	69
2. 국제협력과 정상회의	71
3.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운영과 성과	76
V.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사전 준비	91
1. 1차 교섭대표회의	93
2. 1차 부교섭대표회의	93
3. 한국의 준비상황	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VI.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103
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서울 개최	105
2. 북핵문제의 논의 범위	107
VII. 한국의 전략과 대책	113
1. 고려사항	115
2. 기본방향	119
3. 새로운 의제 제시	131
4. 세부 추진전략	137
참고문헌	151
부록	161
최근 발간자료 안내	321



표·그림 목차


<표 IV - 1> 정상성명 및 작업계획 주요내용	85
<표 VI - 1> 핵안보의 기본구도	110
<그림 III - 1> 핵비확산체제의 세 기둥	51
<그림 III - 2> 안전과 안보의 상관관계	61
<그림 III - 3> 안전과 안보의 관계: 국제규범 중심	62
<그림 III - 4> ‘3S’의 상관관계	63
<그림 IV - 1> 오바마의 포괄적 의제와 대테러 정책	71
<그림 VI - 1> 핵비확산체제와 ‘3S’의 상관관계	112

부록 목차

KINU 연구총서 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 부록** 1. Statement of Principles, the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GICNT), November 13, 2006 **163**
2. Remarks by President Barack Obama, Prague, Czech Republic, April 5, 2009 **166**
3. Remarks by The President to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ited Nations Headquarters, New York, September 23, 2009 **178**
4. Fact Sheet o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ummit on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Disarmament, UNSC Resolution 1887, September 24, 2009 **196**
5.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87, 6191st meeting, September 24 2009 **202**
6. Statement by President Obama on the 40th Anniversary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March 5, 2010 **213**
7. World Leaders and Heads of Delegation Attending the Nuclear Security Summit, April 10, 2010 **215**
8. Remarks by the President at the Opening Plenary Session of the Nuclear Security Summit, Washington Convention Center, Washington, D.C., April 13, 2010 **222**
9. Communiqué of the Washington Nuclear Security Summit, April 13, 2010 **227**



부록 목차

10. Work Plan of the Washington Nuclear Security Summit,
April 13, 2010 **231**
11. Press Conference by the President at the Nuclear
Security Summit, Washington Convention Center,
Washington, D.C., April 13, 2010 **243**
12. Press Briefing by Ben Rhodes,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for Strategic Communications; Gary Samore,
Senior White House Coordinator for WMD Counterterrorism
and Arms Control; and Laura Holgate, Senior Director
for WMD Terrorism and Threat Reduction, Washington
Convention Center, Washington, D.C., April 13, 2010 **261**
13. Key Facts about the National Security Summit,
April 13, 2010 **286**
14. Nuclear Security Summit National Statement
of the United States, April 13, 2010 **292**
15. Highlights of the National Commitments made
at the Nuclear Security Summit, April 12-13, 2010 ... **298**
16. Statement of President Obama on Russia Shutting Down
Final Plutonium Reactor, April 13, 2010 **302**
17. Trilateral Announcement Between Mexico,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on Nuclear Security,
April 13, 2010 **303**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 18. Nuclear Security Work Plan Reference Document,
April 13, 2010 305
- 19. 이명박 대통령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유치 기자회견,
워싱턴 D.C. 컨벤션센터, 2010년 4월 13일 317



약어 정리

CBRNW	화학세균방사능핵무기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r Weapons)
Code of Conduct	방사성물질의 안전과 안보에 대한 행동지침 (Code of Conduct on the Safety and Security of Radioactive Sources)
CPPNM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CSA	포괄적인 보장조치협정(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
CSI	컨테이너 안보구상(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원(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TR	협력위협감소(Cooperative Threat Reduction)
CTBT	핵실험 전면금지조약(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DBA	사고대응설계기준(Design Based Accident)
DBT	위협대응설계기준(Design Based Threat)
FMCT	무기급 핵물질생산 금지조약(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FMWG	핵물질관리그룹(Fissile Material Working Group)
GCD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축(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GICNT	세계핵테러방지구상(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G8 글로벌 파트너십	G-8 Global Partnership Against the Spread of Weapons and Materials of Mass Destruction
HEU	고농축우라늄(Highly Enriched Uranium)
IAEA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CNND	국제핵비확산군축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n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ICSANT/NTC	핵테러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ICSFT	테러자금지원억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IPPAS	물리적 방호 자문 서비스(International Physical Protection Advisory Services)
KCTR	한반도협력위협감소(Korean Peninsula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LEU	저농축우라늄(Low Enriched Uranium)
MI	메가포트 구상(Megaport Initiative)
NNSA	국가핵안보처(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NPR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NPT	핵무기확산금지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TI	핵위협구상(Nuclear Threat Initiative)
PSA	안전한 미국을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a Secure America)
PSI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SFI	화물안보구상(Secure Freight Initiative)
WANO	세계원자력운영자협회(World Association of Nuclear Operators)
WINS	세계핵안보기구(World Institute for Nuclear Security)
WMD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요 약

“핵안보”(Nuclear Security)란 민감한 핵물질이 원자력의 발전이나 연구를 위한 시설에서 불법 유출되어 핵테러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적 활동을 총칭한다.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거나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를 폐기하는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핵물질과 핵기술의 악의적이고 불법적이며 의도적인 전용을 막는 핵안보의 취지와 특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더 적절한 표현은 “핵물질보안”(Nuclear Material Security)이다.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37개국 정상과 10개국 고위대표 그리고 3개 국제기구(유엔, IAEA, 유럽연합)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4월 12~13일 워싱턴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NPT를 토대로 하는 핵비확산체제가 출범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전세계 47개국의 정상과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핵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 것은 이 회의가 처음이다. 한국은 제1차 회의에서 2012년 차기 회의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2012년 3월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역시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의 정상회의로서 한국이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국제무대에서 나라의 격을 높이며 국익을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본 연구는 국제안보의 새로운 현안으로 부상한 핵안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핵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제2차 회의를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제Ⅱ장에서는 핵안보정상회의가 출범한 핵심적인 요인은 9/11 테러

이후 미국 본토에서 핵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이런 위협을 예방해야 한다는 절박감이라는 점을 밝혔다. 또한 핵테러 가능성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국제 핵비확산체제에서 핵안보가 차지하는 위치를 검토하고, 원자력 이용의 핵심 개념인 '3S'(Safeguards, Safety, Security)의 내용과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제Ⅳ장에서는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를 분석했고, 제Ⅴ장에서는 서울에서 개최될 제2차 정상회의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제Ⅵ장에서는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기본적으로 핵안보는 북핵폐기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무기와 군사용 핵물질 문제를 의제로 다루지 않는 것이 현실적이고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Ⅶ장에서는 제2차 정상회의에 임하는 한국이 추진해야 할 전략과 대책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했다: ① 고려사항, ② 기본방향, ③ 새로운 의제 제시, ④ 세부 추진전략.

본 연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문제가 매우 절제된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본적으로 핵폐기와 핵안보는 별개라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규범을 감안할 때, 핵안보정상회의는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 즉 핵폐기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은 아니다. 그러나 건국 이래 최대의 안보위협인 북핵문제를 정부수립 이래 최대의 국제안보행사에서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다. 만약 핵안보정상회의가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가 조금이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북핵문제가 빠졌다'는 비판, '우리 안보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대규모 국제회의 무용론' 등이 확산될 수 있다.

큰 틀에서 볼 때,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는 북핵문제 해결 차원에서 다

음과 같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 북한 핵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각인시킨다.
- 북한의 ‘서울 불바다’, ‘남한 깃터미’ 등의 위협 발언을 적절히 활용하여 북핵 위협의 실상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 북한 지도부에 대한 간접적, 외교적 핵포기 압박 효과를 유발한다.
- 세계 제1의 WMD 확산국가인 북한과 이웃해 있는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도 불구하고 비핵평화 외교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획득한다.
- 세계 정상들에게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제대로 알리고, 정상외교를 통해서 북한정권이 자행하는 각종 파행적 일탈행위를 논의하는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외교적 우위를 확보한다.

구체적으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북핵문제의 핵확산 측면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시리아 원자로 수출, 미얀마 핵개발 커넥션, 우리나라 농축 프로그램 공개 등 이탈국가 북한의 “무책임한 확산” (irresponsible proliferation) 활동이 핵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북핵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핵기술·핵물질 불법 거래야말로 핵안보의 직접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핵확산 활동은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다루어져야 하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북한의 무책임한 확산행위가 핵테러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확산을 저지하는 것은 핵테러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것이란데 범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 만큼,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공동성명은 지금까지 북한이 자행한 핵확산 활동을 비난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 더 나아가 현재 “뜻 맞는 나라들의

연합체”(coalition of willing)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PSI 협약”(PSI Convention)으로 전환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PSI야말로 핵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핵안보 측면에서 볼 때,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사찰이 진행되고 있는 이란에 비해 IAEA의 접근이 차단된 북한이 훨씬 큰 문제라는 점을 포함해서 북한의 핵활동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집중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남북관계 차원에서 한국이 북한에 제의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의 김정일을 초청한다.
- 북한으로 하여금 핵안보 관련 모든 국제규범에 조속히 가입하도록 촉구한다.
- 남북한 간에 핵안보 관련 협력을 제의하고, 구체적으로 쌍방 핵시설에 대한 상호 모니터링과 자료교환을 추진한다.
- 쌍방 핵시설에 대한 사보타지 및 무력사용 금지 협정 체결을 제안한다.

이밖에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제기할 수 있는 국제적 차원의 의제와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핵안보정상회의 확대·개편, ‘3S’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원자력정상회의 개최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 컨센서스’(Seoul Consensus)를 도출하도록 한다.
- 방사성테러 위협을 고려하여 방사성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의제로

추가한다.

- HEU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기존의 플루토늄 관리지침과 통합한다.
-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핵안보훈련센터를 설립한다.
-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을 위한 국제협력을 공문화한다.
- 각국이 자발적으로 핵안보를 증진할 수 있는 조치를 선언하도록 유도한다.
- 핵보유국들이 별도의 회의를 열고 핵안보 관련 이행조치를 발표하도록 제안한다.
- 핵확산에 책임 있는 국가의 지도자를 국제재판에 회부하자는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후속논의를 실시하도록 한다.
- 한국이 핵안보정상회의를 자국 이기주의를 위해 이용한다는 비판이 초래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기존의 한·미 현안과 분리해서 회의를 진행한다.
- 한국의 원자력 산업과 기술 수준을 대외적으로 홍보한다.
- 남북 통행관련 합의서의 엄격한 이행과 보완·개정 추진 의지를 천명한다.

I. 서론

제2차 핵인보 정상회의의와 북한 핵문제



“핵안보”(Nuclear Security)란 민감한 핵물질이 원자력의 발전이나 연구를 위한 시설에서 불법 유출되어 핵테러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적 활동을 총칭한다. 핵안보는 핵보유국(핵국)이 핵무기를 증강하거나 현대화하는 “수직적 확산”(vertical proliferation)을 막기 위한 “핵군축”(Nuclear Disarmament), 핵무기와 핵기술이 핵무기가 없는 나라(비핵국)와 테러집단의 손에 들어가는 “수평적 확산”(horizontal proliferation)을 방지하기 위한 “비확산”(Non-Proliferation),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핵무기 개발로 전용되지 못하게 감시하는 “보장조치”(Safeguards),¹ 자연재해로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는 “핵안전”(Nuclear Safety)과는 다른 개념이다. 핵물질과 기술의 악의적이고 불법적이며 의도적인 전용을 막고자 하는 핵안보의 기본 취지와 특성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더 정확한 표현을 쓴다면 “핵물질보안”(Nuclear Material Security)이 될 것이다.²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2010년 4월 12~13일 워싱턴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37개국 정상과 10개국 고위대표 그리고 3개 국제기구(유엔, IAEA, 유럽연합) 대표들이 참석한 대규모 국제회의였다. “핵무기확산금지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을 토대로 하는 핵비확산체제가 출범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전세계 47개국의 정상과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핵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 것은 이번 회의가 처음이다. 미국으로서도 50여 개국의

¹ “Safeguards”는 보장조치 혹은 안전조치라고 번역하는데, 과거에는 보장조치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지만 요즘에는 안전조치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안전이 “Safety”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Safeguards”를 보장조치로 번역한다.

² Nuclear Security Recommendations on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INFCIRC/225/Revision 5), IAEA Nuclear Security Series No. 13 (Vienna: IAEA, 2011).

I
II
III
IV
V
VI
VII

정상들이 워싱턴에 모인 것은 건국 이후 최초의 일이었다. 2010년 4월 6일 오바마 행정부가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새로운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NPR)을 발표했고, 4월 8일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체코의 프라하에서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을 체결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핵군축을 지향하는 뚜렷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는 2010년 4월에 일어난 또 하나의 중요한 행사로서 앞으로 새로운 국제안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제1차 회의에서 2012년 차기 회의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을 이명박 대통령이 수락하고, 참가국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한국 유치가 확정되었다. 2012년 3월 26~27일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역시 제1차 회의 때와 비슷한 규모의 각국 대표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회의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의 국제회의로서 한국이 세계평화에 기여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나라의 격을 높이고 국익을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³

한편, 북한이 NPT를 위반하고 핵개발을 추진한 것은 물론 핵물질과 핵기술을 해외에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는 북핵문제 해결 차원에서도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과 파키스탄, 시리아와의 비밀 핵협력이 사실로 드러났고, 최근에는 미얀마와의 핵거래 의혹도 제기되는 등⁴ 북한은 핵확산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이다. 지금 국제사회에는 설혹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테러를 자

3. 전봉근, “핵안보정상회의 성과와 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 여름호 (외교안보연구원 2010).

4. Jay Solomon, “Myanmar’s links with Pyongyang stir nuclear fear,” *Wall Street Journal*, December 17, 2010.

행하지는 않더라도 영변에서 흘러나온 핵물질이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집단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상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한국 개최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제안보의 새로운 현안으로 부상한 핵안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핵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제2차 회의를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순기능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특히 핵확산의 주역인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핵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에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된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이 회의를 북핵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핵안보에 관련된 주요 문건을 조사·수집해서 원문그대로 제공함으로써 핵안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 추후 연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제Ⅱ장에서는 핵안보정상회의가 출범한 배경과 동기를 살펴보았다. 미국이 이 회의를 시작한 데에는 핵테러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자리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미국 본토에서 핵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이런 위협을 예방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핵안보정상회의가 시작된 핵심적인 요인이다. 핵테러 가능성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 장에서는 테러방지를 위한 유엔의 노력과 핵테러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규범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국제 핵비확산체제에서 핵안보가 차지하는 위치를 점검함으로써, 핵안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먼저 핵비확산체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원자력 이용의 핵심 개념인 ‘3S’(Safeguards,

I

II

III

IV

V

VI

VII

Safety, Security)를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핵안보를 핵비확산체제의 두 번째 기둥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산하에 위치하는 개념으로 파악한다.

제IV장에서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를 검토했다. 먼저 핵안보가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포괄적 의제”(Comprehensive Agenda)의 일부라는 점을 밝히고, 핵안보를 증진하기 위해서 미국이 국제협력과 정상회의를 선택한 이유를 분석했다. 그 다음으로 제1차 정상회의의 내용을 운영방식, 제기한 목표 및 성과 순으로 살펴보았다.

제IV장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의 고위관리들의 발언을 가급적 그대로 소개함으로써, 미국이 갖고 있는 인식과 입장을 가급적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제V장에서는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정상회의의 준비 상황을 검토했다. 제1차 정상회의가 끝난 이후 본 연구가 출간되는 시점까지 개최된 교섭대표회의와 부교섭대표회의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했다.

제VI장에서는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제2차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의미를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 해결이란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했다. 그 다음 제2차 정상회의에서 북핵문제를 어느 정도 수준과 범위에서 논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분석했다. 기본적으로 핵안보는 북핵폐기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제2차 정상회의에서는 핵무기와 군사용 핵물질 문제를 의제로 다루지 않는 것이 현실적이고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제VII장에서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임하는 한국이

추진해야 할 전략과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한국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 제2차 정상회의의 기본방향을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했다. 아울러 서울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의제를 제안한 다음 이번 회의를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I

II

III

IV

V

VI

VII

II. 핵안보정상회의 출범 배경과 동기



핵안보정상회의는 2009년 4월 5일 오바마 대통령이 프라하에서 핵 비확산 문제에 대해 밝힌 자신의 정책과 구상에 토대를 두고 있다.⁵ 오바마는 이 연설에서 테러집단이 핵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 핵물질과 기술의 유통을 차단하고 관련 국제노력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핵안보정상회의를 주최하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오바마는 2009년 7월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에서 2010년 3월에 이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해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2010년 4월로 그 시기를 조정해서 회의를 열겠다고 제안하면서 단 한 개의 핵무기도 극단주의자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해서 각국의 핵물질 관리책임을 재확인하고, 핵물질의 밀매와 도난을 막기 위한 제도와 구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⁶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펼치리라는 점은 대선과정에서부터 예견되었었다. 오바마 후보는 핵무기, 세균무기 및 사이버 공격을 21세기에 미국이 직면할 수 있는 재앙적인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⁷ 핵무기의 위협에 대처하기

⁵- *Remarks by President Barack Obama, Hradcany Square, Prague, Czech Republic*,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April 5, 2009, <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Remarks-By-President-Barack-Obama-In-Prague-As-Delivered/>.

⁶- 원문은 다음과 같다. “I will also host a summit next April that reaffirms each nation’s responsibility to secure nuclear material on its territory, and to help those who can’t — because we must never allow a single nuclear device to fall into the hands of a violent extremist. And we will work to strengthen the institutions and initiatives that combat nuclear smuggling and theft.” *Remarks by the President to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ited Nations Headquarters*, New York, New York,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September 23, 2009, <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Remarks-by-the-President-to-the-United-Nations-General-Assembly/>.

⁷- *Fact Sheet: Obama’s New Plan to Confront 21st Century Threats*, July 16, 2008, <www.barackobama.com>.

위해서는 핵테러 위협을 줄이고 핵비확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테러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무기급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 민간영역에서의 “고농축우라늄”(Highly Enriched Uranium: HEU) 사용 자제,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강화, 개별국가 차원의 핵물질 관리체제 구축 지원, 핵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정상회담 개최, 강력한 협상을 통한 이란·북한의 핵프로그램 제거, IAEA 강화 등을 제안했다.

핵비확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핵무기 없는 세계’의 구현이라는 목표 설정, 검증 가능한 대폭적인 핵군축 실현, 미 의회의 “핵실험전면금지조약”(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TBT) 비준, 2010년에 예정된 NPT 검토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을 제안했다. 특히 오바마 후보는 핵군축, 미사일 경계태세 강화, 미·러 중거리미사일 폐기조약의 참여국 확대 등을 위해서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⁸ 또한 민간영역에서의 HEU 사용 자제, 개별국가 차원의 핵물질 관리체제 구축 등 무기급 핵물질의 생산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도 했다.

미국 정부는 오바마의 정책 비전인 ‘핵무기 없는 세계’, 즉 지구상에서 모든 핵무기를 없애자는 구상과 연동해서 핵안보정상회의를 핵확산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성 여부를 떠나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지는 당위적인 명제를 던져 놓고 미국이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보이면서, 다른 나라들의 동참을 끌어내려는 것이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비확산 정책의 골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각국의 의사

⁸- Barack Obama, *A New Strategy for a New World*, July 15, 2008, <my.barackobama.com/page/community/amandascott>.

결정의 정점에 있는 정상들을 모아놓고 ‘핵물질’ 특히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의 관리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

1. 핵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

미국이 전세계 수십 개국에 산재한 2,000톤이 넘는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안전한 관리·감독에 신경을 쓰는 것은 핵테러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⁹ 오바마는 의원시절부터 국제사회가 당면한 가장 절박한 위협으로 핵테러 가능성을 들었는데, 이는 9/11 테러를 겪은 미국인들이 핵테러 위협을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앞으로 언젠가는 미국 땅에서 핵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¹⁰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가능성을 줄이고 발생시점을 지연시켜야 한다는 것이 많은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 따라서 9/11 사태 이후

⁹- 2010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민수용과 군사용을 합쳐서 HEU가 약 1,600톤, 플루토늄이 약 500 톤 정도 존재한다. HEU나 플루토늄을 보유한 국가도 40여 개국에 이른다. 30개 나라에서 436기의 상업용 원전이, 56개 나라에서 250여 기의 연구용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 핵추진 함선과 잠수함도 220척에 달한다. 확인된 HEU와 플루토늄의 도난이나 분실 사건만 해도 18건에 이른다. Igor Khripunov, “Post-nuclear summit agend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 Security, University of Georgia, May 26, 2010. 2,100여 톤에 달하는 HEU와 플루토늄 가운데 절 반 정도가 군사용이고 나머지 절반이 민수용이다. 그러나 이는 추정치일 뿐이고, 플루토늄의 경우 25톤, HEU의 경우 300톤의 계량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오차가 나는 양만큼 덜 계산되었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 존재하는 양만으로도 10만개에서 15만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 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 *Global Fissile Material Report 2009: A Path to Nuclear Disarmament*, 2009, pp. 8~23, <www.fissilematerials.org>.

¹⁰- Graham Allison, *Nuclear Terrorism: the Ultimate Preventable Catastrophe* (New York: Owl Books, 2004).

I
II
III
IV
V
VI
VII

세계평화의 최대 위협으로 부상한 핵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유대를 강화하고 관련 체제를 보강하자는 것이 핵안보정상회의의 기본 취지이다.

핵테러에 대한 미국인들의 위협인식은 대단하다.¹¹ 우선 미국 관리들의 주요 발언을 사례로 들면 다음과 같다. 2004년 2월 24일 발간된 미 중앙정보국(CIA)의 세계위협브리핑은 극단주의자들이 생화학무기, 방사성무기¹² 및 핵무기를 사용해서 테러를 가할 위협을 경고했고, 당시 CIA 국장이던 테넷은 테러집단이 핵·화학·세균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자신이 가장 걱정하는 일이라고 밝혔다.¹³ 맥코넬 국가정보국장은 2008년 2월 27일 상원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연례

11. 핵테러에 대한 미국의 위협인식과 관련해서 아래에 제시하는 사례들은 다음 논문의 내용을 토대로 보완한 것이다. Kenneth Luongo, "Making the nuclear security summit matter: an agenda for action," *Arms Control Today*, January/February 2010, <www.armscontrol.org/print/4058>.

12. "방사선"(radiation)이란 원자핵에서 분리되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α 선, β 선, γ 선 등을 말한다. "방사선원"(radiation isotope)은 화학적 원소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방사성물질"(radioactive material)은 일반적으로 핵물질과 방사선원을 함께 표현하는 말이다. 방사능이란 방사선의 세기와 크기를 말하는데, "방사성물질"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13. 테넷 당시 CIA 국장의 관련 발언 원문은 다음과 같다. "And what we've learned continues to validate my deepest concern: that this enemy [al-Qa'ida] remains intent on obtaining, and using, catastrophic weapons." "Over the last year, we've also seen an increase in the threat of more sophisticated CBRN. For this reason we take very seriously the threat of a CBRN attack. Extremists have widely disseminated assembly instructions for an improvised chemical weapon using common materials that could cause a large numbers of casualties in a crowded, enclosed area. Although gaps in our understanding remain, we see al-Qa'ida's program to produce anthrax as one of the most immediate terrorist CBRN threats we are likely to face. Al-Qa'ida continues to pursue its strategic goal of obtaining a nuclear capability. It remains interested in dirty bombs. Terrorist documents contain accurate views of how such weapons would be used." George Tenet, *Testimony before the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February 24, 2004, pp. 1, 5, <www.intelligence.senate.gov/040224/tenet.pdf>.

위협평가에서 알케에다를 비롯한 테러집단이 “CBRN 무기와 물질”(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r Weapons and Materials)을 확보하려 한다면서 일부 화학·방사능 물질과 초보적인 무기설계도는 쉽게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테러집단이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에 관련된 물질과 기술에 접근할 가능성을 국제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함께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¹⁴ 게이츠 국방장관은 2008년 10월 28일 카바네기 국제평화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국가로부터 테러집단으로 무기가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9/11 이후 테러리스트와 이들을 지원한 국가 사이의 구분이 없어졌다고 강조하고, 미국은 지난 수 년간 자국과 동맹국에 대한 WMD 공격에 대해 “압도적인 힘”(overwhelming force)으로 대응할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해왔다고 주장했다.¹⁵

¹⁴. 관련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l-Qa’ida and other terrorist groups are attempting to acquire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r weapons and materials (CBRN). We assess al-Qa’ida will continue to try to acquire and employ these weapons and materials; some chemical and radiological materials and crude weapons designs are easily accessible, in our judgment.” “We are especially concerned about the potential for terrorists to gain access to WMD-related materials or technology. Many countri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are these concerns. Therefore we are working closely with other elements of the US Government to enhance the safety and security of nuclear weapons and fissile material and the detection of WMD materials.” J. Michael McConnell, *Testimony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February 27, 2008, pp. 5, 10, <www.fas.org/irp/congress/2008_hr/022708mccconnell.pdf>.

¹⁵. 게이츠 국방장관의 발언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also still face the problem of weapons passing from nation states into the hands of terrorists. After September 11th, the president announced that we would make no distinction between terrorists and the states that sponsor or harbor them. Indeed, the United States has made it clear for many years that it reserves the right to respond with overwhelming force to the us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our people, our forces and our friends and allies. Today we also make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will hold any state, terrorist

I
II
III
IV
V
VI
VII

‘9/11 위원회’는 9/11 사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2004년 7월 2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알카에다가 최소한 10년 동안 WMD를 확보하거나 제조하려고 했으며 미국이 주요 목표였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가 WMD 확산방지를 위해서 반확산 노력의 강화, PSI 확대 및 “협력위협감소”(Cooperative Threat Reduction: CTR)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¹⁶ 9/11 위원회의 제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한 프로젝트는 2005년 12월 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부가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제안이 대통령과 의회의 가장 큰 국가안보 관심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D” 등급을 매겼다.¹⁷

역대 고위 관리가 이사로 있는 “안전한 미국을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a Secure America: PSA)은 9/11 위원회의 권고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2008년도 자체평가에서 핵·화학·세균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대해서 각각, “C”, “B-”, “C-” 등급의 점수를 주었다.¹⁸

group or other non-state actor or individual fully accountable for supporting or enabling terrorist efforts to obtain or us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hether by facilitating, financing or providing expertise or safe haven for such efforts.” Robert Gates, *Statement at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Washington, D.C., October 28, 2008, p. 7, <www.carnegieendowment.org/files/1028_transcrip_gates_checked.pdf>.

¹⁶- *The 9/11 Commission Report*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4), p. 381.

¹⁷- *Final Report on 9/11 Commission Recommendations*, 9/11 Public Discourse Project, December 5, 2005, p. 4. <www.cbsnews.com/htdocs/pdf/911reportcard.pdf>.

¹⁸- Partnership for a Secure America, *WMD Report Card: Evaluating U.S. Policies to Prevent Nuclear, Chemical, & Biological Terrorism Since 2005*, p. 2, <www.psaonline.org/downloads/ReportCard%208-25-08.pdf>.

2007년의 9/11 위원회 법안(P.L. 110-53)에 의거하여 WMD 확산과 테러 방지를 위한 미국의 활동과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해서 구성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테러 방지를 위한 위원회’는 2008년 12월 부시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WMD 테러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정책을 제안했다.¹⁹ 먼저, WMD의 확산은 더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WMD를 사용하거나 이전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이들 무기의 관리 소홀과 테러집단에 의한 탈취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빈 라덴이 WMD 확보를 “종교적 의무”(religious duty)로 간주하고 또 하나의 “히로시마”를 자행하려 한다고 보고되었다고 주장했다.²⁰ 아울러 전세계가 단호하고 긴급하게 행동에 나서지 않는 한 2013년까지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테러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²¹

이 보고서는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의 필요성과 관련 정책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무기급 핵물질이 테러집단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당장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시급성을 강조하는 의견에 동참함.²²
-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불법이전 방지 및 관련 문화의 개발을 위한 “세계핵테러방지구상”(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GICNT)이 다음과 같이 강화되어야 함: ① 민수용

¹⁹- Bot Graham and Jim Talent, et. al., *World at Risk: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n the Prevention of WMD Proliferation and Terrorism* (New York: Vintage Books, December 2008), <www.preventwmd.org/report>.

²⁰- *Ibid.*, pp. xi~xii.

²¹- *Ibid.*, p. xv.

²²- 관련 원문은 다음과 같다. “our Commission joins the calls made by many others before us emphasizing the urgency of securing nuclear materials useful for weapons?right now, before they fall into the hands of terrorists.” *Ibid.*, p. 18.

I
II
III
IV
V
VI
VII

HEU의 저장과 사용을 근절함, ② 빠른 시일 내에 GICNT 참가국의 무기급 핵물질을 관리함, ③ GICNT 참가국의 유엔안보리 결의안 1540 이행을 지원함, ④ 핵감식과 같은 핵심 영역에서 국제적인 능력을 축적함.²³

-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확보해야 하며, 안보리결의안 1540호에 의거해서 각국은 WMD와 운반수단의 국가통제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관련 물질을 적절히 관리해야 함.²⁴
-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CPPNM)과 “핵물질과 원자력 시설의 방호에 관한 지침”(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즉 INFCIRC/225가 핵안보와 물리적 방호 조치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에 중요하다고 간주하고, 국제적 기준이 현재 미국이 군 기지에 대해 취하는 조치만큼 엄격해야 함.²⁵

한편, 윌리엄 페리와 제임스 슬레진저 두 전직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해서 2009년에 미 평화연구소가 발간한 ‘미국의 전략적 태세’ 보고서도 핵무기 확산 방지와 핵테러 방지는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핵확산 방지에 실패하면 핵테러의 직접적인 위협이 높아진다고 진단하고, 더 강력한 국제협력을 통해서 핵테러 위협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²⁶ 아울러 핵물질과 기술 및 전문지식이 통제되지 않고 유출

²³- *Ibid.*, p. 51.

²⁴- *Ibid.*, p. 54.

²⁵- *Ibid.*, p. 55.

되는 경우 핵확산을 가속화시키고 핵테러의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진단했다.²⁷

오바마 대통령의 프라하 연설은 핵테러 위협에 대한 자신과 국민들의 이러한 우려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바마는 이 연설에서 핵물질 밀거래와 핵비확산체제의 약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구매, 제조 혹은 훔치기로 걱정했다”고 밝혔다.²⁸ 그리고 테러집단이 핵을 갖지 않도록 핵물질과 기술의 유통을 차단하고 관련 국제노력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핵안보정상회의를 주최하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오바마는 2009년 7월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에서 2010년 3월에 이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고,²⁹ 같은 해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2010년 4월로 그 시기를 조정해서 회의를 열겠다고 제안했다. 유엔총회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단 한 개의 핵무기도 극단주의자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각국의 핵물질 관리책임을 재확인하고, 핵물질의 밀매와 도

²⁶. William Perry and James R. Schlesinger, et al., *America's Strategic Posture: The Final Report of the Congressional Commission on the Strategic Posture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Washington, DC, May 6, 2009), pp. x, xiii.

²⁷. *Ibid.*, p. 97.

²⁸. 관련된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 a strange turn of history, the threat of global nuclear war has gone down, but the risk of a nuclear attack has gone up. More nations have acquired these weapons. Testing has continued. Black market trade in nuclear secrets and nuclear materials abound. The technology to build a bomb has spread. Terrorists are determined to buy, build or steal one. Our efforts to contain these dangers are centered on a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but as more people and nations break the rules, we could reach the point where the center cannot hold.” *Remarks by President Barack Obama*, Hradcany Square, Prague, Czech Republic.

²⁹. “Obama plans nuclear security summit,” *Global Security Newswire*, July 9, 2009, <gsn.nti.org>.

I
II
III
IV
V
VI
VII

난을 막기 위한 제도와 구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³⁰ 백악관은 2009년 9월 24일 핵확산이 국제평화의 위협이고 NPT가 핵비확산체제의 초석임을 강조하며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1887호의 중요성을 평가하면서 2010년에 열릴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서 4년 안에 취약한 핵무기 관련 물질의 통제를 강화해서 이런 물질이 테러집단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³¹

핵무기확산금지조약, 즉 NPT 발효 40주년을 기념해서 2010년 3월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의 목표가 앞으로 4년 내에 관리가 부실한 핵물질을 안전하게 통제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³² 오바마 대통령이 프라하 연설에서 밝힌 다음과 같은

30. 원문은 다음과 같다. “I will also host a summit next April that reaffirms each nation’s responsibility to secure nuclear material on its territory, and to help those who can’t -- because we must never allow a single nuclear device to fall into the hands of a violent extremist. And we will work to strengthen the institutions and initiatives that combat nuclear smuggling and theft.” *Remarks by The President to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31. 원문은 다음과 같다. “Better security for nuclear weapons materials to prevent terrorists from acquiring materials essential to make a bomb, including through the convening of a Nuclear Security Summit in 2010, locking down vulnerable nuclear weapons materials in four years, a goal originally proposed by President Obama, minimizing the civil use of highly enriched uranium to the extent feasible, and encouraging the sharing of best practices as a practical way to strengthen nuclear security and the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and the G-8 Global Partnership.” *Fact Sheet o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ummit on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Disarmament UNSC Resolution 1887*,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September 24, 2009,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fact-sheet-united-nations-security-council-summit-nuclear-nonproliferation-and-nucl>>.

32. 원문은 다음과 같다. “To prevent proliferation, we will build on the historic resolution that we achieved at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last September by bringing together more than 40 nations at our Nuclear Security Summit next month with the goal of securing the world’s vulnerable nuclear materials in four years.” *Statement by President Obama on the 40th*

네 가지 정책제안은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지침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³³

1. 4년 내에 관리가 부실한 핵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화함.
2. 민감한 핵물질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러시아를 비롯한 관련국간 협력을 강화함.
3. 핵물질과 기술의 암시장을 분쇄하고 밀거래를 탐지·차단하며 거래를 막기 위해 금융수단을 동원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함.
4.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등 기존의 임시적 협력체계를 지속가능한 국제기구로 전환함.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핵안보의 목표가 핵테러 방지라는 점을 다음과 같이 재차 강조했다. 첫째, 오바마 대통령은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집단이

Anniversary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March 5, 2010, <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statement-president-obama-40th-anniversary-nuclear-nonproliferation-treaty>.

³³. 관련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So today I am announcing a new international effort to secure all vulnerable nuclear material around the world within four years. We will set new standards, expand our cooperation with Russia, pursue new partnerships to lock down these sensitive materials. We must also build on our efforts to break up black markets, detect and intercept materials in transit, and use financial tools to disrupt this dangerous trade. Because this threat will be lasting, we should come together to turn efforts such as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and the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into durable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we should start by having a Global Summit on Nuclear Security that the United States will host within the next year.” *Remarks by President Barack Obama, Hradcany Square, Prague, Czech Republic.*

핵무기용 핵물질을 확보하려고 했고, 이들이 만약 성공한다면 반드시 사용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이는 엄청난 인명을 앗아가고 세계 평화와 안정에 큰 타격을 가하는 전세계적인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요약하면, 핵테러의 위험은 지구적인 평화, 우리의 집단 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³⁴

둘째, 미 백악관은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설명 자료에서 현재 군수용 및 민간용을 포함해서 모두 2,000톤 이상의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이 수 십 개 나라에 산재에 있고, 이들 물질이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건수도 알려진 것만 18건에 달한다고 밝히고, “어느 나라든지 목표가 될 수 있고, 모든 나라들이 그 영향을 받을 것이다”(Any country could be a target, and all countries would feel the effects)라는 말로 핵테러 위험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³⁵

셋째, 오바마 행정부는 핵안보정상회의 직전에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핵확산과 핵테러 예방을 핵전략의 첫 번째 목표라고 선언하고, “편의시설, 재정, 전문지식, 은신처 제공을 통해서 테러범들의 WMD 사용·획득을 지원하거나 도와주는 국가, 테러집단, 기타 비국가 행위자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³⁶

³⁴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 short, it is increasingly clear that the danger of nuclear terrorism is one of the greatest threats to global security — to our collective security.” *Remarks by the President at the Opening Plenary Session of the Nuclear Security Summit*, Washington Convention Center,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April 13, 2010, <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remarks-president-opening-plenary-session-nuclear-security-summit>.

³⁵ *Key Facts about the National Security Summit*,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April 13, 2010, <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key-facts-about-nuclear-security-summit>.

이와 관련, 로즈(Ben Rhodes)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핵물질이 국가에서 테러집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미국이 직면한 “1급 위협”(first-order threat)이라고 지적했다.³⁷ 그는 정상회담의 분명한 초점은 “가장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공격”(highest-consequence attack)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미국 국민과 세계안보에 9/11 테러에 비해 몇 배나 더 큰 피해를 주는 사태를 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³⁸

넷째, 2010년 5월 발표된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 역시 핵테러 위협에 대한 미국 국민과 행정부의 엄중한 시각을 다음과 같이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 국민들에게 대량살상무기, 특히 포악한 극단 주의자들에 의한 핵무기 획득 시도의 위협과 이들 무기의 확산보다 더 큰 위협은 없다.”³⁹

36. 원문은 다음과 같다. “Renewing the U.S. commitment to hold fully accountable any state, terrorist group, or other non-state actor that supports or enables terrorist efforts to obtain or us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hether by facilitating, financing, or providing expertise or safe haven for such efforts.”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April 2010), p. vii.

37. 원문은 다음과 같다. “So this is an issue that the United States has brought into its own nuclear policy, recognizing that the passage of materials from a state to a terrorist group is really a first-order threat that we face.” Press Briefing by Ben Rhodes,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for Strategic Communications*; Gary Samore, *Senior White House Coordinator for WMD Counterterrorism and Arms Control*; and Laura Holgate, *Senior Director for WMD Terrorism and Threat Reduction*,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Washington Convention Center, Washington, D.C., April 13, 2010, <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press-briefing-ben-rhodes-deputy-national-security-advisor-strategic-communications>.

38. 원문은 다음과 같다. “what this summit was focused on in a very clear way was securing those materials that could lead to the highest-consequence attack so we’re not dealing with a 9/11 that is by many more orders of magnitude devastating to our people or to global security.” *Ibid.*

2. 테러 방지를 위한 유엔차원의 노력

전세계적으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적인 협약과 규범이 있다.⁴⁰ 국제테러를 없애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제46차 유엔총회 결의안(A/RES/46/51)이 채택된 1991년 12월 9일 당시에도 9개의 대테러 관련 국제협약이 존재했었고,⁴¹ 이후에는 유엔 차원에서 국제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유엔총회와 안보리에서 채택한 일련의 결의안들은 아래에서 소개하는 바와 같이, 테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동시에 핵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촉진하는 준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제46차 유엔총회 결의안은 테러를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법에 따라서 단호한 정책과 효과적인 방안이 취해져야 한다는 확신 하에, 모든 종류의 테러를 범죄적이고 부당한 행위로 규탄하면서 모든 국가가 반테러에 관한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촉구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다.

- 자국 영토 내에서 테러를 준비하거나 조직하는 행위를 예방함.
- 테러범의 체포, 조사 및 인도를 보장함.

39.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re is no greater threat to the American people tha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articularly the danger posed by the pursuit of nuclear weapons by violent extremists and their proliferation to additional states.”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May 2010), p. 4, <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rss.../national_security_strategy.pdf>.

40. 2010년 현재 관련 국제협약만 해도 13개에 달한다. Igor Khripunov, “Legal framework for nuclear security and counterterrorism,” a paper presented at the workshop on *Nuclear Security: A Road to the 2012 Summit*, Seoul, South Korea, August 30, 2010.

41. UN General Assembly, *Measures to Eliminate International Terrorism*, UN Doc. A/RES/46/51 (December 9, 1991).

- 이를 위한 양자, 지역 및 다자 차원의 조약을 체결함.
-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련 정보를 공유함.
- 기존의 국제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함.

둘째, 1993년 12월 9일 열린 제48차 유엔총회 제73차 전체회의에서는 제6위원회가 제시한 테러근절방안에⁴² 대해 논의하고, 유엔총회가 모든 테러활동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아들였다.⁴³ 구체적으로 유엔총회는 사무총장에게 총회결의안 46/51, 제6위원회의 보고사항, 개별국가의 제안에 담긴 다음과 같은 관련 방안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지시했다: ① 테러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② 유엔과 대테러 관련 특별기구의 역할 강화 방안, ③ 제6위원회가 제기한 문제 등.

셋째, 1995년 2월 17일 제49차 유엔총회는 제6위원회의 보고서(A/49/743)에 대해서 결의안을 채택했다.⁴⁴ 이 결의안은 부록에 수록된 “국제테러 근절을 위한 방안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Measures to Eliminate International Terrorism)을 승인하고,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이 선언의 승인 사실을 유엔 회원국, 안보리, 국제사법재판소 및 관련 기구에 알리도록 하며, 테러 근절을 위한 국가 및 국제 차원의 모든 적절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부록에 수록된 선언은 다음과

⁴² UN General Assembly, *Measures to Eliminate International Terrorism: Report of the Sixth Committee*, UN Doc. A/48/609 (December 6, 1993).

⁴³ *The 73rd Plenary Meeting*, The 48th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December 9, 1993.

⁴⁴ UN General Assembly, *Measures to Eliminate International Terrorism*, UN Doc. A/RES/49/60 (February 17, 1995).

I
II
III
IV
V
VI
VII

같은 방안을 담고 있다.

- “테러에 관련된 모든 행동과 방법 및 행위”(all acts, methods, and practices of terrorism)를 비난함.
- 테러에 관련된 모든 행동과 방법 및 행위는 유엔의 원칙과 목적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
- 테러를 야기하기 위한 범죄적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음.
- 각국은 유엔헌장과 기타 국제법에 따라서 테러의 조직, 유발, 지원 및 가담을 삼가야 함.
- 테러행위에 대한 조직, 촉진, 자금지원, 고무 및 관용을 삼가야 함.
- 테러가담자의 체포, 조사 및 인도를 보장해야 함.
- 이를 위한 양자, 지역 및 다자 차원의 조약을 체결함.
-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련 정보를 공유함.
- 테러 관련 기존 국제협약에 신속하게 가입하고, 기존 국제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함.
- 정치적 망명자를 받아들이기 전에 테러 관련 여부를 조사함.
- 테러 예방과 근절을 위한 기존 국제법의 범위를 검토해서 테러의 모든 면을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인 법체계를 구축함.
- 유엔이 테러의 근절과 대테러 방안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함.
- 유엔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 ① 국제테러에 관련된 기존의 양자, 지역 및 다자차원의 협약을 취함, ② 각국의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정리함, ③ 테러에 관련된 기존의 국제법적 수단을 분석적으로 검토하여 각국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지원함, ④ 유엔 차원에서 대테러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고 훈련과정을 개설하는 문제를 검토함.

넷째, 1999년 10월 19일 제4053차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 1269호는 동기와 상관없이 모든 테러를 규탄하고 결의안 A/RES/49/60 등 관련 유엔총회 결의안을 상기하면서 각국 및 유엔 차원에서 테러와의 싸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⁴⁵ 아울러 ‘테러에 관련된 모든 행동과 방법 및 행위’를 범죄적이고 부당한 것이라고 규탄하면서 모든 국가들이 대테러 관련 국제협약을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는데 유엔의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각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다.

- 테러를 예방·근절하고 테러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양자 및 다자간 협정을 통해 상호 협력함.
- 자국의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테러 준비와 자금지원을 예방·근절함.
- 테러를 계획·자행하거나 자금을 지원한 사람들에게 피난처 제공을 거부함.
- 난민지위를 부여하기 전에 적절한 국내·국제 법규에 따라서 테러가담 여부를 조사함.
- 테러예방을 위해서 행정적, 법적 문제에 대해 협력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함.

테러행위를 규탄하고 근절하기 위한 이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테러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은 9/11 이후 고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냉전 종식 이후 높아진 WMD 확산에 대한 우려가 테러위협과

⁴⁵-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269* (1999), UN Doc. S/RES/1269, October 19, 1999.

I
II
III
IV
V
VI
VII

결합되어 ‘핵테러’ 혹은 ‘WMD 테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상황인식 하에서 테러를 척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첫째, 9/11 테러 다음날인 2001년 9월 12일 유엔안보리는 제4370차 회의에서 결의안 1368호를 채택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⁴⁶

-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테러에 의한 국제평화와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로 결의하고, 유엔헌장에 의거한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함.
- 9/11 테러를 가장 강력하게 규탄하며, 희생자와 가족에게 애도를 표함.
- 이번 테러를 조직·후원하고 자행한 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는데 모든 국가가 긴급하게 협력할 것을 촉구함.
- 안보리결의안 1269호 등 관련 결의안과 반테러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테러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함.
- 9/11 테러에 대응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모든 형태의 테러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언함.

둘째, 약 2주 뒤인 9월 28일 제4385차 유엔안보리 회의에서는 결의안 1373호를 구속력있는 문건으로 채택했다.⁴⁷ 9/11 테러행위를 비난하고 어떠한 형태의 테러행위도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라고 규정한 이 결의안은 유엔헌장에서 인정하고 안보리결의안 1368호에서 확

⁴⁶-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68* (2001), UN Doc. S/RES/1368 (September 12, 2001).

⁴⁷-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73* (2001), UN Doc. S/RES/1373 (September 28, 2001).

인한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을 재확인하고 모든 유엔회원국들이 테러 행위를 예방하고 분쇄하는데 긴급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유엔헌장 제VII장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회원국들에게 부과했다.

- 테러자금 지원 예방·근절, 테러를 위한 의도적인 자금제공과 모금 불법화, 테러에 가담한 자의 재산 동결, 자국 국민이나 단체의 테러자금 지원 금지,
- 테러에 관련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적극적·소극적 지원 규제, 정보교환을 통해 테러 가능성에 대한 조기경보 제공, 테러를 기획·자금지원·자행한 인사에 대한 피난처 제공 거부, 자국 내에서 자금지원·계획·실행 등 테러관련 일체의 행위 금지, 테러를 기획·지원·자행한 인사에 대한 처벌 보장, 테러가담자 조사 및 처벌에 관한 최대한의 지원 제공, 테러범과 테러집단의 국경선 월경 통제,
- 테러범과 테러네트워크의 활동에 관련된 정보교환 촉진, 테러예방을 위한 행정적·법적 사항에 대한 정보교환, 양자·다자 차원에서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강화, 1999년 12월 9일 체결된 “테러자금지원억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ICSFT) 등 관련 국제협약 가입, 안보리결의안 1269호와 1368호 등 관련 국제협약 준수, 정치적 망명자나 난민이 테러에 가담한 적이 없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테러와 초국가 범죄 사이의 긴밀한 연계성에 주목하고 이러한 위협에 대한 범세계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개별국가, 지역 및 국제적 차원의 노력을 조율.

I
II
III
IV
V
VI
VII

셋째, 2004년 4월 28일 제4956차 유엔안보리 회의에서는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에 의한 WMD 확산 위협에 초점을 맞춘 결의안 1540호가 구속력있는 문건으로 채택되었다.⁴⁸ 이 결의안은 핵·화학·세균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행동을 취하겠다는 결의를 확인하고 1992년 1월 31일자 유엔안보리 정상선언의⁴⁹ 내용을 재확인했다. 안보리결의안 1267호에 의거해서 설립된 위원회가 작성한 유엔목록에서 파악된 비국가행위자가 WMD와 운반수단을 획득·개발·거래·사용할 위험성과 이들 무기의 불법거래 위협을 우려하면서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지역·국제적 차원의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유엔헌장 제VII장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회원국들에게 부과했다.

- 비국가행위자의 WMD 및 운반수단 개발·획득·제조·보유·운송·이전 및 사용에 대한 지원 금지 및 이를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국내 절차 마련,
- WMD와 운반수단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국내통제 실시: ① 계량과 관리 절차 마련, ② 물리적 방호절차 개발, ③ 불법 거래를 탐지·억지·예방·분쇄하기 위한 국경통제 및 법집행 절차 강구, ④ 적절한 수출통제 및 환적 절차 수립,
- 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조약의 범세계적인 이행을 촉진, 이들 조약의 준수를 위한 국내절차의 채택, IAEA·OPCW 등 관련

⁴⁸.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2004), UN Doc. S/RES/1540 (April 28, 2004).

⁴⁹. UN Security Council, *Note by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UN Doc. S/23500 (January 31, 1992).

국제기구에서 협력 강화, 관련 법규를 산업계와 일반대중에게 적절하게 설명 등.

넷째, 2009년 9월 24일 제6191차 유엔안보리 회의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을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내고 더 안전한 세계를 추구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안보리결의안 1887호를 채택했다.⁵⁰ 이 결의안은 WMD와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임을 재확인하고 NPT가 핵비확산체제의 초석임을 강조하면서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CPPNM)과 2005년 수정안 및 “핵테러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ICSANT, NTC)을 지지했다. 아울러 “WMD 확산방지를 위한 글로벌파트너십 구상”(Global Partnership Against the Spread of Weapons and Materials of Mass Destruction), 즉 G-8 글로벌파트너십 구상과 “세계핵테러방지 구상”(GICNT)에 진전이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모든 국가들이 안보리결의안 1540호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했다.

- NPT의 완전한 이행, NPT상의 혜택과 의무의 연계성 강조, NPT 미가입국의 가입 촉구, NPT VI조 상의 핵군축 의무 이행,
- “핵실험전면금지조약”(CTBT) 발효와 “무기급 핵물질생산 금지조약”(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FMCT) 협상 촉구,
- 안보리결의안 984호에⁵¹ 의거한 핵국의 비핵국에 대한 소극적 안

⁵⁰.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87* (2009), UN Doc. S/RES/1887 (September 24, 2009).

⁵¹.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984* (1995), UN Doc. S/RES/984 (April 11, 1995).

I
II
III
IV
V
VI
VII

전보장 약속 준수,

- 확산 위험성을 줄이고 국제적인 “보장조치, 안보 및 안전” (Safeguards, Security, and Safety)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
- 핵연료주기 관련 민감 물품과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시행 및 핵연료주기에 대한 IAEA의 다자접근 장려,
- IAEA 보장조치의 중요성 강조, 각국의 포괄적 보장조치협정 및 추가의정서 서명·발효 촉구, IAEA에 필요한 자원과 권한 제공 확인,
- NPT 회원국의 탈퇴 선언에 즉각 대처하고, 탈퇴국가가 NPT 회원국으로서 위반을 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에 있음을 확인,
- 핵물질과 기술 수입국이 탈퇴 혹은 NPT를 위반하는 경우 수출국은 수출품을 몰수할 권한이 있음을 수출조건으로 부가하도록 권고,
- 수입국의 IAEA 추가의정서 서명을 핵수출의 조건으로 삼도록 권고,
- 수입국이 NPT에서 탈퇴하더라도 이전에 수입한 핵물질과 장비에 대한 IAEA 사찰을 수용하는 것을 수출조건으로 요구하도록 촉구,
-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과 2005년 수정안 및 “핵테러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의 범세계적 이행을 촉구,
- 안보리결의안 1540호의 전면적 이행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결의안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자발적 기금의 설치와 기금의 효과적 운용에 대한 권고를 환영,
- 핵안전과 핵안보를 개선하기 위한 정보교환과 교류 및 핵테러 위

- 힘을 줄이기 위한 핵안보 기준의 향상을 촉구,
- 민수용 목적의 고농축우라늄 사용을 줄이고,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시설로 전환,
 - 핵물질 밀거래를 “탐지, 억지, 분쇄”(detect, deter, and disrupt) 할 수 있는 국가능력을 배양하고 국제협력을 강화,
 - 확산에 사용되는 자금과 선적을 금지하고 수출통제를 강화하며 민감한 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가적 방안을 마련.

3. 핵테러 방지에 관련된 기존 국제규범과 협약

핵테러를 막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존의 국제규범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 규범이 개별적으로 산재해 있고, 참여국의 수도 많지 않으며, 철저한 이행도 보장되지 못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 본 절에서는 핵테러 방지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존의 규범과 협약 12가지를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⁵²

첫째, “핵테러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ICSANT, NTC)이다. 1994년 12월 유엔총회에서 “국제테러 근절조치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Measures to Eliminate International Terrorism)이 채택된 이후 유엔 산하 특별위원회에서의 토의를 거쳐 2005년 4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구속력있는 문건이다.⁵³ 2005년 9월 서명을 위해 개방된 이후 2010년 4월 현재 115개국(22개국의 비준)을 거

⁵² 본 절에서 제시한 사례의 대부분은 다음 문건을 토대로 보완·정리한 것이다. 『2010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요』(서울: 외교통상부, 2010년 4월); *Nuclear Security Work Plan Reference Document*,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April 13, 2010, <www.whitehouse.gov>.

⁵³ UN General Assembly,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UN Doc. A/59/766. (April 4, 2005).

I
II
III
IV
V
VI
VII

쳐 2007년 7월 효력이 발생했다. 2011년 3월 현재 60개국이 비준절차를 마쳤다. 제1차 정상회의에 참석한 47개국(미국 + 46개 초청국) 가운데 17개 나라가 비준하고, 미국과 한국 등 25개 나라가 서명만 했으며, 나머지 5개 국가는 서명도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2005년 9월에 서명했으며, 현재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핵테러억제협약은 모든 형태의 테러행위가 세계적으로 점증하는 현실을 깊이 우려하고 핵테러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 “방사성물질”(radioactive material)을 즉각적인 분해과정을 거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핵종을 가진 핵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정의함.⁵⁴
- “핵물질”(nuclear material)은 플루토늄-238(Pu-238)이 80%가 넘지 않는 플루토늄, 우라늄-233(U-233), U-235 혹은 U-233의 농축물질, 원광 또는 원광찌꺼기의 형태가 아닌 천연상태에서 동위원소 혼합물을 함유하는 우라늄, 전술한 물질을 하나 또는 그 이상 함유하는 기타 물질로 정의함.⁵⁵

⁵⁴. 원문은 다음과 같다. “nuclear material and other radioactive substances which contain nuclides which undergo spontaneous disintegration (a process accompanied by emission of one or more types of ionizing radiation, such as alpha-, beta-, neutron particles and gamma rays) and which may, owing to their radiological or fissile properties, cause death, serious bodily injury or substantial damage to property or to the environment.”

⁵⁵. 원문은 다음과 같다. “plutonium, except that with isotopic concentration exceeding 80 per cent in plutonium-238; uranium-233; uranium enriched in the isotopes 235 or 233; uranium containing the mixture of isotopes as occurring in nature other than in the form of ore or ore residue; or any material containing one or more of the foregoing; Whereby “uranium enriched in the isotope 235 or 233” means uranium containing the isotope 235 or 233

- “장치”(device)는 핵장치, 인체와 환경에 해를 끼치는 방사성물질 살포 혹은 방사선 방출 장치임.⁵⁶
- 다음 행위를 한 사람은 협약의 위반자임: 인체와 환경에 해를 끼칠 목적으로 방사성물질이나 장치를 보유하거나 이런 물질과 장치를 사용, 이러한 행위를 하겠다고 위협하거나 협박을 통해 불법적으로 이런 물질과 장비를 취득하려는 행위.
- 각국은 상기 행위를 국내법에 따라 형사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해야 함.
- 각국은 이러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있어 국내법을 제정하는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각국은 상기 범죄의 행위자를 처벌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방하거나 인도해야 함.

둘째, 1980년에 체결된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CPPNM)이다. 핵물질의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서 IAEA가 제안한 것으로 1980년에 채택되고(INFCIRC/274) 1987년에 발효된 구속력 있는 문서이다. 2005년 7월에 협약을 개정해서 물리적 방호의 범위를 기존의 ‘국가간에 운반되는 핵물질’에서 ‘국내의 핵물질과 원자력 시설’로 확대했다. 따라서 평화적 목적으로 국내에서 사용·저장·운송되는 모든 핵물질과

or both in an amount such that the abundance ratio of the sum of these isotopes to the isotope 238 is greater than the ratio of the isotope 235 to the isotope 238 occurring in nature.

⁵⁶.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Any nuclear explosive device; or (b) Any radioactive material dispersal or radiation-emitting device which may, owing to its radiological properties, cause death, serious bodily injury or substantial damage to property or the environment.”

I
II
III
IV
V
VI
VII

관련 원자력시설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이 각국의 의무로 부과되었다. 아울러 탈취 혹은 밀매된 핵물질의 소재를 파악하고 회수하는데 있어서 국가 간 협력을 제고했다. 본 협약에는 142개 나라가 가입했지만, 2005년에 규정을 강화한 수정안에는 34개국만 비준한 상태이다 (수정안의 발효 요건은 142국의 2/3 기준).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가한 47개국 가운데는 주최국인 미국을 포함하여 21개 나라가 이 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본 협약을 1982년 4월에 비준했으나 2005년 개정안은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전에 비준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셋째,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방호에 관한 지침”(Nuclear Security Recommendations on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인데, 1975년 IAEA가 INFCIRC/225로 발간한 문건이다. 구속력은 없는 권고문서로서 그간 네 차례(1977, 1989, 1993, 1999)의 검토회의를 거쳐 내용의 일부를 개정했다. 제4차 개정안은 위협평가에 의한 방호체계를 수립하고 인·허가 과정을 강화하며 방호규정과 규제기관을 국내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새로운 개정안 마련을 위한 검토회의가 2008년 2월부터 시작되어 2011년 제5차 개정안이 IAEA 핵안보 문서 13호로 채택되었다.⁵⁷ 제5차 개정안은 “물리적 방호의 12가지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운송과정에서의 도난 및 사보타지 등에 대한 방호요건을 강화했다.

넷째, IAEA가 발간하는 “핵안보 시리즈”(Nuclear Security Series)이다. IAEA는 2006년부터 핵물질과 기타 방사성물질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절도, 사보타지, 무허가 접근, 불법 이전 및 기타 해로운 행위를 예

⁵⁷- *Nuclear Security Recommendations on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INFCIRC/225/Revision 5).

방·탐지·대응하는데 관한 핵안보 가이드라인을 시리즈 형태로 발간해 오고 있는데, 역시 구속력은 없는 권고문서이다. 2011년 현재 13개의 문서가 발간되었고, 8개의 문서가 준비 중에 있다. 핵안보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 “원칙문서”(Nuclear Security Fundamentals): 핵안보의 목적, 개념 및 원칙을 담고 있으며 권고사항의 토대를 이룸.
- “권고문서”(Recommendations): 핵안보의 원칙문서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각국이 따라야 할 사항을 제시,
- “이행지침”(Implementing Guide): 권고사항을 구체화하고 이행 방안을 제시,
- “기술지침”(Technical Guidance): 구체적인 분야와 활동에 권고문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방안을 담은 참고 매뉴얼, 핵안보 훈련과정에 사용되는 훈련교본 등.

다섯째, “IAEA의 위협대응설계기준 개발·사용·유지 지침”(IAEA Implementing Guide on Development, Use and Maintenance of the Design Basis Threat)이다. “위협대응설계기준”(Design Based Threat: DBT)이란 핵안보에 관련된 개념으로서 원자력시설에 보관된 핵물질을 탈취하거나 시설 자체를 위해하려는 외부침입자나 시설 내부자의 능력과 특성을 말한다. DBT가 설정되어야만 예상되는 위협 수준에 맞는 물리적 방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DBT는 위협에 관한 정보와 기타 자료를 통해 형성되는데, 많은 나라들이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방호를 위해 DBT 개념을 적용해왔다.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방호에 관한 지침”은 DBT의 설정 방법과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I
II
III
IV
V
VI
VII

여섯째,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이다. 2006년 7월 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추진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11월 13개 국가와 IAEA가 GICNT의 “원칙 선언문”(Statement of Principles: SOP)을 채택해서 공식 출범했다. 현재 82개 나라가 가입했고 4개 기구 (IAEA, EU, INTERPOL 및 UNODC)가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다. 핵테러 예방을 위한 정보 교환 등의 협력을 하지만 구속력은 없는 협의체이다.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된 47개 나라 가운데 31 개국이 GICNT에 참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5월 GICNT 원칙 선언문을 의장국인 미국과 러시아에 기탁하고 정식으로 가입했다. GICNT는 안보리결의안 1373호와 1540호,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2005년 개정안, 핵테러억제협약 등 기존 국제규범에서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핵테러에 대처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 추진원칙을 제시했다.⁵⁸

- 핵물질과 방사성물질의 계량, 통제 및 물리적 방호의 체계를 개발·개선,
- 민수용 원자력시설의 방호조치 강화,
- 국가탐지능력에 대한 연구개발 협력을 포함해서 핵물질과 방사성 물질의 불법거래를 탐지·근절하기 위한 능력 향상,
- 핵물질과 방사성물질의 추적, 몰수 및 안전한 관리능력 배양,
- 핵물질과 방사성물질을 구입하려는 테러범에게 은신처와 자금지원 제공 금지,
- 테러범과 테러를 지원한 자들에 대한 형사·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⁵⁸. *Statement of Principles, the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Bureau of International Security and Nonproliferation, U.S. Department of State, November 13, 2006, <www.state.gov/t/isn/c37071.htm>.

- 수 있는 적절한 법적, 제도적 장치 강구,
- 핵물질과 방사성물질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의 개발을 포함하여 이들 물질을 이용한 테러에 대응하고 테러의 결과를 약화시킬 수 있는 능력 배양,
- 핵테러 근절을 위한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정보보안을 강화.

일곱째, “대량살상무기와 물질의 확산방지를 위한 G-8 글로벌 파트너십”(G-8 Global Partnership Against the Spread of Weapons and Materials of Mass Destruction)이다. 2002년 6월 27일 캐나다의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출범한 WMD 확산 저지를 위한 G-8 차원의 노력이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구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의 비핵화를 위해 재정과 기술을 지원하는 “협력위협감소 프로그램”(Cooperative Threat Reduction Program)을 G-8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2001년부터 10년간 200억 불의 기금을 조성해서 구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의 WMD 폐기, 관련 과학기술자의 재취업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이 100억 불, 다른 나라들이 100억 불을 기여하기로 했는데, 2010년 4월 현재 190억 불이 모금되었다. G-8 글로벌 파트너십에 참가하는 나라는 모두 23개국이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주요 수혜대상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6월 미국에서 개최된 Sea Island G-8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식 회원국이 되었으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모두 370만 불을 다음과 같은 사업에 기여했다: ① 러시아의 퇴역 핵잠수함 해체, ②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시설 폐쇄, ③ 러시아의 원자력시설 물리적 방호 강화, ④ 우크라이나의 핵밀수 방지, ⑤ 아프가니스탄의 생물안보강화사업 등.

G-8 글로벌 파트너십은 2012년에 기한이 종료되므로 유효기간을

I
II
III
IV
V
VI
VII

연장하는 문제가 주요 쟁점이다. 이 구상에서 다루는 의제로는 WMD 비확산, 군축, 확산저지, 핵안보, 퇴역 핵잠수함 해체, 핵물질의 안전과 처리, 전직 무기과학자들의 직업전환 등이다. 산하의 워킹그룹이 관련 국제 활동을 조정하고 있다. 재원을 확충하고, 적용범위를 러시아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과제가 제기되어 있다. 2002년 6월 정상회담에서는 테러범과 은신처 제공자들이 WMD와 미사일 및 관련 기술·물자·장비를 개발·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 WMD와 미사일 및 관련 기술·물자·장비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각종 국제조약의 가입, 전면적 이행, 보편화 및 강화를 촉진,
- 이들의 생산, 사용, 저장 및 운송 과정에서 정확한 계량과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안의 개발·유지,
- 관련 시설에 적용되는 효과적인 물리적 방호조치를 개발,
- 이들의 불법 거래를 탐지, 억지,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경통제와 법집행 조치를 개발·유지,
- 이들 물질에 대한 효과적인 수출 및 환적 통제 조치를 개발·유지,
- 방어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무기급 핵물질의 처분, 화학무기 폐기, 위험한 세균의 보유 최소화 등.

여덟째, “방사성물질의 안전과 안보에 대한 행동지침”(Code of Conduct on the Safety and Security of Radioactive Material: Code of Conduct)이다.⁵⁹ 방사성물질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분열성이 뛰어나진 않지만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많아서 “방사능테

⁵⁹- *Code of Conduct on the Safety and Security of Radioactive Sources* (Vienna: IAEA, 2004).

리”(Radioactive Terror)에 사용될 위험이 있는 물질이다. 핵물질이 원자력 발전과 핵무기 제조공장 및 관련 연구시설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에, 방사성물질은 의학 및 산업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서 테러범에 의해 탈취되거나 불법적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이유에서 1988년 방사성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후 IAEA의 주도하에 2000년 최초의 행동지침이 만들어졌다. 9/11 테러 이후 방사능테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행동지침을 일부 개정했고, 개정된 지침이 2004년 IAEA의 정식문서로 발간되었다. 2005년에는 방사성물질의 수출입 통제 지침을 첨부한 문건이 IAEA 문서(INFCIRC/663)로 채택되었다.⁶⁰ 사람과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방사성물질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 분류 별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해한 행위에 전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방사성물질의 등록체제 구축, 수출입시의 사전신고와 허가에 대한 규정도 있다.

아홉째, “핵안보 계획”(Nuclear Security Plan)이다. IAEA가 2002년부터 세 차례로 나누어 실행하고 있는 4개년 핵안보 활동 계획이다. IAEA는 2002년부터 핵안보 분야에서 IAEA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포괄적으로 정의한 4개년 계획을 3차로 나누어 실행하고 있다. 제1차 핵안보 계획(2002~2005)은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 활동목표를 제시했다: ①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 ② 핵물질과 방사성물질 관련 유해행위 금지, ③ 핵물질 계량과 통제를 위한 국가체제 구축, ④ 핵물질 외에 기타 방사성물질에 대한 보안, ⑤ 원자력시설의

⁶⁰- *Code of Conduct on the Safety and Security of Radioactive Sources and the Supplementary Guidance on the Import and Export of Radioactive Sources*, INFCIRC/663 (Vienna: IAEA, December 29, 2005).

I
II
III
IV
V
VI
VII

취약성과 관련된 안전성 평가, ⑥ 핵 관련 유해행위에 대한 대응, ⑦ 국제협약과 지침 및 권고 등의 이행, ⑧ 국가 간의 정책조율과 정보관리. 제2차 핵안보 계획(2006~2009)에서는 국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우선 실천분야가 선정되었다: ① 핵안보의 규범 이행을 위한 자문 제공, ② 핵안보 관련 지침과 문서의 개발, ③ 핵안보 관련 수요 평가와 검토, ④ 핵안보 관련 권고사항의 이행 지원. 제3차 핵안보 계획(2010~2013)은 IAEA의 “통괄적 접근”(one house approach)를 증진한다는 전제 하에, 다음 네 가지 분야를 집중 추진분야로 선정했다: ① 핵안보 수요 평가와 정보의 비교·분석, ② 범세계적 핵안보 규범체계 강화, ③ 물리적 방호 서비스 제공, ④ 고농축우라늄 사용의 최소화 등 위협감소 및 안보개선 조치의 실시.

열째, “핵안보 기금”(Nuclear Security Fund)이다. 핵안보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설립하자는 취지에 따라 제1차 핵안보 계획과 함께 설립되었다. 현재 IAEA가 수행하는 핵안보 활동의 대부분은 이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기금은 100% 회원국의 자발적인 기여로 조성되고 있는데, 2002년에는 808만 불이 모금되었고 지금까지 최고 모금액은 2007년의 2,400여만 불이다. 회원국이 약속한 모금액을 제때에 내지 않거나 각종 조건을 부과해서 계획된 핵안보 활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에 10만 불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총 90만 불을 기여했다.

열한째, “확산방지구상”(PSI)이다.⁶¹ 확산방지구상은 2003년 5월 유 럽을 순방 중이던 부시 대통령이 대량살상무기와 전쟁을 승리로 이

⁶¹ 영국 정부는 2009년 7월 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PSI를 핵안보의 한 수단으로 보았다. Cabinet Office, *The Road to 2010: Addressing the Nuclear Question in the Twenty First Century*, Presented to Parliament by the Prime Minister, by Command of Her Majesty, July 2009, p. 26.

끝기 위해서 제기한 구상을 말한다. 부시 대통령은 2003년 5월 31일 폴란드 크라코(Krakow)의 한 성(Wawel Castle)에서 핵·화학·세균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범세계적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수단으로서 확산방지구상을 제안했다. 부시 대통령이 PSI에 관한 선언을 한 지 일주일도 안된 2003년 6월 3일, 당시 볼튼(John Bolton) 미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가 하원 국제관계위 청문회에서 PSI 개념을 구체화하는 증언을 했고, 같은 해 6월 12일에는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미국을 비롯한 11개국이 PSI 개념을 각국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첫 회의를 비밀리에 개최했다.⁶² 2003년 9월에는 영국, 미국, 일본, 호주 해군이 참여하는 첫 해상 나포 훈련이 호주 해역에서 실시되었고, 지중해와 아라비아 해역 등에서도 추가 훈련이 개최되었으며, 회원국도 계속 확대되어 나가는 추세에 있다. 2010년 4월 현재 95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북한의 반대를 염두에 두고 정식참가를 유보해 온 우리나라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 다음날인 2009년 5월 25일 정식 참가를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프라하 연설에서 PSI를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PSI는 북한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핵기술과 미사일을 중동 지역으로 수출해서 상당한 외화수입을 벌어들이는 등 그동안 PSI의 기본 목표인 ‘WMD 확산 방지’에 근본적으로 저촉되는 행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PSI가 특정 국가를 적용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PSI의 기본취지와 지향하는 목표를 감안할 때, 북한이 PSI의 주요 대상국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⁶² PSI에 관한 첫 국제회의에 참가한 11개 국가들은 미국, 영국, 일본, 호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폴란드이다.

I
II
III
IV
V
VI
VII

WMD 확산 방지라는 국제적인 문제의 중심에 북한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PSI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공해상에서 국적선박을 차단시켜 수색하는 차단행위가 야기할 수 있는 국제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PSI가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하나의 국제규범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배경에는 국제안보질서의 급격한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국제안보질서의 변화는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하나는 탈냉전 이후 WMD 특히 핵확산이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WMD를 이용한 테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점이다.⁶³

마지막으로 핵안보를 민간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NGO인 “핵위협구상”(Nuclear Threat Initiative: NTI)과 미국 에너지부의 주도로 2008년 9월 설립된 민간협력기구인 “세계핵안보기구”(World Institute for Nuclear Security: WINS)가 있다. 원자력 안전 분야의 “세계원자력운영자협회”(World Association of Nuclear Operators: WANO)를 모델로 설립된 WINS에는 2009년 10월 현재 36개국의 기업, 경찰, 정부기관, 연구소 등이 가입했다. 범세계적으로 핵안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WINS의 주요 활동은 핵안보에 관한 모범사례를 수집하고 관련 정보의 공유를 촉진하는 것이다. GICNT와 G8 글로벌 파트너십이 정부간의 국제협력인 반면에, WINS는 민간차원의 협력기구라는 점이 다르다. WINS는 개인이나 단체가 가입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현재 국내의 몇몇 단체와 개인이 가입해서 활동 중이다.

⁶³. PSI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전성훈,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서울: 통일연구원, 2007).

Ⅲ. 핵안보와 국제 핵비확산체제



이 장에서는 국제 핵비확산체제에서 핵안보가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고, 핵안보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한다.

1. 핵비확산체제

“핵비확산체제”(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란 핵무기확산을 막기 위한 일련의 국제적 합의와 제도 및 기구를 말한다.⁶⁴ 남극에서 핵폭발이나 방사성물질의 처리를 금지하기 위해서 1959년에 체결된 남극조약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많은 합의와 기구가 만들어졌다. 이 가운데 1968년에 체결된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은 핵비확산체제의 꽃이자 토대라고 할 수 있다.

NPT를 핵심요소로 하는 핵비확산체제의 원칙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핵무기의 수평적, 수직적 확산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비확산체제에 나타난 대강의 규범은 참가국들이 핵확산을 촉진하는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⁶⁵ 보다 구체적인 규범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① 핵국은⁶⁶ 타국이 핵무장 능력을 보유하도록 도움을 주지 말 것, ② 비핵국은 핵보유 노력을 포기할 것, ③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을 계속할 것, ④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이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절한 검증을 실시할 것.

64. 전성훈, “핵비확산체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국제정치논총』 제49집 4호, 2009, pp. 273~275.

65. Robert Keohane, *After Hegemon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 58.

66. 편의상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를 ‘핵국’(Nuclear Weapon State), 그렇지 않은 나라를 ‘비핵국’(Non-Nuclear Weapon State)이라고 부른다.

이상의 원칙과 규범은 핵비확산체제를 구성하는 핵심조약이자 모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NPT에 자세하게 조문화되어있다. NPT는 21세기 국제사회의 기본토대라고 할 수 있는 핵비확산체제를 태동시킨 실질적인 계기이자 시발점이다. 1970년에 발효된 이후 5년에 한 번씩 전체 회원국들이 모여서 조약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마련·실천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평가회의는 핵국과 비핵국, 서방선진국과 비동맹국 등 각국의 실정과 정치적 색채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활발하고 진솔하게 교환되는 대화의 마당으로 그 위상을 굳혀왔으며, 제8차 평가회의가 2010년 5월 뉴욕에서 개최된 바 있다.

NPT 체제는 1970년에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확대·발전을 거듭해왔는데, 대표적으로 1995년 제5차 평가회의에서 조약의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하는데 합의했다. 12개항의 전문과 11개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NPT는 다음과 같이 크게 여섯 가지 주제를 담고 있다.

가. 확산금지

확산금지 부문은 전문 1~3항과 제 I, II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국의 의무사항과 비핵국의 의무사항을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다. 핵국의 의무사항은 핵무기와 핵무기의 통제권을 비핵국에게 “이전”(transfer)하거나 비핵국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assist)하지 않는 것이다. 비핵국의 의무사항은 핵국으로부터 핵무기나 핵무기의 통제권을 “접수”(receive)하거나 핵무기를 “제조”(manufacture) 혹은 “획득”(acquire)하지 않는 것이다.

나. 보장조치

비핵국의 NPT 이행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보장조치 부문은 전문의 4~5항과 제Ⅲ조로 구성되어 있다. 보장조치 부문은 비핵국이 IAEA 사찰을 수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비핵국에 대해서는 핵관련 수출이나 기술지원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Ⅲ조는 개별국가 혹은 국제제도 차원에서 수출통제를 제도화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핵확산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비핵국들의 원자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부문은 전문 6~7항과 제Ⅳ, V 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 I, II 조에 준해서”(in conformity of articles I and II), 모든 국가들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사용할 “고유권한”(inalienable right)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평화적인 목적의 핵실험 권한을 인정한 제V 조는 핵실험의 평화적 용도와 군사적 용도를 구분하기 어렵고 평화적인 목적으로 위장한 핵개발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그동안 조항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제는 이 조항의 이행 여부조차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라. 군축

핵국들의 핵무기 감축을 규정한 군축 부문은 전문 8~12항과 제Ⅵ조로 구성되어 있다. 군축 부문은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금지과 수직적 확산금지를 연계하려는 비핵국들의 요구로 NPT에 첨가된 조항이다. 핵국

I

II

III

IV

V

VI

VII

들은 핵군비경쟁을 종식시키고 핵군축을 실현하며 엄격한 국제통제를 받는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축”(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GCD)을 실현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제VI조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핵군축 조약이 체결되었다.

마. 비핵국의 안전

비핵국들이 자국의 안전을 위해 자국영토를 비핵지대화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비핵국의 안전 부문은 제VII조에 해당되며 비핵지대 창설과 안전보장으로 세분된다. 지금까지 중남미와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등 다섯 개 지역에 비핵지대가 창설되었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5개 핵국들은 비핵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 안전보장과 조건을 첨부한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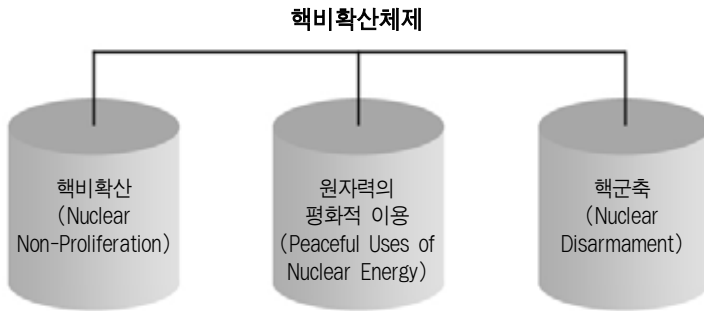
바. 조약의 개정·이행·연장

조약의 이행절차와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약의 개정, 이행 및 연장 부문은 제VIII, IX, X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X조는 회원국의 최고이익을 침해하는 특수한 사건이 있을 때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되 90일 전에 다른 회원국들과 유엔안보리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PT 발효 이후 조약의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는 개최된 적이 없으나, 조약의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회의는 1975년 이후 5년마다 개최되었다. 1995년에는 조약의 이행을 검토하는 평가회의와 연장기간을 결정하는 연장회의가 함께 개최되어 무기한 연장에 합의했다. NPT 체

결 당시의 합의는 25년을 이행한 후 추가 연장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었다. NPT 탈퇴 규정을 이용하여 탈퇴를 선언했던 유일한 국가는 북한이다.

이상의 여섯 가지 주제를 <그림 III-1>과 같이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해서 핵비확산체제의 “세 기둥”(Three Pillars)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①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을 금지하는 “핵비확산”(Nuclear Non-Proliferation), ② 평화적 목적의 민수용 원자력 사용을 증진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③ 핵무기의 수직적 확산금지과 폐기를 도모하는 “핵군축”(Nuclear Disarmament).

그림 III -1 핵비확산체제의 세 기둥



2. 핵비확산체제와 핵안보

핵안보가 핵비확산체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에 대해 많은 혼란과 오해가 있다. 이 절에서는 핵안보를 포함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의 세 가지 핵심 개념의 성격과 이들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한다.

I
II
III
IV
V
VI
VII

가. '3S'(Safeguards, Safety, Security)

'3S'란 "보장조치"(Safeguards), "안전"(Safety) 및 "안보"(Security)를 통칭하는 말이다. "보장조치"(Safeguards)란 NPT의 두 번째 기둥, 즉 비핵국에게 허용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활동이 NPT가 금지하는 핵무기 개발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서 IAEA가 취하는 각종 계량 검사와 사찰 등의 검증활동을 말한다. IAEA 보장조치 문서는 보장조치의 목적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보장조치의 목적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⁶⁷

“포괄적인 보장조치협정”(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 CSA) 하에서 보장조치는 한 국가가 모든 평화적인 원자력 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핵물질에 대한 보장조치를 수용하는 의무를 이행하는지를 검증하고 이러한 물질이 핵무기 혹은 기타 핵폭발장치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적용된다. 이런 점에서 기술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중요한 양의 핵물질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활동으로부터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장치의 제조로 전용되는 것을 제때에 탐지하고 조기탐지의 위험을 통해 이런 전용을 억지한다.

같은 IAEA 문서에 보장조치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⁶⁸

⁶⁷ 원문은 다음과 같다. “Under a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 (CSA), safeguards are applied to verify a State’s compliance with its undertaking to accept safeguards on all nuclear material in all its peaceful nuclear activities and to verify that such material is not diverted to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In this regard, the technical objective is specified: “the timely detection of diversion of significant quantities of nuclear material from peaceful nuclear activities to the manufacture of nuclear weapons or of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or for purposes unknown, and deterrence of such diversion by the risk of early detection.” *IAEA Safeguards Glossary 2001 Edition: International Nuclear Verification Series No. 3* (Vienna: IAEA, 2002), p. 11.

포괄적인 보장조치협정 하에서 보장조치는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관할 하에서 혹은 어느 곳이던 해당국의 통제 하에 진행되는 모든 평화적인 원자력 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물질이나 특수 분열성물질에 대해 적용된다. 이러한 협정은 “포괄적”(full scope)이라고 간주된다. CSA의 범위는 해당 국가가 공표한 핵물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IAEA의 보장조치 하에 있는 모든 핵물질을 포함한다.

“안전”(Safety)이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되지 않은 각종 사건과 재해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 IAEA 안전 문서는 안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지나친 방사능 위해로부터 작업자와 대중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적절한 작업 조건, “사고”(accident)의 예방, 사고에 의한 영향의 완화를 달성하는 것.⁶⁹

‘사고’란 작업 실수, 장비 결함, 기타 불운을 포함하여 방호와 안전의 관점에서 볼 때 무시할 수 없는 결과나 그런 잠재성을 내포한 의도되지 않은 일.⁷⁰

68. 원문은 다음과 같다. “Under a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 (CSA), safeguards are applied on “all source or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in all peaceful nuclear activities within the territory of the State, under its jurisdiction or carried out under its control anywhere...” [153, para. 2]. Thus such agreements are considered comprehensive (or ‘full scope’). The scope of a CSA is not limited to the nuclear material declared by a State, but includes all nuclear material subject to IAEA safeguards.” *Ibid.*, p. 13.

69.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achievement of proper operating conditions, prevention of accidents or mitigation of accident consequences, resulting in protection of workers, the public and the environment from undue radiation hazards.” *IAEA Safety Glossary: Terminology Used in Nuclear Safety and Radiation Protection 2007 Edition* (Vienna: IAEA, 2007), p. 133.

70. 원문은 다음과 같다. “Any unintended event, including operating errors, equipment failures and other mishaps, the consequences or potential consequences of which are not negligible from the point of view of protection

I
II
III
IV
V
VI
VII

안전은 원자로 노심, 핵분열 연쇄반응, 방사성원 및 기타 방사선원에 대한 통제 상실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환경 하에서의 방사능 위협과 “사건”(incident)의 결과로서의 방사능 위협에 모두 대처한다.⁷¹

‘사건’이란 작업 실수, 장비 결함, 초기사건, 사고의 전조, 완전한 성공이 아닌 것, 불운, 인가되지 않은 행동(악의적인 혹은 그렇지 않은)을 포함하여, 방호와 안전의 관점에서 볼 때 무시할 수 없는 결과나 그런 잠재성을 내포한 의도되지 않은 일.⁷²

“안보”(Security)란 기본적으로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Physical Protection)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지금도 IAEA 핵안보 문건에서는 물리적 방호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관련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물리적 방호 시스템’은 악의적인 행동이 성사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물리적 방호 조치의 종합적 집합임; ‘물리적 방호 조치’는 물리적 방호 시스템을 구성하는 인원, 절차 및 장비임; ‘물리적 방호 레짐’은 다음을 포함함: ①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를 관장하는 법적·규제적 틀, ② 법적·규제적 틀의 이행을 보장하도록 책임지는 국가 내의 기구와 조직, ③ 시설 및 운송 물리적 방호 시스템.⁷³

or safety.” *Ibid.*, p. 12.

⁷¹ 원문은 다음과 같다. “Safety is concerned with both radiation risks under normal circumstances and radiation risks as a consequence of incidents, as well as with other possible direct consequences of a loss of control over a nuclear reactor core, nuclear chain reaction, radioactive source or any other source of radiation.” *Ibid.*, p. 174.

⁷² 원문은 다음과 같다. “Any unintended event, including operating errors, equipment failures, initiating events, accident precursors, near misses or other mishaps, or unauthorized act, malicious or non-malicious, the consequences or potential consequences of which are not negligible from the point of view of protection or safety.” *Ibid.*, p. 93.

IAEA 핵안보 문서는 핵안보 레짐이 추구하는 큰 틀의 목적을 “핵 물질과 방사성물질이 연루된 악의적인 행동으로부터 사람, 재산, 사회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핵안보 레짐의 필수적인 요소인 물리적 방호 레짐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규정했다.⁷⁴

- “인가되지 않은 처분에 대한 방호”(to protect against unauthorized removal): 핵물질의 도난이나 기타 불법적 탈취에 대해 방호함.
- “분실된 핵물질의 소재 파악 및 회수”(to locate and recover missing nuclear material): 분실 혹은 도난된 핵물질의 소재 파악 및 회수를 위한 신속하고 포괄적인 방안의 이행을 보장함.
- “사보타지에 대한 방호”(to protect against sabotage):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사보타지로부터 방호함.
- “사보타지의 영향을 완화 및 최소화”(to mitigate or minimize effects of sabotage): 사보타지로 인한 방사능영향을 완화하고 최소화함.

여기서 “사보타지”(Sabotage)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⁷³. 원문은 다음과 같다. “Physical Protection System: An integrated set of physical protection measures intended to prevent the completion of a malicious act; Physical Protection Measures: The personnel, procedures, and equipment that constitute a physical protection system; Physical Protection Regime: A State’s regime including ① the legislative and regulatory framework governing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② the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within the State responsible for ensuring implementation of the legislative and regulatory framework, ③ facility and transport physical protection systems. *Nuclear Security Recommendations on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INFCIRC/225/Revision 5), p. 53.

⁷⁴. 원문은 다음과 같다. “to protect persons, property, society, and the environment from malicious acts involving nuclear material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 *Ibid.*, p. 4.

방사선에의 노출이나 방사성물질의 유출로 인해 작업자, 대중 및 환경의 건강과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원자력시설이나 사용·저장·운송중인 핵물질에 대한 의도적인 행동.⁷⁵

더 나아가 한 국가의 물리적 방호 레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이상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⁷⁶

- 민감한 정보의 보호와 저지를 통한 악의적 행위의 방지,
- 탐지, 지연 및 대응의 통합적 시스템을 통한 악의적 행위와 그 시도에 대한 관리,
- 악의적 행위로 인한 방사선적 영향의 완화.

IAEA는 2001년 9월 이사회와 총회에서 국제적으로 물리적 방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서 “물리적 방호의 목적과 기본원칙”(Physical Protection Objectives and Fundamental Principles)을 도출했다. 12개의 기본원칙은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CPPNM) 2005년 개정안과 IAEA 핵안보 문서 13번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12개의 기본원칙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⁷

- ① “국가책임”(Responsibility of the State): 한 국가 내의 물리적 방호 레짐의 수립·이행·유지는 전적으로 그 나라의 책임이다.
- ② “국제운송중 책임”(Responsibilities during International

⁷⁵- IAEA는 사보타지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린 바 있음. “Any deliberate act directed against a nuclear facility or nuclear material in use, storage or transport which could directly or indirectly endanger the health and safety of personnel, the public or the environment by exposure to radiation or release of radioactive substances.” *Ibid.*, p. 53.

⁷⁶- *Ibid.*, p. 5.

⁷⁷- *Ibid.*, pp. 5~17.

Transport): 핵물질에 대한 적절한 방호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적 책임은 국제운송에까지 연장되며 다른 나라에 적절히 이전될 때까지 적용된다.

- ③ “법·규제적 틀”(Legislative and Regulatory Framework): 국가는 물리적 방호를 관장할 법·규제적 틀을 수립·유지할 책임이 있다. 이 틀은 물리적 방호요건의 수립을 지원하고, 평가체계와 인허가 절차를 포함한다.
- ④ “유관기관”(Competent Authority): 국가는 법·규제적 틀을 이행할 책임을 갖는 유관기관을 수립·지정한다. 해당기관은 주어진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권한, 재정, 인력을 제공받는다. 국가는 방호를 담당하는 해당기관과 원자력의 사용 증진을 책임지는 다른 기관 사이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 ⑤ “원자력사업자 책임”(Responsibility of the License Holders): 한 국가 내에서 물리적 방호의 다양한 요소를 실행하는 책임은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 국가는 원자력시설과 핵물질의 방호를 이행하는 주된 책임이 관련 사업자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 ⑥ “위협”(Threat): 한 국가의 물리적 방호는 해당국의 현재 위협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야 한다.
- ⑦ “단계적 접근”(Graded Approach): 물리적 방호 요건은 현재 위협에 대한 평가, 상대적 우선순위, 핵물질의 특성 및 핵물질의 인가되지 않은 처분과 핵물질·시설에 대한 사보타지에 의한 잠재적인 결과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 ⑧ “심층방어”(Defence in Depth): 한 국가의 물리적 방호 요건은 적이 극복하거나 우회해야 하는 다층적 및 다양한(구조적, 기

I
II
III
IV
V
VI
VII

- 타 기술적, 인적 및 조직적) 방호방법의 개념을 반영해야 한다.
- ⑨ “방호문화”(Security Culture): 물리적 방호를 이행하는 모든 조직은 안보문화와 전체 조직에서 안보문화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안보문화의 개발과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 ⑩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품질보증 정책과 프로그램은 물리적 방호에 중요한 모든 행동의 구체적인 요건이 만족된다는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립·이행되어야 한다.
 - ⑪ “기밀유지”(Confidentiality): 국가는 인가되지 않은 공개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요건을 수립해야 한다.
 - ⑫ “방호비상계획”(Contingency Plans): 핵물질의 인가되지 않는 처분, 원자력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사보타지 및 이러한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방호비상계획은 모든 사업자와 관련 기관에서 적절히 준비·훈련되어야 한다.

핵안보와 물리적 방호의 중요한 차이점은 물리적 방호가 핵물질과 원자력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서, 핵안보는 여기에 방사성물질까지 포함된다는 것이다.⁷⁸ 핵물질은 “핵분열성”(fissile) 물질과 “핵원료성”(fertile) 물질로 구분할 수 있다. 핵분열성 물질은 핵무기의 재료이자 원자로의 핵연료로 사용되며 중성자를 흡수하면 핵분열을 일으키는 다음 핵종이 해당된다: ① 플루토늄-239(Pu-239), ② Pu-241, ③ 우라늄-233(U-233), ④ U-235 등. 핵원료성 물질은 중성자를 흡수하

⁷⁸ 유호식, “국제 핵안보 동향과 한국의 역할,” 비확산포럼 발제문, 2011년 3월 10일.

면 핵분열성 물질로 변환될 수 있는 핵종으로 U-238과 토륨-232(Th-232)가 있다. 방사성물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코발트-60(Co-60), ② 세슘-137(Cs-137), ③ 이리듐-192(Ir-192), ④ 스트론튬-90(Sr-90), ⑤ 아메리슘-241(Am-241) 등.⁷⁹

한편, 영국 정부는 2009년 7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핵안보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고 정의했다.⁸⁰

- “물리적 안보”(Physical Security): 다음 수단을 통해 원자력시설과 핵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함: ① 방호울타리와 보안출입시스템 등 물리적 장애물의 사용 및 보완요원과 신원조사 시스템의 사용, ② 핵물질 운송시 탈취와 절도를 막는 조치를 취해서 안전을 확보, ③ 안보관련 규정이 국가적으로 이행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규제 기구와 법령,
- “물질 계량과 통제”(Material Accounting and Control): 국가가 어디에 얼마만큼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기준과 계량시스템 수립,
- “정보·지식·전문성 안보”(Information, Knowledge and Expertise Security): 인터넷이나 학술교류 혹은 공작차원의 정보수집활동을 통해서 핵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내부자 위협에 대처함으로써 관련 정보와 전문성의 보안을 확보함.

I
II
III
IV
V
VI
VII

⁷⁹ 전은주, “핵안보정상회의 주요현황 및 전망,”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2010년 10월 21일. Co-60, Cs-137, Ir-192, Sr-90은 감마선이고 Am-241은 알파선이다.

⁸⁰ Cabinet Office, *The Road to 2010: Addressing the Nuclear Question in the Twenty First Century*, p. 25.

나. '3S'의 상호 연관성

'3S'는 개념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며 핵물질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상호 연관성이 있다. 예를 들어 “보장조치”(Safeguards)와 “안보”(Security)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공통점을 공유한다:⁸¹ ① 핵물질의 비평화적 목적으로의 전용 방지, ② 방사성물질에 대한 계량관리와 통제 강화, ③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중시. “안전”(Safety)과 “안보”(Security) 사이에도 서로 중복되는 영역이 존재한다. 안전이 투명성을 강조하는 반면 안보가 비밀성에 기초한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안전이나 안보 영역에서 단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해도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과 방호 문화의 정착이 중요한 것이다.⁸²

미국 조지아대학의 핵안보 전문가는 안전과 안보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핵안전의 경우, 인가된 원자력 연구, 생산 및 수송망으로부터의 혼란, 파괴 및 방사능유출을 야기하는 의도하지 않은 행위나 조건에 중점을 두며 대응 시에 공학적 방호와 안전관리를 강조한다. 핵안보의 경우, 테러리스트, 범죄자 및 기타 요소에 의한 원자력 하부구조와 생산물의 의도적인 악용에 중점을 두며 대응 시에 정보수집, 물리적 방호, 감시 및 약속이행을 강조한다.⁸³

⁸¹- *Ibid*.

⁸²-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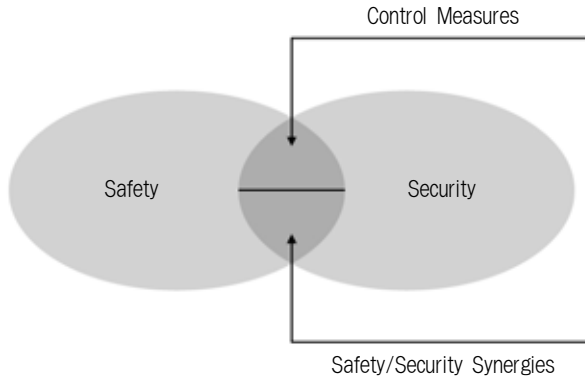
⁸³. 원문은 다음과 같다. “For nuclear safety, the primary focus is on unintended acts or conditions that could lead to disruptions, breakdowns and radiation releases from authorized nuclear research, production, and transportation chains, with responses emphasizing engineered protection and safety management. For nuclear security, the primary focus is on the intentional

이와 관련, IAEA 안전문건은 핵안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핵물질, 기타 방사성물질 및 관련 시설이 연루된 도난, 사보타지, 인가되지 않은 접근, 불법 이전 및 기타 악의적인 행동을 예방, 탐지, 대응하는 것.⁸⁴

아울러 핵안전과 핵안보의 중복성을 <그림 III-2>에서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⁸⁵

●그림 III-2 안전과 안보의 상관관계



misuse of nuclear infrastructure and products by terrorist, criminal, or other elements, with responses emphasizing intelligence gathering, physical protection, vigilance and compliance.” Igor Khripunov, “Post-nuclear summit agend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⁸⁴.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prevention and detection of, and response to, theft, sabotage, unauthorized access, illegal transfer or other malicious acts involving nuclear material, other radioactive substances or their associated facilities.” *IAEA Safety Glossary: Terminology Used in Nuclear Safety and Radiation Protection 2007 Edition*, p.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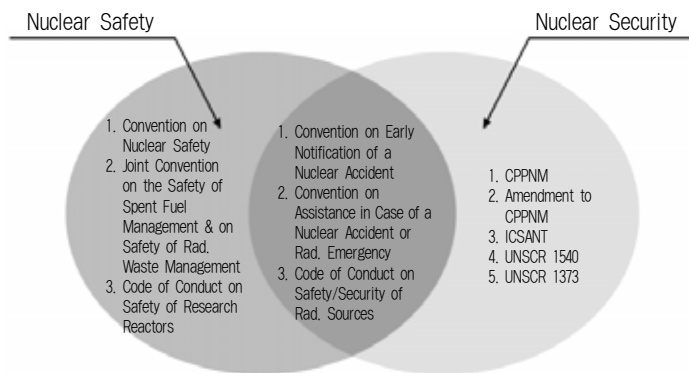
⁸⁵. *Ibid.*, p. 134.

I
II
III
IV
V
VI
VII

여기서 “통제조치”(Control Measures)란 안전 혹은 안보 문제가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기계장치에 내재한 위험요소(기기의 손상이나 오작동) 때문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기의 성능 분석을 위한 절차를 점검하는 방법을 말한다. 두 분야의 “시너지”(Safety/Security Synergies)는 현재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안전과 안보 조치가 서로 분리되어 정보교류가 안되고 기기점검 등 작업이 중복되고 있지만 앞으로 원전 운영 과정에서 안전과 안보를 합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의 시너지이다. 구체적으로 시너지의 사례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① 규제 틀, 설계·건설의 공학적 기준, ② 접근에 대한 통제, ③ 방사성원의 분류, ④ 방사성원과 물질의 안보와 관리, ⑤ 비상대응계획, ⑥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⁸⁶

한 연구에서는 국제규범을 중심으로 안전과 안보의 상관관계와 중복영역을 <그림 III-3>에서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⁸⁷

●그림 III -3 안전과 안보의 관계: 국제규범 중심



⁸⁶- Igor Khripunov, “Post-nuclear summit agend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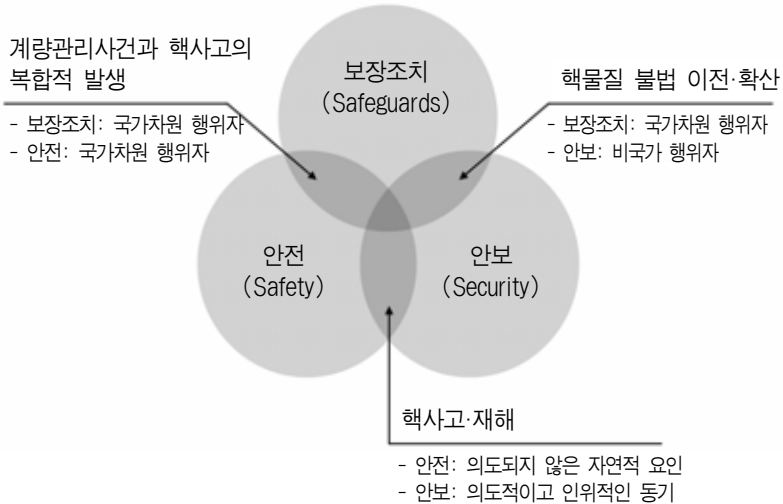
⁸⁷- Sharon Squassoni, “Tailoring the 2012 Nuclear Security Summit: Korea’s Legacy,” *Nuclear Security Summit 2012 Workshop* hosted by IFANS, Seoul, South Korea, May 12~13, 2011.

IAEA 안전문건에 따르면, 안전과 안보 사이에 분명한 구분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안보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악의적인 행동이나 부주의한 행동에 관한 것인 반면에 안전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방사능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해로움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안전과 안보가 중복되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IAEA 안전문건은 두 개념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했다.

안전문제는 본질적으로 활동에 관한 것이며 투명하고 확률적인 안전 분석 기법이 사용된다. 안보문제는 악의적인 행동에 관한 것이며 보안사항이고 위협기반에 의한 판단이 적용된다.⁸⁸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3S’의 상관관계를 아래 <그림 III-4>에 서와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다.

그림 III -4 ‘3S’의 상관관계



I
II
III
IV
V
VI
VII

보장조치와 안전이 중복되는 영역은 모두 국가차원의 행위자에 의해서 계량관리상의 사건과 핵사고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보장조치와 안보는 국가차원의 행위자(보장조치)와 비국가 행위자(안보)에 의한 핵물질의 불법적 이전과 확산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반면에 안전과 안보는 의도되지 않은 자연적인 요인(안전)이나 의도적이고 인위적인 동기(안보)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원인은 다르지만, 핵사고와 재해라는 결과가 같다는 공통점이 있다.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사고가 발생하면 방사선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피신, 소개 등의 방재조치를 취하게 된다.

하바드 대학교의 번(Matthew Bunn)은 안전과 안보의 관계를 거울에 비친 모습과 같으면서 다음과 같이 비유했다. “안보 없이 안전할 수 없고, 안전 없이 안보가 있을 수 없다.”⁸⁹ 보장조치와 안보, 보장조치와 안전의 관계도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보장조치 없이 안보를 달성할 수 없고, 안보 없이 보장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리고 보장조치 없이 안전할 수 없고, 안전 없이 제대로 된 보장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88.} 원문은 다음과 같다. “Safety matters are intrinsic to activities, and transparent and probabilistic safety analysis is used. Security matters concern malicious actions and are confidential, and threat based judgement is used.” *IAEA Safety Glossary: Terminology Used in Nuclear Safety and Radiation Protection 2007 Edition*, p. 134. 안전과 안보 사이의 다른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Igor Khripunov, “Post-nuclear summit agend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89.} 외교안보연구원 주최 ‘서울 핵안보 네트워크 워크숍’에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황일순 교수와의 의견교환, 2011년 3월 3일. 번의 발언 원문은 다음과 같다. “You can’t be safe without being secure. Because even if you had good protection against accidental releases, you might still have a release because of terrorist action. You can’t be secure without being safe. Because it’s very hard to provide good protection against releases caused by terrorists unless you have a variety of good backup systems in place.”

IV.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주요 성과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핵안보가 기존의 핵비확산체제를 구성하는 ‘3대 기둥’, 즉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 및 핵군축에 더해서 정상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새로운 의제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47개국의 정상과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핵테러 문제를 논의했다는 역사적인 사실 자체가 핵안보의 중요성을 잘 보여 주었다. 일부에서는 핵테러와 핵안보가 핵비확산체제의 ‘3대 기둥’에 더해서 네 번째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클린턴 미국무장관은 2009년 10월 21일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핵안보의 주요 목적인 핵테러가 핵비확산체제의 네 번째 축이 되어야 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⁹⁰

우리는 핵무기 확산 방지, 군축 증진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축진이라는 지구적 비확산의 상호 유기적인 세 축을 각각 강화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축에 더해서 핵테러 예방을 네 번째 축으로 추가해야 한다. 테레범들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NPT가 협상될 당시에 주된 관심사항은 아니었지만 오늘날은 그러하며 앞으로도 국가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남아야 한다.

영국도 정부차원에서 의회에 보고한 공식 보고서에서 핵안보를 NPT 체제의 네 번째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⁹¹ 보고서에서 영국은 핵테러 위험에 대응해서 핵분열성 물질의 완전한 관리에 더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고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고 핵안보가 “다자 핵 틀의 네 번째 축”(fourth pillar of the multilateral nuclear framework)

⁹⁰- Hillary Rodham Clinton, *Remarks at the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Renaissance Mayflower Hotel, Washington, DC, October 21, 2009*, <www.state.gov/secretary/rm/2009a/10/130806.htm>.

⁹¹- Cabinet Office, *The Road to 2010: Addressing the Nuclear Question in the Twenty First Century*.

I
II
III
IV
V
VI
VII

이 되어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⁹² 보고서는 원자력 이용의 세계적 확산과 핵기술의 발전은 핵안보가 강화된 “핵 체제의 결정적인 네 번째 축”(vital fourth pillar of any strengthened nuclear regime)이라는 점을 의미하며 테러그룹이 핵장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지금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⁹³ 아울러 기존의 NPT 틀은 비확산, 군축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란 세 축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영국 정부는 핵안보가 “지구적 의제의 네 번째 축으로서 지구적 핵 틀의 통합된 일부”(integral part of the global nuclear framework—a new, fourth ‘pillar’ of the global agenda)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⁹⁴

물론 핵안보를 NPT를 기본으로 하는 핵비확산체제의 네 번째 축으로 정식으로 규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핵비확산체제는 NPT에의 가입을 전제로 하는 반면에 핵안보는 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NPT의 회원국이었던가 탈퇴한 북한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핵안보를 NPT의 네 번째 축으로 삼음으로써 이들 “이탈국가”(outlier country)의 핵보유를 정당화시켜주거나 NPT를 중심으로 한 핵비확산체제 자체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핵안보를 NPT 체제의 네 번째 축으로 삼느냐의 문제는 핵안보가 그만큼 중요한 국제안보현안이라는 점에서 매듭을 짓고, NPT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⁹²- *Ibid.*, p. 7.

⁹³- *Ibid.*, p. 8.

⁹⁴- *Ibid.*, p. 12.

1. 오바마의 “포괄적 의제”(Comprehensive Agenda)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프라하 연설에서 4년 내에 전세계의 관리가 취약한 모든 핵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노력을 촉구한 것은 미국이 추구하는 “포괄적 의제”(Comprehensive Agenda)의 일부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좀 더 가까이 가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⁹⁵ 포괄적 의제의 구성요소는 세 가지(① 핵군축, ② 핵안보, ③ 핵비확산)인데, 이는 2009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결의안 1887호에도 명시되어 있다. “핵의 봄”(Nuclear Spring)이라고 명명된 2010년 4월에 포괄적 의제에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행사와 사건들이 있었다: ① 미·러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체결, ②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NPR 발표, ③ 제8차 NPT 평가회의 뉴욕 개최, ④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워싱턴 개최.

로즈(Ben Rhodes) 백악관 NSC 부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프라하 연설을 한 동기, 즉 포괄적 의제를 제시한 동기는 핵군축, 비확산 및 핵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노력이 약해졌다는 상황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연설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성취했다고 분석했다.⁹⁶

⁹⁵. *Remarks by the President at the Opening Plenary Session of the Nuclear Security Summit.*

⁹⁶. 원문은 다음과 같다. “And essentially what he did there is try to reinvigorate the U.S. government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ound a very broad set of goals, including nuclear security, and again, as Gary said, taking this issue, which had been of concern and where steps had been taken, and elevating it to the level of leaders and broadening the coalition to include all regions of the world is fundamental to our ability to achieve our objectives.” *Press Briefing by Ben Rhodes,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for Strategic Communications; Gary Samore, Senior White House Coordinator for WMD Counterterrorism and Arms Control; and Laura Holgate, Senior Director*

I
II
III
IV
V
VI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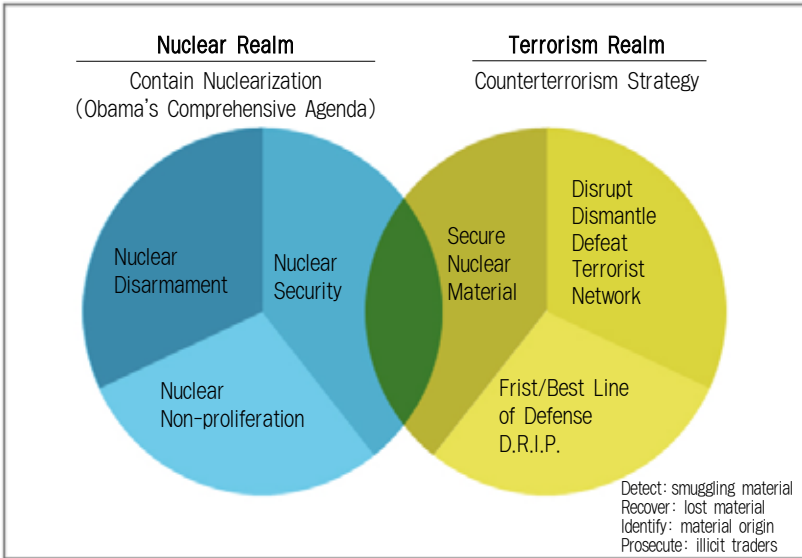
- 핵안보를 포함해서 포괄적인 목표를 달성하도록 국제사회와 미국 정부에 활력을 불어넣음.
- 이 문제를 정상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전세계의 모든 지역이 포함 되도록 공조를 확대함.
- 이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능력을 향상시킴.

로즈 NSC 부보좌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핵 분야에서 핵군축 의무를 이행하고 NPT 강화 노력을 통해 핵비확산을 실현하면서 핵안보를 추진하고 있고, 동시에 핵테러 분야에서는 테러 네트워크를 “방해”(disrupt)하고, “해체”(dismantle)하고 “격퇴”(defeat)하는 광범위한 대테러 정책(DDD)을 추진하고 있다.⁹⁷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오바마의 핵테러 대책을 다음 <그림 IV-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핵 차원의 대책은 세 가지 포괄적 의제이고, 테러 차원의 대책은 핵물질 관리, DRIP 및 DDD. 여기서 DRIP는 핵테러에 대응한 2차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밀매된 물질을 “탐지”(detect)하고 분실된 물질을 “되찾으며”(recover) 물질의 생산지를 “파악하고”(identify) 핵물질을 거래한 자들을 “처벌하는”(prosecute)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⁹⁸

for WMD Terrorism and Threat Reduction.

⁹⁷ 원문은 다음과 같다. “So on the nuclear side, this is the nuclear security piece. We have the non-proliferation piece, which is focused through our efforts to strengthen the NPT, keep our own obligations, reduce our own arsenals. Then on the terrorism side, we have, again, our broader counterterrorism policy of disrupting, dismantling, and defeating terrorist networks.” *Press Briefing by Ben Rhodes,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for Strategic Communications; Gary Samore, Senior White House Coordinator for WMD Counterterrorism and Arms Control; and Laura Holgate, Senior Director for WMD Terrorism and Threat Reduction.*

그림 IV -1 오바마의 포괄적 의제와 대테러 정책



2. 국제협력과 정상회의

가. 국제협력

미국 정부가 핵테러와 핵안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방적인 방법 보다는 국제협력을 선택한 이유는 미국이 핵테러의 고통을 받아야 할 유일한 나라가 아니듯이, 미국 혼자서 핵테러를 막을 수도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⁹⁹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서 핵테러가 제

⁹⁸. 원문은 다음과 같다. “bolster our ability to detect smuggled material, recover lost material, identify the materials origin and prosecute those who are trading in these materials.” *Key Facts about the National Security Summit*.

⁹⁹. *Ibid*

I
II
III
IV
V
VI
VII

기하는 지구적 위협 하에서 핵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핵물질의 불법거래와 핵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부시 행정부에서도 핵테러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핵안보정상회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 세이모어(Gary Samore) 백악관 WMD 대테러·군비통제 조정관의 해석이다.¹⁰⁰

- 핵테러 위협에 공감하는 국가가 범세계적으로 훨씬 많아진다.
- 핵안보정상회의가 각국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촉진한다.
- 정상회담 수준에서 협의를 할 때, 큰 결정을 내리기 쉬워진다. 부시 행정부에서도 많은 일들이 이뤄졌지만 47개국 지도자가 모인 적은 없었다.¹⁰¹

핵안보정상회의의 초기 명칭은 “글로벌 핵안보정상회의”(Global Nuclear Security Summit)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여름까지도 이 명칭을 고수했지만 후에 ‘글로벌’이란 말을 삭제하고 핵안보정상회의라는 명칭만 사용하기로 했다. 미국 조지아대학의 전문가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의 주된 관심인 핵테러 위협에 공감하지 않는 나라가 많

¹⁰⁰- *Press Briefing by Ben Rhodes,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for Strategic Communications; Gary Samore, Senior White House Coordinator for WMD Counterterrorism and Arms Control; and Laura Holgate, Senior Director for WMD Terrorism and Threat Reduction.*

¹⁰¹- 47개국을 원전 보유 여부로 구분하면, 25개국이 원전을 보유하고, 호주, 칠레, 베트남 등 16개국이 연구용원자로만 보유하고, 요르단, UAE 등 8개국은 아무것도 보유하지 않았다. 반면에 NPT상에 공인된 핵보유국인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모두 참석했고, NPT 체제 밖에서 핵을 개발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참석했다.

있고, 제1차 정상회의에서 방사성물질을 제외한 HEU와 플루토늄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면서 50개국도 안되는 나라들이 참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¹⁰² 참가국 확대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는 다수의 국가들이 핵테러의 위협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핵안보가 아직까지는 글로벌 이슈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SEAN의 경우 에너지, 환경오염, 자연재해, 물 부족 등 핵테러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이 많다는 입장이므로, 핵테러의 위협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제8차 NPT 평가회의의 최종문서도 핵테러 위협과 핵안보의 필요성에 대한 참가국 간의 이견 때문에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장 하나만 들어가 있다.¹⁰³

나. 정상회의

국제협력의 여러 형태 가운데에서도 유독 정상회의를 선택한 이유도 분명한데, 백악관이 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유례가 없는 대규모 정상회의는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핵물질을 손에 넣는 전례가 없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¹⁰⁴ 로즈 NSC 부보좌관도 다음과 같이 부연설명하고 있다. “정상회담이 매우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춘 것은 핵안보, 즉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핵테러 위협이다…; 이

¹⁰²-Igor Khripunov, “Post-nuclear summit agend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¹⁰³- 원문은 다음과 같다. “65. The Conference notes the Nuclear Security Summit held in Washington, D.C., in April 2010.” *2010 Review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Final Document Volume I*, NPT/CONF.2010/50 (Vol. I), New York, 2010, p. 10.

¹⁰⁴-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is unprecedented meeting is to address an unprecedented threat—the threat of nuclear materials in the hands of terrorists or criminals.” *Key Facts about the National Security Summit*.

I
II
III
IV
V
VI
VII

문제는 미국 국민들이 직면한 최고수준의 위협이기 때문에 정상 수준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믿는다.”¹⁰⁵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세계 지도자들의 유례없는 대규모 회동을 주선한 것은 4년 내에 HEU와 플루토늄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목적으로 각국 최고 수준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로즈 부보좌관의 설명이다.¹⁰⁶ 다시 말해서, 각국의 정상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핵테러 위협을 고취시켜서 행동의 시급성을 느끼게 하자는 것이다.

미국이 주도해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핵테러와 핵안보에 대한 각국 정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상들의 주목을 끌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세이모어 WMD 조정관에 따르면, 정상회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용성을 가진다.¹⁰⁷

- 각국 정부가 자국 정상들에게 무슨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가를 설명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각국 정부에서 핵안보의 비중이 높아지게 될 것임.
- 이렇게 해서 핵안보에 많이 주목하게 되고 담보상태에 있는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높아짐.
- 정상회담은 행동과 결정을 촉구하는 계기임.

¹⁰⁵- 원문은 다음과 같다. “what this summit was focused on in a very specific way was nuclear security, securing nuclear materials and the threat of nuclear terrorism..., we believe that this issue demanded this level of focus because it’s the highest-consequence threat that the American people face.” *Press Briefing by Ben Rhodes,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for Strategic Communications; Gary Samore, Senior White House Coordinator for WMD Counterterrorism and Arms Control; and Laura Holgate, Senior Director for WMD Terrorism and Threat Reduction.*

¹⁰⁶- *Ibid.*

¹⁰⁷- *Ibid.*

결국, 지구적 문제에 대해서는 지구적 차원의 해법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 요체는 각국 정부 최고수준의 행동과 정권 차원의 책임 있는 실천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로즈 NSC 부보좌관은 핵안보는 미국이 혼자서 혹은 몇몇 동맹국들과 소규모 그룹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광범위한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과 “지구적 행동”(global action)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히고, 개별적으로 선언한 행동에 대해 각국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정상들의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¹⁰⁸

오바마 행정부는 47개국 정상들이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함께 했다고 평가했다.¹⁰⁹

- 가장 높은 수준에서 핵안보에 대한 공동의 접근과 의지를 진전 시킴.
- 자국의 핵물질이 테러리스트가 사용하도록 도난·전용되지 않는다는데 대한 약속을 새롭게 함.
- 지속적으로 위협을 측정하고 여건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안보를 증진할 것을 선언함.
- 이를 위해 가장 훌륭한 관행과 실용적인 해법을 교환할 것을 선언함.
-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핵물질에 대한 최선의 안보를 보장하고 필

¹⁰⁸. 원문은 다음과 같다. “You’ve heard the President say many times that this is not the kind of thing that we can do alone, nor is it the kind of thing that we can do with a small group of our allies — that it’s going to take broad collective action and global action to make progress, and it’s also going to take the intensive efforts of leaders focusing on this and, as Gary has pointed out, holding their own governments accountable to the kinds of actions that you’ve seen announced today.” *Ibid.*

¹⁰⁹. *Key Facts about the National Security Summit.*

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공할 책임을 가진다는 원칙을 강조함.

- 핵테러와 핵안보에 관련된 국제조약의 이행을 증진하고, 지구적 안보를 개선할 구체적인 국가차원의 조치를 실천하도록 유도함.

3.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운영과 성과

가. 운영방식

오바마 행정부가 초대된 국가는 47개국인데, 백악관의 홀게이트 WMD 테러·위협 감소 담당관에 따르면 초청기준은 지역 안배, 원자력 산업 수준, 핵안보 기여도, 핵무기 보유 가능성 등이었다.¹¹⁰ 2010년 4월 12~13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는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다.¹¹¹

- 4월 12일 저녁: 핵테러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
- 4월 13일 아침: 각국이 핵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불법거래와 밀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취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논의함.
- 4월 13일 점심: IAEA가 책임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권한을 제공하는 등, IAEA 강화방안을 논의함.
- 4월 13일 오후: 핵물질이 테러집단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구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국가 간 협력을 심화하는 문제를 논의함.

¹¹⁰-Laura Holgate, "Nuclear Security Summit, Washington, 2010," a paper presented at the workshop on *Nuclear Security: A Road to the 2012 Summit*, Seoul, South Korea, August 30, 2010.

¹¹¹-*Remarks by the President at the Opening Plenary Session of the Nuclear Security Summit.*

- 이상의 본회의 일정과 별도로 4월 12일에는 “NGO 정상회의”(NGO Summit)가 열렸고, 4월 14일에는 “산업체 정상회의”(Industry Summit)가 개최되었다.¹¹²

백악관의 WMD 대테러·군비통제 조정관인 세이모어는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아래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 “워싱턴 정신”(the Spirit of Washington)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¹¹³

- ① 핵테러 위협에 대한 의구심 일소: 정상회의가 핵테러 위협에 대처한다는 목적의 단일성을 보여준 대단한 모임이었고,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핵테러는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 올 심각한 위협이므로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와 자원을 각국 정부가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에 합의했다. 아울러 과거에는 핵테러가 진짜 심각한가에 대한 회의감이 많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이런 의구심을 일소했다.
- ② 해법은 필요한 자원의 적재적소 투입이라는데 공감대 형성: 핵테러 위협에 대한 해법은 사실상 매우 간단하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 개념적으로 볼 때, 테러집단이 HEU나 플루토늄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는데, 이들 물질이 전세계적으로 2,000톤

¹¹²- NGO 정상회의에는 40개 이상의 나라에서 2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석해서 핵폭발 장치를 터뜨리는 것이 21세기의 본질적인 테러행위라고 규정했다. 산업체 정상회의에는 40개국 이상에서 170명 이상이 참가했는데, 핵테러의 위협과 산업체의 역할에 대한 이해 제고의 필요성, 핵안보 관련 조약과 합의 이행에 산업체의 역할 증대, 핵안보 관련 산업체와 정부 간의 대화 필요성 등에 합의했다. Laura Holgate, “Nuclear Security Summit, Washington, 2010”.

¹¹³- *Press Briefing by Ben Rhodes,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for Strategic Communications; Gary Samore, Senior White House Coordinator for WMD Counterterrorism and Arms Control; and Laura Holgate, Senior Director for WMD Terrorism and Threat Reduction.*

I
II
III
IV
V
VI
VII

이상 있지만 “물리적 방호”(physical protection)는 각국 정부와 기업체가 자원만 투입한다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즉 은행에서 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듯이 저장소의 플루토늄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해법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일부 국가는 핵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일부 국가는 보관할 수 있음) 문제는 필요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가의 여부이다.

- ③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룸: 정상성명과 작업계획이 애매한 내용이 아니라 각국별 혹은 국제적으로 핵안보에 필요한 요점을 담고 있다. 즉 확실한 공약과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차원에서 진짜 핵심적인 사항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 ④ 각국이 선물꾸러미를 준비함: 정상회담이 열리면 각국은 회담의 주제에 대한 자국의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기 마련이다.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는 각국이 “선물꾸러미”(House Gift)를 준비해오도록 압박하는 기회로 활용되었다.

한편, 로즈 백악관 NSC 부보좌관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핵안보정상회의의 접근방식은 각국의 필요성을 고려한 유연한 방식이라고 밝혔다.¹¹⁴ 부연해서 말한다면, 이는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방식(one-size-fits-all)이 아니라 맞춤형 접근방식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핵안보를 달성하는 방식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제도

¹¹⁴- *Ibid.*

를 활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¹¹⁵ 그에 따르면, 핵안보 분야에서 각국이 특정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그 실천을 보장하는 “강제 이행장치”(enforcement mechanism)을 갖춘 국제레짐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레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단기적으로 핵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더 시급한 노력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 즉 이미 존재하는 국가 차원의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행동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소홀히 했거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부터 해결하는 것이라고 로즈 부보좌관은 밝혔다.¹¹⁶ 예를 들어 러시아가 잉여 플루토늄 처리와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 폐쇄를 선언한 것은 지난 수년간 미·러 관계의 희생양이 되어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있었고 시급한 해결의 의지를 잃어버렸던 문제가 제1차 핵안보 정상회의를 통해 해결된 사례라는 것이다.

미국은 핵안보 차원에서 IAEA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IAEA의 역할도 핵안보에 대한 조언과 지원이지 검사권한을 갖는 보장조치와 같은 성격은 아니라는 것이다.¹¹⁷ 즉 IAEA 역할이 핵안보를 증진하려는 국가와 IAEA 간의 상호 협력차원을 넘어서는 강제적인 규제나 사찰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세이모어는 핵안보 분야에서 IAEA에 보장조치 권한에 비유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으며 실현도 가능하지

¹¹⁵- *Ibid.*

¹¹⁶- 원문은 다음과 같다. “here you have tangible steps that in many cases have been languishing for years, steps that we hadn’t created a sense of urgency around implementation, that had been — the had fallen prey to a drift in the U.S.-Russia relationship.” *Ibid.*

¹¹⁷- *Ibid.*

I
II
III
IV
V
VI
VII

않다고 보고,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핵테러 방지라는 각국의 개별 이익에 토대를 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IAEA의 역할은 협력적 접근이지 강제 이행장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나. 목표

오바마 행정부는 핵테러 방지를 위한 해법은 다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보았다.¹¹⁸

- “1차 최적의 방어선”(first and best line of defense):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 이들의 제조·사용법을 안전하게 관리함.
- 2차 방어선: 밀매된 물질을 탐지하고 분실된 물질을 되찾으며 물질의 생산지를 파악하고 핵물질을 거래한 자들을 처벌하는 능력을 배양함.¹¹⁹

결국, 미국이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내세운 최대 목표는 핵무기의 원료인 HEU와 플루토늄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로즈 NSC 부보좌관도 HEU와 플루토늄이 적정한 안보수준에 놓여 있어서 테러 집단이나 해를 끼치기 위해 이를 사용하려는 자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¹²⁰ 제1차 핵

¹¹⁸- *Key Facts about the National Security Summit.*

¹¹⁹- 원문은 다음과 같다. “bolster our ability to detect smuggled material, recover lost material, identify the materials origin and prosecute those who are trading in these materials.” *Ibid.*

¹²⁰- *Press Briefing by Ben Rhodes,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for Strategic Communications; Gary Samore, Senior White House Coordinator for WMD Counterterrorism and Arms Control; and Laura Holgate, Senior*

안보정상회의의 의제를 HEU와 플루토늄으로 국한한 이유는 “가장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협”(highest-consequence threat) 이기 때문이다. 로즈 부보좌관은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부연설명하고 있다.¹²¹

- Dirty Bomb 이나 Radiological Device와 같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다른 위협들도 많지만 하나의 핵탄두가 미국 국민이나 세계의 시민들에게 끼칠 파멸적인 위협을 고려한다면 HEU와 플루토늄에 집중하는 편이 나옴.
- 따라서 국가별 행동, 국제협약, 최선의 기준적용, 기술·재정 지원 협력 등을 통해서 각국으로 하여금 HEU 사용을 포기하고 플루토늄의 재고량을 줄이도록 해서 테러집단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핵물질의 “전체량”(pool)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 즉 HEU와 플루토늄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협”(highest-consequence threat) 이고 그 양을 줄이고 테러집단으로의 이전을 막음으로써 “가시적인 조치”(tangible steps)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임.
- Dirty Bomb, 세균무기, 화학무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들 무기는 파괴력 면에서 수만에서 수십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핵탄두만큼 대량파괴의 위력을 가진 무기는 아님.

I
II
III
IV
V
VI
VII

Director for WMD Terrorism and Threat Reduction.

¹²¹- *Ibid.*

다. 성과

(1) 새로운 자세

오바마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는 단순한 토론이 아니라 행동하는 기회이고 인류의 안전을 위해서 단순히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진전을 이루는 기회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위해 “새로운 마음의 자세”(a new mind set)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¹²² 그는 핵무기 개발에 참여했던 아인슈타인의 경고를¹²³ 인용하면서 “새로운 사고방식과 행동”(a new manner of thinking and action)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악관 NSC의 홀게이트 WMD 테러·위협 감소 담당관은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지난 10년간 만들어진 매우 효과적인 많은 장치와 제도의 위상을 높이고 저변을 확대하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¹²⁴ 제1차 회의가 새로운 약속을 하는 회의도 아니고 크고 새로운 국제제도를 만들어 내는 장도 아니며, 다만 지난 2년간 논의되어 온 모든 좋은 제언들의 위상을 높이고 실천하기 위한 진정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¹²²- *Remarks by the President at the Opening Plenary Session of the Nuclear Security Summit.*

¹²³- 아인슈타인은 핵무기의 출현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우리는 전대미문의 재앙을 향해 떠밀려가고 있다. 인류가 생존하려면 아주 새로운 태도가 요구된다.”(We are drifting towards a catastrophe beyond comparison. We shall require a substantially new manner of thinking if mankind is to survive”).

¹²⁴- *Press Briefing by Ben Rhodes,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for Strategic Communications; Gary Samore, Senior White House Coordinator for WMD Counterterrorism and Arms Control; and Laura Holgate, Senior Director for WMD Terrorism and Threat Reduction.*

(2) “정상성명”(Communiqué)

47개국 대표들은 최고위급 정치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상성명에 합의했다. 전체 12개 항으로 되어 있는 정상성명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앞으로 4년 안에 관리가 부실한 전세계의 핵물질을 안전하게 관리 하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승인함(정상성명 전문).
- 각국 차원에서 핵물질의 안전과 계량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특히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에 중점을 두고 관련 규정을 강화함(정상성명 1, 2항).
-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모아서 집중배치하고 관리해 나감(정상성명 3항).
- 핵안보와 핵테러에 관련된 주요 국제조약에 모든 국가가 가입하도록 해당 조약의 “세계화”(universality)를 추진함(정상성명 4, 5항).
- IAEA의 핵심적인 역할을 확인하고, IAEA가 핵안보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회원국들에게 제공해서 실천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할당받도록 요청함(정상성명 6항).
-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과 같은 제도의 긍정적인 역할에 주목하면서 법집행, 산업 및 기술요원 차원의 능력을 강화함(정상성명 7항).
- 핵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양자 및 다자간 차원의 지원을 추진함(정상성명 8, 9항).
- 원자력 산업계가 핵안보에 관련된 규정을 따르도록 장려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규정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함(정상성명 10, 11항).

I

II

III

IV

V

VI

VII

- 핵안보에 기여하는 방안들이 방사성물질의 안보와 관련해서도 가치를 가지며 이들 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노력도 장려함(정상성명 12항).

백악관의 홀게이트 WMD 테러·위협 감소 담당관은 제1차 회의에서 발표된 정상성명이 HEU와 플루토늄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¹²⁵

- 안보 증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
- 핵물질 계량 증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 ,
- 국가수준의 법규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

(3) “작업계획”(Work Plan)

작업계획은 정상성명에서 표명된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국내적, 국제적 조치에 대한 틀을 제시하면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작업계획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핵안보 및 핵테러에 관련된 국제조약을 비준하고 이행함.
- 유엔과의 협력 하에 유엔안보리결의안을 이행하고 다른 나라들의 이행을 지원함.
- IAEA와 협력해서 핵안보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이행함.
- 핵안보와 핵물질 거래에 관련된 각국의 규정과 법적 요건을 검토함.
-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민수용 원자력 시설을 핵무기 제조에 쓸 수 없는 물질을 사용하는 시설로 전환함.

¹²⁵- *Ibid.*

- 새로운 핵연료, 탐지방법 및 핵감식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 핵안보를 중요시 하는 방향으로 산업계 및 기관 차원의 문화를 개선해 나감.
- 각국의 관련 시설이 핵물질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인적자원을 갖추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체제를 구축함.
- 핵탐지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집행 및 세관 요원들 간의 공동 훈련을 실시함.

정상성명의 주요 내용과 작업계획의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표 IV-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IV-1 정상성명 및 작업계획 주요내용¹²⁶

조항	정 상 성 명	작 업 계 획
전문	핵안보 중요성 평가 및 정상회의 개최 의의	- 관련사항 없음
1항	핵안보 강화에 있어 국가 책임 및 역할	- 핵안보 관련 효과적인 국가 규제조치 수립 및 유지 - 핵안보 규제기관의 독립성 유지 - 물리적 방호 전문가 확보 - 국가 규제제도 이행강화 및 이를 위한 국가검사 시행
2항	핵안보 관련 국제협력 증진	- 핵안보 체제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증진

I
II
III
IV
V
VI
VII

¹²⁶- 유호식, “국제 핵안보 동향과 한국의 역할,” 비확산포럼 발제문, 2011년 3월 10일.

조항	정 상 성 명	작 업 계 획
3항	핵물질 관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의 통합관리 - 운송 중 핵물질 방호에 특별한 주의 - 이용이 저조한 원자력시설 내 핵물질 제거 및 처분 - 분리 플루토늄 방호 및 계량관리 강화 - 고농축 우라늄 연료를 저농축 우라늄으로 교체 - 고농축 우라늄 사용이 필요없는 기술개발
4항	국제 규범의 성실한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테러 억제협약 및 개정 핵물질 방호협약 관련 △협약 보편성 추구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회원국간 논의 장려 △방호협약 비준시까지 협약상 의무 이행 위해 노력
5항	개정 핵물질 방호협약 및 핵테러 억제협약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보리 1540관련 △1540위원회 활동지지 △1540위원회에 대한 성실 보고 △1540 결의 해석시 INFCIRC/225 참고 △1540 위원회를 통한 기술지원 제공
6항	IAEA 역할 인정 및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안보 시리즈 제작에 적극 참여 - INFCIRC/225 개정문서 조속 채택 - IAEA 핵안보 관련 자문서비스 유용성 인정 - DBT 설정과 관련된 IAEA 문서활용
7항	국제공조 체제의 역할, 기능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체제(G-8 글로벌 파트너십, GICNT)에 대한 상호보완성 강화, 중복방지 및 국제공조체제에 대한 자발적 참여 증대
8항	정보교환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	
9항	불법거래 대비 국제협력 및 정보교환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물질 불법거래, 핵테러 행위를 기소할 수 있는 국내법 완비 - 정보교환에 있어 기밀성 보호 - 핵안보, 핵테러 등에 대한 정보교환 확대장려 - 핵물질 불법거래 탐지, 예방기술 역량강화 - 핵감식 국가자료실 구축 협력 - 핵물질 불법거래 및 테러예방을 위한 법 집행기관간 협력 확대

조항	정 상 성 명	작 업 계 획
10항	민간부문과의 협력	- 높은 수준의 방호문화 유지 및 원자력사업자에 의한 강력한 핵안보 조치 이행지속을 위해 협력 - 민간/공공 분야에서 관련기구(WINS) 활용 - 신규시설 계획, 건설, 운영시 적절한 물리적 방호조치를 반영토록 원자로 설계
11항	원자력시설의 평화적 이용보장	- 관련사항 없음
12항	방사성물질 안보강화	- 방사성물질의 안보강화를 위해 노력
결어	핵안보 강화노력 경주, 향후 후속회의 계획	- 관련사항 없음

(4) 각국의 “선물꾸러미”(House Gifts)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여한 많은 나라들이 핵안보정상회의의 취지에 부합하는 개별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고 워싱턴에 선물꾸러미를 들고 왔다. 홀게이트 WMD 테러·위협 감소 담당관은 각국이 약속한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¹²⁷

첫째, 캐나다, 칠레, 카자흐스탄, 멕시코, 우크라이나 및 미국은 핵테러 위협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핵물질의 제거 및 폐기를 약속했다. 예를 들어 미·러 양국은 각각 34톤씩 모두 68톤의 플루토늄(핵탄두 1만 7,0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을 폐기하는 의정서를 체결했는데,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사업이 이번 에 성사된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에서 독립하고 핵무기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163kg의 고농축우라늄을 전량 폐기하겠다고 선

¹²⁷- *Press Briefing by Ben Rhodes,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for Strategic Communications; Gary Samore, Senior White House Coordinator for WMD Counterterrorism and Arms Control; and Laura Holgate, Senior Director for WMD Terrorism and Threat Reduction.*

언했고, 칠레도 보유하고 있던 고농축우라늄 18kg을 2010년 3월 전량 폐기했다고 발표했다.

둘째, 칠레, 카자흐스탄, 멕시코 및 베트남은 무기급 핵물질의 출처가 될 수 있는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전환을 결정했다. 예를 들어 멕시코는 원자로의 연료로 고농축우라늄 대신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 선언이 채택됐다. 셋째, 러시아가 플루토늄 생산용 원자로를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넷째, 많은 나라들이 핵테러 방지에 관련된 국제조약의 비준을 약속하거나 비준절차를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여기에는 미국도 포함됨).

다섯째, 모든 국가가 IAEA 활동을 지원하고 IAEA와 협력할 것을 약속했고, 몇몇 나라는 자국시설에 대한 IAEA의 핵안보 자문서비스를 받았거나 받겠다고 약속했다. 핀란드는 “물리적 방호 자문 서비스”(International Physical Protection Advisory Services: IPPAS)를 이미 받았으며, 프랑스, 영국 및 미국은 자문서비스를 받겠다고 선언했다.

여섯째,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미국, 영국 및 한국은 “능력구축”(capacity-building)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거나 훈련센터를 설립하기로 약속했다. 한국, 중국, 일본은 핵안보정상회의의 합의사항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센터를 설립하고 핵탐지와 핵감식에 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세 나라 핵센터의 기능이 증폭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협력도 진행 중이다.

일곱째, 아르헨티나, 필리핀, 태국, 베트남은 자발적인 국제협력체인 “세계핵테러방지구상”과 “G-8 글로벌 파트너십”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여덟째, 아르메니아, 이집트, 말레이시아는 국가차원

에서 핵안보와 수출통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파키스탄 칸 박사의 핵 밀거래 거점으로 이용된 말레이시아는 자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강화해 핵기술의 불법 유출이나 도난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아홉째, 핵물질의 불법거래를 탐지하는데 있어서의 진전도 있었다.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UAE는 항로를 통한 핵기술과 핵물질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메가포트 구상”(Megaport Initiative: MI)에 참여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일본, 카자흐스탄, 한국,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핵안보를 지지하기 위한 국내 혹은 지역 차원의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5)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위한 주문사항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2년 뒤 제2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회의 주최에 응해준 한국에게 다음과 같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는 한국의 지역적, 세계적 리더십을 반영하는 것이며 한국 국민과 이대통령이 회의개최 의무를 떠맡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¹²⁸ 제1차 회의에서는 제2차 회의에서 다뤄져야 할 사항들에 대한 주문도 있었는데, 관련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차 회의 때 참석하지 못한 국가들에게 핵안보정상회의의 취지와 목표 및 제1차 회의의 성과를 설명하고, 제2차 회의 참여를 유도한다. 둘째, 제2차 회의 때 각국 정상들은 서울에 모여서 제1차 회

¹²⁸-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is reflects South Korea’s leadership, regionally and globally, and I thank President Lee and the South Korean people for their willingness to accept this responsibility.” *Remarks by the President at the Opening Plenary Session of the Nuclear Security Summit.*

의 이후 2년 간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핵안보를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set new goals for nuclear security)하도록 한다.¹²⁹ 셋째, 앞으로 핵안보정상회의를 각국이 선물꾸러미를 준비해오도록 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이와 관련, 세이모어 WMD 대테러·군비통제 조정관은 “우리는 1차 회의에서 하나의 패턴을 정립했으며, 다음 회의 때는 각국이 더 크고 더 많은 선물꾸러미를 갖고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¹³⁰

넷째, 확산에 가담한 개인이나 국가 지도자를 국제재판에 회부하는 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 간에 많은 토론이 있었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세이모어 백악관 WMD 조정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 제안이 추후 논의의 가치가 있는 재미있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라고 정리했으며, 각국 정상들은 2012년 정상회의까지 전문가들이 논의해야 할 문제의 하나라는데 동의했다고 한다.¹³¹

¹²⁹- *Key Facts about the National Security Summit.*

¹³⁰- *Press Briefing by Ben Rhodes,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for Strategic Communications; Gary Samore, Senior White House Coordinator for WMD Counterterrorism and Arms Control; and Laura Holgate, Senior Director for WMD Terrorism and Threat Reduction.*

¹³¹- 원문은 다음과 같다. “What President Obama said to summarize the discussion is that this was an interesting idea, a creative idea; certainly merited further discussion. And the leaders agreed that this is one of the things the experts will be discussing as we continue to meet between now and the 2012 summit.” *Ibid.*

V.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사전 준비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끝난 후 제2차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네 번의 교섭대표회의(2010년 11월 아르헨티나, 2011년 10월 핀란드, 2012년 2월 인도, 2012년 제2차 정상회의 직전 한국)와 두 번의 부교섭대표회의(2011년 3월 비엔나, 2011년 6월 한국)가 예정되어 있다.

1. 1차 교섭대표회의

1차 교섭대표회의는 2010년 11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렸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주로 논의되었다.

- 핵물질 불법거래에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핵물질 출처와 거래 경로를 파악하는 등 불법거래 수사에 공조하는 방안,
- 고농축우라늄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 규범을 확립하는 문제,
- 시설종사자에 의한 악의적인 활동, 즉 ‘내부자 위협’에 대한 대응 등 개인의 신뢰성이 핵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핵안보에 관련된 문화를 정착시키는 문제,
- HEU와 플루토늄 및 핵무기 제조에 관한 민감정보의 보안 문제,
- 핵안보 관련 국제기구와 국제협의체 간에 조율과 공조를 강화하는 문제,
- 핵물질의 운송 과정에서 핵안보를 강화하는 문제,
- 추출된 플루토늄의 계량관리와 방호조치를 강화하는 문제.

2. 1차 부교섭대표회의

1차 부교섭대표회의는 비엔나의 IAEA 본부에서 열렸는데, 1차 교섭대표회의에서 제안된 9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를 주도하는 국가(선도

I
II
III
IV
V
VI
VII

국)가 발제를 하고 참가국들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의 제별로 선도국이 제안한 내용과 토의결과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¹³²

〈① 정보보안 (Information Security), 영국〉

안보문화의 증진, 정보보안에 관련된 지침 개발, 국제규범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부, 학계, 산업계를 포괄하는 보안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정보보안 시스템상의 취약점을 확인하고 보안에 관련된 기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영국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① 국내외 자문기구 설치, ② IAEA, U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③ 국제 규범화를 통한 법체계 구축.

참가국들은 정보보안이 대학 등에서의 학문적 연구와 적절한 기술·지식의 취득이나 교류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포괄적인 정보보안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HEU와 플루토늄 관련 정보의 보안을 강화해서 외부유출과 핵테러를 막기 위해 포괄적인 정보보안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편, 중국과 브라질 등 일부 참가국들은 내부사정을 이유로 국제규범화된 법체계 구축에 반대하면서 각국이 자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② 고농축 우라늄 관리지침 개발(HEU Guideline), 프랑스〉

프랑스는 IAEA의 플루토늄관리지침(INFCIRC/549)에¹³³ 준하는

¹³²-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유희식 실장과의 의견교환, 2011년 4월 18일.

¹³³-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Plutonium*, INFCIRC/549 (Vienna: IAEA, March 16, 1998).

HEU 관리지침이 필요하다고 보고 HEU 관리와 이용의 최소화를 위한 IAEA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① HEU 보유국의 관리 책임과 이용에 따른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이행조치의 틀 제시, ② 이행조치의 결과와 연간 산업용 HEU 재고량에 대한 국가 보고서 발간, ③ 국가보고서를 HEU 수출입시 보증 문서로 활용.

이에 대해 HEU에 대한 규제가 의학, 농업 등 민수용 수요가 많은 방사선원(RI)의 수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런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관련 지침을 만들 때, HEU의 이용과 보유 자체를 최소화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HEU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지원과 연구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③ 운송중 핵물질 방호(Transportation Security), 일본〉

운송중 핵물질의 방호는 일본이 선도한 분야인데,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IAEA 문서(INFCIRC 225)에서는 핵물질의 위험도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¹³⁴

- ‘1등급’은 핵무기제조에 전용하기 가장 쉬운 핵물질로서 2kg 이상의 조사전 플루토늄, 5kg 이상의 조사전 우라늄-235, 2kg 이상의 조사전 우라늄-233이 해당된다.
- ‘2등급’은 주로 사용후핵연료가 해당되는데, 500g~2kg의 조사전 플루토늄, 1kg~5kg의 조사전 우라늄-235(농축도 20% 이상),

¹³⁴-IAEA, *Nuclear Security Recommendations on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INFCIRC/225/Revision 5), pp. 19~20.

I
II
III
IV
V
VI
VII

10kg 이상의 조사전 우라늄-235(농축도 20% 이하), 500g~2kg의 조사전 우라늄-233 등이다.

- ‘3등급’은 일반적인 사용전핵연료가 해당되는데, 15g~500g의 조사전 플루토늄, 15g~1kg의 조사전 우라늄-235(농축도 20% 이상), 1kg~10kg의 조사전 우라늄-235(농축도 20% 이하), 15g~500g 이하의 조사전 우라늄-233 등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1등급과 2등급 핵물질에 대해서만 운송시에 방호 조치를 취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3등급에 대해서도 방호조치를 가동한다. 즉 대전의 핵연료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새 핵연료를 전국의 원자력발전소로 옮길 때 방호조치를 적용하는 것이다. 일본은 선도국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① 국내 수송안보 조치에 관련된 현황 보고서 작성, ② 수송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제협력 조치 강구, ③ 수송운영에 관련된 기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강구.

회의에서는 핵물질 운송과 관련한 운송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하는 문제와 국제협력 및 정보공유를 위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문제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핵물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제3국에 경유하는 경우 해당국가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기밀유출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즉 운송의 투명성과 정보보안의 균형 문제인 것이다. 핵물질 운송에 관련된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또한 핵물질의 운송, 장전 및 인출 과정에서 탈취나 도난의 취약성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시설 설계에서부터 이러한 방호개념을 넣자는 “안보개념을 반영한 설계”(Security by Design) 개념이 강조되었다.

〈④ 핵물질 불법거래 대응(Illicit Trafficking), 요르단〉

요르단은 핵물질 불법거래에 대한 대응에 대한 논의를 선도했다. 구체적으로 핵테러 예방을 위해 핵물질과 방사성물질의 분실과 도난 및 불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 ① 국가별로 핵테러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핵테러 대응 연락관을 지정함,
- ② 국가별 핵테러 대응 전담팀의 역할과 핵물질 불법거래에 대한 대응에 관한 국가역량 보고서를 제출함,
- ③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인터폴(INTERPOL)을 정식 구성원으로 초청함.

참가국들은 핵테러 대응팀을 신설하기 보다는 각국의 국내사정에 맞게 기존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인터폴의 전문성과 정보력을 높이 평가하고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인터폴을 초청하는데 찬성했다. 이와 함께 핵물질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⑤ 핵감식(Nuclear Forensics), 네덜란드〉

핵감식 의제를 선도한 네덜란드는 각국의 핵감식 역량 구축을 위해서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 ① 초동 대응자, 과학자 및 정책 입안자의 핵감식 인식 제고, ② 초동 대응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③ 조사절차의 수립, ④ 원자력연구기관과 핵감식연구소 간의 협력체계 구축. 또한 핵감식 관련 협력과 정보교환을 위한 국제협의체를 구축해서 핵감식 조사방법의 최적관행을 목록화하고, 기존의 이용 가능한 핵감식 역량을 체계화할 것을 제안했다. 정보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보편적인 핵감식 용어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참가국들은 핵안보정상회의에서의 핵감식 관련 활동이 GICNT 등

I
II
III
IV
V
VI
VII

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활동과 중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핵감식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으나 관련 정보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핵감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⑥ 핵안보 문화 정착(Security Culture), 러시아〉

러시아는 핵안보 문화의 정착에 대한 논의를 선도했다. 원자력 종사자들이 핵안보 강화를 위한 마음가짐을 갖춰서 긍정적인 핵안보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① 2010 작업계획의 이행 보고서 자국의 핵안보 문화가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포함함, ② IAEA 핵안보 행동계획을 통해 핵안보 문화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개발함, ③ 국가 간에 핵안보에 관련된 최적의 관행을 서로 교환함.

참가국들은 핵안보 문화를 정착하는데 있어서 해당 시설의 최고 경영자의 책임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군사시설에서도 핵안보 문화를 증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핵국들은 핵안보 논의를 민수용에 국한하자고 주장했다.¹³⁵ 아울러 핵안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최적의 관행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¹³⁵- 일부 국가가 군사시설에 대해서 핵안보 문화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지만 군사시설과 군사용 핵물질은 핵안보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유호식 실장과의 의견교환, 2011년 4월 18일.

〈⑦ 방사성물질 방호(Radioactive Source Security), 독일〉

방사성물질의 방호 의제를 선도한 독일은 각국이 관련 국제규범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 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IAEA의 핵물질 불법거래 데이터베이스에 참여하고 국내 방사성물질의 목록 구축을 통한 국가 간 정보교류를 촉진할 것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사용후 방사성물질의 안전한 처분과 송환 등 최종처리 문제를 논의했고, 방사성물질을 다른 나라로 이전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신기술 개발 문제도 검토되었다.

참가국들은 방사성물질의 보안과 관련한 IAEA의 역할을 강조했다.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방사성물질을 핵안보의 의제로 삼을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대립했는데, 대체적으로 ‘1등급’에 해당하는 고위험 방사선원만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많았다. 고위험 방사선원이란 “방사성물질의 안전과 안보에 관한 행동지침”(Code of Conduct on the Safety and Security of Radioactive Sources)에서 정한 1등급 물질이다. 1등급 방사성물질은 안전하게 관리·방호되지 않으면 몇 분간 취급하거나 접촉한 사람에게 항구적인 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 정의되는데, 사람이 몇 분에서 한 시간 정도 이 물질에 노출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¹³⁶ 행동지침은 26개 방사성핵종 별로 등급 1에서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방사선 정도를 정했다.¹³⁷

〈⑧ 조약비준(Treaty Ratification),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핵안보에 관한 다양한 국제규범을 효율적으로 이행하

¹³⁶- *Code of Conduct on the Safety and Security of Radioactive Sources*, p. 15.

¹³⁷- *Ibid.*, p. 16.

I
II
III
IV
V
VI
VII

기 위해서 관련 국내법 체계를 정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델 국내법’(Model National Legislation)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국내적으로 관련 부서 간의 업무중복을 피하고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는 취지에서였다.

참가국들은 나라별 상황이 다른 만큼 ‘모델 국내법’이 필요하지만 이미 IAEA가 핵안보 체제를 갖추지 못한 나라를 위해서 “핵 법규”(Nuclear Law)라는 문서를 만들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¹³⁸ 아울러 국제규범을 국내법적으로 적용할 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과 자발적인 규범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9〉 국제협력(Coordination), 파키스탄

파키스탄은 국제협력 의제를 선도하면서 다양한 핵안보 관련 국제기구와 협의체간에 상호 보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협력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① 조정기구로서 IAEA의 역할을 강화, ② 핵안보정상회의의 참가국이 발표한 의견을 참가하지 않은 국가들과 공유, ③ IAEA 사무총장과 다른 국제기구의 대표가 핵안보정상회의를 위한 준비회의에 참여, ④ 훈련센터를 설립·강화해서 다른 나라에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핵안보 인식을 제고.

참가국들은 GICNT, WINS 등 핵안보 분야의 기존 협력체와 민간단체 간에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6개국(일본, 중국, 한국, 카자흐스탄, 인도, 이탈리아)이 설립을 제

¹³⁸- Carlton Stoiber, Alec Baer, Norbert Pelzer, and Wolfram Tonhauser, *Handbook On Nuclear Law* (Vienna: IAEA, 2003).

안한 핵안보 교육훈련센터의 역할이 중복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3. 한국의 준비상황

한국 정부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첫 번째 조치로 2010년 10월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외교 통상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설립했다.¹³⁹ 준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등 13명의 정부위원등과 원자력 관련 4개 기관(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준비위원회는 2011년 3월 25일 위원장인 김황식 국무총리의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행사 준비상황에 점검과 부처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2011년 3월 준비위원회가 활동에 착수함과 동시에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전과 행정을 담당할 준비기획단을 발족했다. 기획단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단장과 조희용 전 주스웨덴 대사를 부단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공무원들로 조직되었다.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의제와 성명 등 결과문서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사항들은 외교통상부가 중심이 되어 준비하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각국이 지정한 교섭대표(Sherpa)와 부교섭대표(Sous Sherpa)간의 회의를 통해 준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섭대표는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이다.

¹³⁹-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외교통상부 정책메일 제176호, 2011년 4월 18일.

I
II
III
IV
V
VI
VII

VI.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서울 개최

우리정부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다.¹⁴⁰

-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개최한 정상회의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회의로서 G20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높아진 국격을 더욱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다.
- 2012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매우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50여 개국 정상과 대표들이 한국에 모여 핵테러라는 시급한 국제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 한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애호하는 모범적이고 책임 있는 원자력 선진국이라는 인식을 공고히 하고, 우리나라의 높은 핵안보·안전 수준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 핵테러와 방사능테러 위협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국내의 핵안보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다.

이 밖에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한국이 제2차 회의의 개최지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북한의 핵개발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커진 한·미 동맹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한국이 미국의 대통령과 미국 국민들이 실제적인 안보위협으로 인식하는 핵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회의의 개최국으로서 핵테러 방지의 최전선에 나서서 오바마 대통령이 시작한 범세계적 운동을 미국과 함께 선도해 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 간의 전

¹⁴⁰- 위의 글.

면 핵전쟁 위협이 줄어들면 핵테러가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부상하는 등 국제안보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안보지원을 받던 수혜국의 처지에서 미국의 안보를 위해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나라로 거듭났다는 것을 국내외적으로 입증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이는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 당시의 월남전 참전에 버금가는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포함한 주요 현안에서 한·미 동맹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유치는 한·미 동맹 60년 역사에서 하나의 획을 긋는 이정표적인 사건으로서 핵테러를 핵심 위협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국제안보 패러다임 속에서 한·미 관계의 새로운 틀을 짜고 건실한 토대를 구축하는데 의미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제1차 정상회의에 북한과 이란 그리고 시리아는 초청받지 못했다. 북한은 국제사회를 기만하며 핵을 개발했고, 이란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으며, 시리아는 북한의 지원을 받아 신형 5MWe 원자로를 건설하다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좌절되었다. 세 나라가 북한을 고리로 먹이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지적도 많다. 지난 20년간 국제사회의 간곡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모든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핵을 개발한 북한에 대해서 유엔안보리는 6·25 전쟁 이후 가장 강력한 경제제재라는 준엄한 채찍을 들었다. 시리아에 대해서는 IAEA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란에 대해서도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지금의 북한정권은 핵안보정상회의의 중요한 토론대상이자 경계의 대상이다. 북한 핵문제는 이미 한반도를 넘어 세계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래다. 파키스탄, 시리아와의 비밀 핵협력이 사실로 드러났고, 최근에

는 미얀마와의 핵거래 의혹도 제기되는 등¹⁴¹ 북한은 전세계 핵확산의 중심에 서 있다. 설혹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테러를 자행하지는 않더라도 영변에서 흘러나온 핵물질이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집단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유치는 북한 핵문제 해결 차원에서도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핵확산의 주역인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핵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에서 이 회의가 개최된다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북한정권으로서는 경제제재보다 더 뼈아픈 외교제재이자 정치제재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김정일 정권도 핵군축이라는 국제사회의 대세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남북한 정상은 두 손을 맞잡고 북한 비핵화를 약속하면서 한반도가 ‘핵무기 없는 세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선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북핵문제의 논의 범위

핵안보의 기본취지가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핵안보와 북핵폐기는 사실상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미·러 양국이 무기급 플루토늄 감축을 선언했지만¹⁴² 그 자체가 핵군축은 아니며,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도 핵안보 차원의 합의는 아니다. 하지만, 북핵위협의 직접적인 피해당사국인 한국이 주최하는 회의에서 북핵문제를 아예 논외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¹⁴¹- Jay Solomon, “Myanmar’s links with Pyongyang stir nuclear fear,” *Wall Street Journal*, December 17, 2010.

¹⁴²- 미·러 양국은 각각 34톤씩 모두 68톤의 플루토늄(핵탄두 1만 7,0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을 폐기하는 의정서를 체결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직후 열린 제43회 과학의 날을 맞아 가진 기념 간담회에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북한과 이란, 두 나라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¹⁴³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의 핵안보 전문가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을 차별화시킬 수 있고, 북한과 같은 이탈국가 문제를 다룰 특별 세션을 가질 수 있으며, 북핵문제에 관한 성명을 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¹⁴⁴ 하지만, 남과 북의 단순 차별화를 넘어서 북핵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회담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핵문제에 관한 특별 세션도 참가하는 나라의 수가 적거나 공동성명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혹은 합의해도 두루 몽실한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핵안보 차원에서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물론 한 발 더 나아가 지역안보와 세계평화의 차원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핵폐기를 촉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핵문제가 핵안보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가 개발되어야 한다. 북핵문제에 대한 기존의 입장은 북핵은 NPT 체제의 첫 번째 기동인 핵비확산 문제, 즉 북한정권에 의한 의도적인 수평적 확산과 세 번째 기동인 핵군축 문제, 즉 수직적 확산을 저지하는 문제로서 핵안보와는 무

¹⁴³ 『연합뉴스』, 2010년 4월 21일.

¹⁴⁴ 필자가 참석한 다음 회의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 *US-Japan-ROK Nuclear Dialogue Toward A Common Trilateral Approach*, organized by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and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Washington, D.C., February 28~ March 1, 2011.

관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범세계적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큰 오류는 없다고 본다. 다만, 북핵문제는 단순한 수평적, 수직적 확산을 넘어서 국제사회의 규범을 무시하는 이탈국가와 그와 비슷한 불량정권과 비국가 행위자에게 핵기술을 확산하는 “무책임한 확산”(irresponsible proliferation)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무책임한 확산과 핵물질·핵기술 불법 거래는 핵안보의 직접적인 대상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2000년대 초부터 시리아에 5MWe 원자로의 개량형을 건설한 것은 북한이 핵기술을 확산해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북한이 2010년 11월 초 공개한 원심분리기 시설 역시 핵기술과 핵물질이 제3국에서 북한으로 유입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은 1990년대 중반부터 파키스탄과의 협력을 토대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중동 여러 나라에 미사일을 확산한 것은 물론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들과 긴밀한 군사협력을 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이탈국가 북한이 핵기술과 핵물질을 무책임하게 확산하고 이것이 핵테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북핵문제와 핵안보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핵문제와 핵안보의 또 다른 접점은 안보와 안전이 중복되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안전과 안보는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상당히 중첩성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상호 보완적이고 선순환적인 상관관계에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북한 핵시설의 안전 문제도 안보의 관점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안전은 주로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사고”(accident)에 대처하는 것인데 비해, 안보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자행한 사고와 재해에 대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안보를 “인공적인 안전 문제”(artificial safety problem)로 규정할 수 있

I
II
III
IV
V
VI
VII

을 것이다. 반면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자연 재해에 의한 사고는 “자연에 의한 사보타지”(sabotage by nature)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의 핵무기와 핵무기 제조에 직접 관련된 시설을 핵안보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핵비확산체제라는 큰 틀에서 볼 때, 핵안보 대상에 핵무기와 핵무기 제조 및 운영에 관련된 시설과 장비가 포함되는 것이 사실이다.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을 제외한 모든 핵보유국이 참가했고 핵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플루토늄 감축을 약속하는 등 관련 조치가 있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핵안보의 구도는 아래 <표 VI-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¹⁴⁵

표 VI-1 핵안보의 기본구도



하지만, 비핵국인 한국이 주최하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무기 관련 사항은 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국보다 훨씬 많은 수의 비핵국이 참가하는 회의에서 핵무기 관련 사항을 공통의 토

¹⁴⁵- 유호식, “국제 핵안보 동향과 한국의 역할,” 비확산포럼 발제문, 2011년 3월 10일.

의 주제로 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첫째, 비핵국이 주최하는 회의에서 핵무기에 관한 사항이 자세하게 논의 되는 것에 핵국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¹⁴⁶ 둘째, 미·러 양국의 플루토늄 감축은 핵국 간의 핵안보 협력이긴 하지만 일회성 사건으로 굳이 핵안보정상회의 틀에 구속시킬 필요가 없다. 셋째, 미·러를 제외한 다른 핵국들도 핵안보정상회의 취지에 맞게 자체적으로 핵안보 강화 조치를 취하겠지만 자국의 핵무기 안보에 관련된 조치를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자세하게 보고하지도 않을 것이다. 결국, 의제 자체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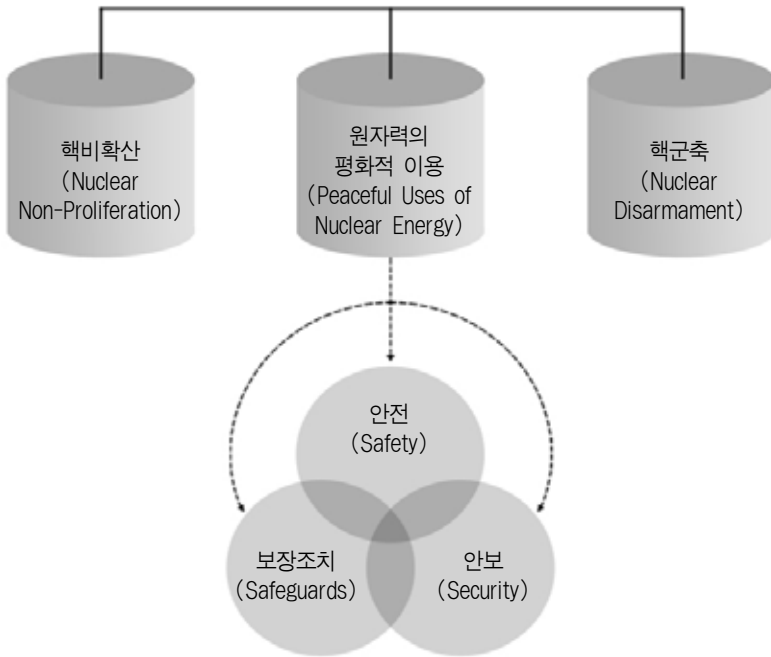
넷째,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핵무기와 무기급 핵물질에 핵안보를 적용하는 것은 북한의 핵능력을 사보타지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런 논의 자체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다섯째, 국제사회의 이탈국가로서 대남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 자체가 다른 나라의 핵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협국임에 유념해야 한다. 핵안보의 지원대상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인 것이다. 여섯째, 비핵정책을 견지하는 한국이 주최하는 회의는 핵무장을 포기한 비핵국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안보 문제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한국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핵국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비핵국들이 참가하는 회의에서 논의하는 핵안보 문제의 성격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다.

¹⁴⁶ 예를 들어 제1차 정상회의 준비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이 군사용 핵물질에 대한 핵안보 필요성을 제기했고 북한과 이란 핵문제를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의제로 채택 되지 않았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유호식 실장과의 의견교환, 2011년 4월 18일.

I
II
III
IV
V
VI
VII

요약하면 핵비확산체제와 보장조치·안전·안보(‘3S’) 및 ‘3S’ 구성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핵안보의 성격과 의제의 범위를 <그림 VI-1>에서와 같이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적으로 ‘3S’를 NPT 체제의 두 번째 기둥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산하에 위치하는 하부요소로 파악하는 것이다. 즉 ‘3S’는 비핵국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때 야기될 수 있는 다음 세 가지 문제를 다루는 개념으로 그 성격을 규정한다: ① 핵물질의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 (보장조치), ② 의도되지 않은 사고와 재해로 인한 피해 (안전), ③ 핵물질의 악의적인 처분과 사보타지 (안보).

그림 VI-1 핵비확산체제와 ‘3S’의 상관관계



VII. 한국의 전략과 대책



1. 고려사항

2009년 프라하 연설에서 4년 내에 위험한 핵물질 관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는 백악관이 2010년 5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보고서는 핵안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는 2013년 말까지 방호와 계량관리의 강화,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의 확대 그리고 민감한 물질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서 전세계의 모든 취약한 핵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집중된 국제적 노력을 완수하고자 한다.¹⁴⁷

일본과 호주가 주도하는 “국제핵비확산군축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ICNND)는 2009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2010년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새로운 합의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합의된 방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제하고,¹⁴⁸ 제1차 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의제로서 여러 가지 사항을 권고한 바 있다. 아래의 ICNND 권고사항은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유효한 방안들이다.¹⁴⁹

¹⁴⁷- 원문은 다음과 같다. “By the end of 2013, we will seek to complete a focused international effort to secure all vulnerable nuclear material around the world through enhanced protection and accounting practices, expanded cooperation with and through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new partnerships to lock down these sensitive materials.” *National Security Strategy*, p. 24, <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rss.../national_security_strategy.pdf>.

¹⁴⁸-International Commission on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Synopsis: a comprehensive action agenda,” *Eliminating Nuclear Threats A Practical Agenda for Global Policymakers*, December 2009, <www.icnnd.org/reference/reports/ent/synopsis.html>.

¹⁴⁹-International Commission on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협약의 2005년 개정안 비준·발효,
- 최신의 IAEA 핵안보 가이드라인의 신속한 채택,
- 민감한 핵물질의 국내 규제와 관련된 안보리결의안 1540호의 효과적 이행,
- 핵안보와 수출통제 법규 위반자를 처벌하겠다는 결의를 다짐.
- 핵무기, 핵물질 그리고 핵기술의 안전을 위한 CTR 및 관련 프로그램의 이행을 가속화,
- 핵안보 실현을 위한 적절한 예산배정을 약속,
- 핵안보에 관한 정보와 경험의 국제적 공유를 확대,
- 정보의 공유 및 다른 나라들의 정보 해석과 처리를 돕기 위한 정보취급센터 지지,
- GICNT와 G8 글로벌 파트너십의 확대를 통해 국제적인 역량강화를 약속,
- 민수용 HEU를 포함하여 핵분열성 물질의 안전한 관리, 모니터링, 민수용으로의 전환 및 처분을 위한 방안 마련에 협력.

한편, 핵안보 관련 NGO들의 집합체인 “핵물질관리그룹”(Fissile Material Working Group: FMWG)을¹⁵⁰ 이끌고 있는 룡고(Kennteh Luongo)는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정상회의의 의제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2차 정상회의의 의제로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¹⁵¹

“13. Sustaining an effective counter-terrorism strategy” *Eliminating Nuclear Threats A Practical Agenda for Global Policymakers*, December 2009, <www.icnnd.org/reference/reports/ent/part-iii-13.html>.

¹⁵⁰- FMWG는 미국 내 32개 연구소 및 NGO로 구성되어 있고, 나이지리아, 요르단 등 12개국의 NGO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첫째, 핵분열성 물질의 보안을 위한 국제적인 “큰 틀의 합의”(Framework Agreement)를 이끌어 낸다.¹⁵² 유엔 안보리결의안 1887호가 핵비확산 분야에서 국제사회가 도출한 “큰 틀의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테러 등 취약한 핵물질이 사람에게 주는 위협을 파악하고 이런 위협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시작하자고 선언할 수 있을 것이다. 핵안보에서의 큰 틀의 합의는 핵테러억제협약, 폭파테러억제협약 및 테러재정지원억제협약¹⁵³ 등 핵테러 관련된 기존의 협약과 합의 및 안보리결의안을 승인하고 CTR, G-8 파트너십, PSI 및 GICNT 등 핵안보에 관련된 잠정협약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IAEA의 기준에 의거하여 핵물질과 방사성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핵안보에 관련된 민·관 파트너십을 장려하면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

둘째, 핵안보를 위한 IAEA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면에서 강화한다.

- IAEA가 목표로 하는 연간 1억 5천만 불의 핵안보 관련 예산이

¹⁵¹- Kenneth Luongo, “Making the nuclear security summit matter: an agenda for action.”

¹⁵²- 이와 관련 미국 백악관의 홀게이트 WMD 테러·위협감소 담당관은 2011년 2월 동경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핵안보에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서와 같은 인증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산업계에서 품질관리 수준을 인정하는 인증제도와 같이 핵안보 관련 방호조치의 수준을 점검하는 인증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유희식 실장과의 의견교환, 2011년 4월 7일.

¹⁵³-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errorist Bombings*, December 15, 1997, <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IND&mtdsg_no=XVIII-9&chapter=18&lang=en>.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December 9, 1999, <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IND&mtdsg_no=XVIII-11&chapter=18&lang=en>.

확보되도록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가하는 선진국 대표들이 IAEA에 핵안보 기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다.¹⁵⁴

- 참가국들이 자국의 핵안보 전문가를 양성하여 IAEA에 파견한다.
- IAEA 차원의 노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핵안보 관련 양자 및 다자 회담 개최를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셋째, 지구적 차원의 핵물질안보 로드맵을 구축한다. 로드맵은 시급하게 핵물질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설을 파악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해서 위협을 줄여나가는 계획서이다. 아울러 핵테러 예방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과학협력 계획과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넷째, 전세계적으로 HEU와 플루토늄의 재고를 집중관리하면서 줄여나간다. 이들 물질에 대한 관리를 분산배치에서 집중관리로 바꿔 물질이 저장된 시설의 수를 줄여나가고, 아울러 HEU의 경우 저농축우라늄(Low Enriched Uranium: LEU)으로 전환해서 저장하거나 사용해서 소모해버린다.

다섯째, 유엔 안보리결의안 1887호(25항)에서도 지적했듯이, HEU를 사용하는 연구용원자로와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을 LEU를 사용하는 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HEU의 기술적, 경제적 사용 범위를 최대한 줄인다. 더 나아가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민수용

¹⁵⁴- IAEA의 핵안보 관련 예산은 대부분 정규 예산으로 충당하는 보장조치나 안전 분야와 달리 거의 회원국의 자발적인 기금에 의존하고 있다. IAEA 연간 예산의 약 25%를 미 국무부가 담당하는데, 2008년의 경우 IAEA 전체예산 3억 9천만 불 가운데 9천 4백만 불을 제공했고, 자발적인 기여금으로 5천 2백여 만 불을 추가로 지출했다. 이와 별도로, 미 에너지부 산하의 “국가핵안보처”(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NNSA)는 5천 3백 여 만 불을 기부했다. NNSA, “NNSA contributions to the IAEA,” April 2009, <www.nnsa.energy.gov/news/2326.htm>.

HEU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궁극적으로 근절하는 시간표에 합의하도록 한다.

여섯째, 도심지에 위치한 병원에서 사용하는 방사성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미국의 국가핵안보처(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NNSA)는 펜실베니아 대학병원과 함께 병원 내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보안 및 지역당국과의 협력에 관한 시험프로젝트를 시행한 바 있다.¹⁵⁵ 미국의 경우 도심지에 위치한 500여 개의 병원이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데, 관련 건물을 관리하는데 25만 불 정도가, 전체적으로는 1억 2천 5백만 불의 예산이 든다고 한다.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참가국들이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도심지의 병원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후속 협의에서 마련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본방향

가. 핵테러에 대한 한국의 입장 정립

한국은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핵테러의 심각성과 핵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더 나아가 국가안보와 세계평화의 관점에서 핵테러의 위험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핵테러 예방을 위한 국제협력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초청을 받아 수동적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핵안보를 통한 핵테러 방지’라는 의제 자체가 국가적 관

¹⁵⁵-NNSA Public Affairs, “NNSA, University of Pennsylvania and Philadelphia Police Raise the Bar for Radiological Security,” March 27, 2009, <www.nnsa.energy.gov/news/2301.htm>.

I
II
III
IV
V
VI
VII

심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한국이 핵테러 위협과 핵물질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확실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고, 미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논리가 개발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장소를 불문하고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핵테러는 인류에 대한 위협이라거나 21세기에 촘촘히 네트워크로 얽혀 있는 지구촌 사회에서 한 지역에 대한 핵테러가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전세계에 수백만의 교민이 살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세계 각지의 교민 안전을 고려하는 차원에서도 핵테러의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한 논리이다. 9/11 테러 당시 현장에서 희생된 한국인의 수가 93명에 달한다는 점도 알려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고 핵확산을 자행했으며 천안함 사태, 연평도 도발 등 대남 무력공격을 감행하는 현실에서, 한반도가 결코 핵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나.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회의 추진

(1) 핵무기 논의 제외

비핵정책을 견지하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을 포기한 비핵국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안보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수의 비핵국이 참가하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핵무기 관련 사안은 핵국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오는 “선물꾸러미”(House Gift) 선에서 해결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사용되는 핵물질의 안보에 논의의 중점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해야 비핵국으로서 주최국인 한국이 회의를 주도하면서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회의 추진’이란 원칙에 맞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북핵폐기에 대한 과도한 기대도 차단할 수 있다. 회의 주제가 핵비확산이나 핵군축이 아니라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 분야에서의 핵물질 관리 보안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사인 북핵폐기 문제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담아내는 것이 한국의 목표이어야 한다.

(2) ‘안전’ 의제 추가

의제의 범위와 관련해서 안전과 안보가 개념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는 전적으로 안보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제1차 회의와 달리 안전 문제도 같이 논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인접국인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제2차 회의에서 안전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역시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회의 추진’ 원칙에 입각해서 안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미 양국도 이 점에 대해 이해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 4월 17일 청와대를 예방한 클린턴 국무장관은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원전의 안전 문제에 대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국이 리더십을 갖고 논의를 주도해주길 요청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한다.¹⁵⁶ 2011년 9월 후쿠시마 사태 이후의 원자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에서 개최된 원자력 안전 고위급회의에서 안전문제가 각국 정상 수준의 관심사항임을 보여주었다.

이를 위해서 안전과 안보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상당히 중첩성이

¹⁵⁶ 『동아일보』, 2011년 4월 18일.

I
II
III
IV
V
VI
VII

늘어나는 것은 물론 상호 보완적이고 선순환적인 상관관계에 있음을 확
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안전은 주로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사고”(accident)에
대처하는 것인데 비해, 안보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자행한 사고와 재해에
대처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안보를 “인공적인 안전 문제”(artificial
safety problem)로 규정할 수 있다. 반면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자
연 재해에 의한 사고는 “자연에 의한 사보타지”(sabotage by nature)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발생한 일련의 안전관련
사고는 원전시설의 취약점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따라서 쓰나미가 원
전에 가한 피해가 테러범들에 의해서 그대로 모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¹⁵⁷ 예를 들어 원전의 냉각계통을 마비시키거나 외부전
원을 차단하고 내부 비상전원을 손상시키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연 설명하면, 안전과 안보의 공통점을 사보타지에 의한 피해
라고 했을 때, 그 차이점은 가해자가 자연과 테러범이라는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바드 대학교의 번(Matthew Bunn)의 다음 비유를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안보 없이 안전할 수 없고, 안전 없이
안보가 있을 수 없다.”

한편, 지금까지 원전 건설의 기준이었던 “위협대응설계기준”(Design
Based Threat: DBT)이나 “사고대응설계기준”(Design Based Accident:
DBA)을¹⁵⁸ “초월하는”(beyond)는 중대한 재난이 자연재해에 의해 발

¹⁵⁷- Duyeon Kim, “Fukushima and the Seoul 2012 nuclear security summit,”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March 18, 2011, <www.thebulletin.org>.

¹⁵⁸- 안보에 관련된 개념인 위협대응설계기준이 가상적을 상대로 한 것이라면, 같은 개
념을 자연재해나 의도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 적용하면 사고대응설계기준이 된다.
따라서 사고대응설계기준은 안전에 관한 개념이다.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쓰나미

생했기 때문에 극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설계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또 다른 교훈이다.¹⁵⁹ “핵물질관리그룹”(FMWG)을 이끌고 있는 룡거는 유럽연합의 사례를 들며,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참가국들이 개별적으로 자국 원자력시설의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stress test)을 받을 것을 제안했다.¹⁶⁰ EU 회원국들은 143개의 원자로에 대한 안전점검을 자발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3) 북핵문제 논의 방향

핵안보정상회의는 북핵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이 아니다. 북핵문제가 핵비확산체제의 첫 번째 기둥인 핵비확산 문제인 반면, 핵안보가 두 번째 기둥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문제라는 점에서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건국 이래 최대의 국가안보 위협인 북핵문제를 정부수립 이래 최대의 국제안보행사에서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다. 이 문제를 적절히 다루지 않는다면 국내적으로 ‘북핵문제가 빠졌다’는 비판, ‘우리 안보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대규모 국제회의 무용론’ 등이 확산될 수 있다.

큰 틀에서 볼 때,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는 북핵문제 해결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기회를 제공한다.

에 대한 사고대응설계기준은 높이 5m였지만 15m에 달하는 쓰나미가 덮쳤는데, 이는 사고대응설계기준을 초월하는 자연재해였다.

¹⁵⁹ 외교안보연구원 주최 ‘서울 핵안보 네트워크 워크숍’에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황일순 교수와의 의견교환, 2011년 3월 3일.

¹⁶⁰ Kenneth Luongo, “The urgent need for a Seoul Declaration: a road map for the 2012 nuclear security summit and beyond,” *Arms Control Today*, April 2011, <www.armscontrol.org/print/4769>.

- 북한 핵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각인시킨다.
- 북한의 ‘서울 불바다’, ‘남한 잣데미’ 등의 위협 발언을 적절히 활용하여 북핵 위협의 실상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 북한 지도부에 대한 간접적, 외교적 핵포기 압박 효과를 유발한다.
- 세계 제1의 WMD 확산국과 이웃한 한국의 비핵평화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획득한다.
- 세계 정상들에게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제대로 알리고, 정상외교를 통해서 북한문제를 논의하는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외교적 우위를 확보한다.

구체적으로는 북핵문제의 핵안보 측면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이나 이란의 핵문제는 핵비확산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기동인 핵군축 요구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서 제1차 회의 때도 이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¹⁶¹ 하지만, 시리아 원자로 수출, 미얀마 핵개발 커넥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공개 등 이탈리아가 북한의 “무책임한 확산” 활동이 핵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북핵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핵안보 측면에서 볼 때, IAEA 사찰이 진행되고 있는 이란에 비해 IAEA의 접근이 차단된 북한이 훨씬 큰 문제라는 점을 포함해서 북한의 핵활동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집중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북한이 NPT에서 탈퇴했지만 제1차 정상회의 때 이스라엘, 인도, 파

¹⁶¹ 제2차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1차 부교섭대표회의에서는 군사시설에 핵안보를 적용해야 한다는 비핵국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핵국들이 강력히 반대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유희식 실장과의 의견교환, 2011년 4월 18일.

키스탄도 참가했기 때문에 북핵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문제를 다룬다면 가능한 의제는 다음 네 가지이다: ① 핵무기, ② 핵물질, ③ 핵 시설 안전, ④ 핵확산 활동. 이 가운데 핵무기와 핵물질은 의제가 되기 어렵고, 핵안전과 핵확산을 의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핵안보 차원에서 다루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제로 삼을 수 없다.

- 북한에는 평화적인 원자력 시설이 없다.
- 재처리·농축 등 북한의 핵무기제조용 시설을 평화적인 목적의 시설로 정당화시켜줄 수 있다.
- 북한은 NPT 체제를 기만하고 유린한 나라로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보다 훨씬 더 나쁜 선례를 남겼다.
- 이란, 시리아, 미얀마 등 잠재적 핵개발국가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핵물질을 의제로 하는 데는 두 가지 문제가 따른다. 하나는 정권의 내부 통제력이 강한 북한의 속성상 핵물질이 도난 혹은 탈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물질이 취약해지는 시기는 급변사태인데, 핵물질 관리를 위해서 급변사태를 상정하는 것은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고 중국 등의 강한 반대가 예상된다. 다른 문제는 만약 북한이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의 보유 사실을 공개하고 핵안보 차원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북한의 핵물질은 국제사회를 속이고 모든 결의를 위반하며 만들어진 불법적인 것으로 제거의 대상이지 안전한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의 지원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I
II
III
IV
V
VI
VII

핵물질 역시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제가 되기 어렵다.

핵시설의 안전문제는 핵안보와 안전이 중복되는 영역에서 다뤄질 수 있다. 즉 북핵문제의 성격과 핵안보 차원의 우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제2차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 기존 비확산 개념은 북한 정권에 의한 의도적인 확산인 반면, 핵안보는 북한 정권의 의도에 반(反)하는 인위적인 사보타지가 북한은 물론 남한과 주변국에 줄 수 있는 피해를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 인위적인 사보타지는 북한 내부의 불안이 가중되고 정권이 통제력이 약화되는 상황, 즉 북한의 정치적 혼란이나 급변사태 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우려를 같이 한다.
- 제2차 정상회의에서 안전을 의제로 추가하고, 북한 핵시설의 안전 문제를 다룬다.

북한의 핵확산 활동은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핵안보 문제이다. 북한의 무책임한 확산 활동이 핵테러의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확산을 저지하는 것은 핵테러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것과 같다.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공동성명은 지금까지 북한이 자행한 핵확산 활동을 비난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 더 나아가 현재 “뜻 맞는 나라들의 연합체”(coalition of willing)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확산방지구상”(PSI)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PSI 협약”(PSI Convention)으로 전환해야 한다.¹⁶²

¹⁶² 자세한 사항은 아래 3절의 “새로운 의제 제시”를 참조하기 바란다.

결과적으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선에서 북핵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

- 제2차 회의에서 북핵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김정일 정권에게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다는 데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 회의 참가국들이 북핵문제의 심각성과 한국이 받는 안보위협에 대해 충분한 공감과 이해를 표시한다.
- 북한 지도부가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국제사회의 비판과 압박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부담을 느끼도록 유도한다.

다. Seoul Consensus 도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프라하 연설에서 제시한 민감한 핵물질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완수하는 시한인 2013년 이후 핵안보정상회의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이 회의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것인가, 부여한다면 어떤 임무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이 주최국으로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가 실현되고 난 후에 핵안보정상회의의 장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청사진은 2012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패하는 경우 핵안보정상회의의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핵테러의 위협성을 정상회의 의제로 끌어올린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지만 그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고 해서 핵테러의 위협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관계 차원에

I
II
III
IV
V
VI
VII

서 볼 때도, 미국의 대통령이 제시한 의제를 한국이 지속가능한 의제로 확대·심화·발전시키는 것은 동맹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한국은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울 컨센서스”(Seoul Consensus)를 도출해서 정상선언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 컨센서스’가 담아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적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보장조치, 안전 및 안보(‘3S’)가 상호 보완적이고 선순환적 관계에 있음을 확인한다.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서 ‘3S’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오바마의 ‘4년에 핵물질 관리’ 약속이 끝난 후 열리는 2014년 회의를 ‘3S’를 모두 다루는 ‘원자력정상회의’로 확대한다.
- ‘원자력정상회의’는 “원자력의 책임있는 이용”(Responsible Use of Nuclear Energy)을 모토로 내세우며, 각국의 정상들이 2년에 한 번씩 모여서 ‘3S’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면서 보장조치 의무 위반, 원자력 사고, 핵테러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기고 국제의무 이행의 결의를 다진다.

핵안보정상회의 의제를 ‘3S’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¹⁶³ 우선 보장조치를 포함하는 것은 비핵국의 사찰수용 의무를 강조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제약하는 것으로 비취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비핵국들이 반대할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보장조치를 다루는 것은 새로운 사찰의무를 부과하는

¹⁶³- 2011년 5월 12~13일 외교안보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제회의 (Nuclear Security Summit 2012 Workshop)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이런 의견을 피력했다.

것이 아니라 각국 정상차원에서 IAEA 사찰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철저한 이행을 약속하지는 취지이다. NPT 체제에 노정된 핵국과 비핵국 간의 차별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체제를 뒷받침하는 보완적 조치인 것이다. 또한 호주와 같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자체를 반대하는 국가들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보장조치를 추가의제로 삼는데 반대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원자력의 이용 자체를 확대할 수 있는 움직임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이다. 그러나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선택하느냐의 여부는 모든 국가의 고유권한이며 다른 나라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반면에 원자력을 포기한 나라도 타국의 원전이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고 안전하게 운용되면서 테러의 위협을 받지 않는 것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북핵문제나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 보듯이, 인접국의 원자력 사고나 테러 혹은 핵무기 전용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3S'로 의제를 확대해서 핵안보정상회의를 원자력정상회의로 발전시키자는 서울 컨센서스 제안은 타당성을 갖는다.

라. 대국민 홍보와 이해 제고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는 G-20 보다 더 큰 규모로서, 아마도 건국 이래 최대의 국제적 규모의 행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만큼 이 회의에 대해 국민들도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정부 역시 국가적 행사를 국민들의 환영과 지지 속에 치러야 하므로 회의 준비단계에서부터 회의의 성격과 임무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해서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해야만 국민들의 잘못된 오해나 과도한 기대를 차단하고

I

II

III

IV

V

VI

VII

국론분열이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국민 홍보와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북핵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국민들이 북핵문제 해결에 과도한 기대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핵안보정상회의’라는 용어를 접하는 순간 대다수 국민들은 이 회의가 북핵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회의인 것으로 오인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를 낮추고 여론이 들뜨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핵안보정상회의가 북핵문제나 남북관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범세계적 안보문제를 다루는 회의라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러한 큰 회의가 이 시점에 서울에서 열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전반적인 국제안보 정세와 핵테러 위협의 심각성을 들어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외교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북한의 “무책임한 확산” 행위의 심각성과 이런 행동이 북한의 의도와 관계없이 핵테러에 연루될 가능성을 알리고, 통일을 주도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핵테러에 국가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교육·홍보해야 한다.

아울러 핵안보의 핵심 대상인 HEU와 플루토늄을 보유하지도 않은 한국이 구태여 수십 개국 정상을 초청해서 국민 불편을 감수하며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 기여”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대규모 회의를 유치하는 것이 국위선양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북핵문제 해결에도 순기능적이고 우호적인 국제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논리로 대응할 수 있

을 것이다.

회의가 종료된 후 국민 여론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만족을 표시할 수 있다면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서울 개최는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G-20 행사를 통해 국제경제 무대에서 큰 역할을 한 한국이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안보 무대에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선진국가로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둘째, 건국 이후 최대 외교행사가 회의 준비와 운영 면에서 큰 실수 없이 매끄럽게 진행되어 국제사회에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셋째, 핵안보라는 중요하고도 민감한 국제안보 문제에서 한국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잘 보여주었다. 넷째, 이 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비핵정책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높일 수 있었다. 다섯째, 핵안보정상회의가 북핵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북핵문제 해결에 우호적인 국제여건을 형성해주었다. 여섯째, 국민 개개인이 핵테러 등 중요한 국제안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3. 새로운 의제 제시

가. 방사성물질 의제

미국은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방사성물질을 논의하는데 반대했다. 방사성물질이 Dirty Bomb을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긴 하지만 정상회의 의제를 방사능 물질로 확대하는 것은 더욱 시급한 현안인 HEU와 플루토늄 관리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국제노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핵안보정상회의 논의 초점을 HEU와 플루토늄에 맞추고 핵테러에 대한 예방과 대

I

II

III

IV

V

VI

VII

처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민감한 핵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핵테러 위협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방사성물질이 핵안보의 대상임이 분명하고 핵테러보다 방사능테러의 가능성이 더 큰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많은 나라들이 핵테러는 다소 비현실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오히려 방사능테러를 더 현실적인 위협으로 생각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방사성물질을 의제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사성물질의 의제화는 비핵국이고 HEU와 플루토늄도 보유하지 않은 한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방사성물질은 우리 주변 도처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만큼 도난과 불법탈취의 위협도 높다. 발전, 산업, 의료 등 방사성물질의 사용범위는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방사성물질의 양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비례해서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방사성물질의 양이 많아지고 도난 사건도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IAEA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9년까지 방사성물질이 도난당한 사건은 모두 1,801건에 달하고, 이중 2009년에 발생한 사건만 124회에 이른다.¹⁶⁴ 플루토늄이나 HEU가 도난 혹은 분실된 경우도 18건에 달한다.¹⁶⁵ 방사성물질은 핵물질에 비해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사용자가 많은 만큼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은 반면에 기술적으로 핵물질에 비해 쉽게 테러무기로 전용할 수 있다. 방사성물질의

¹⁶⁴- IAEA *Annual Report 2009* (Vienna: IAEA, 2010), p. 75.

¹⁶⁵- Kenneth Luongo, "The urgent need for a Seoul Declaration: a road map for the 2012 nuclear security summit and beyond."

도난이나 불법 거래가 방사성무기의 제조나 방사능테러로 직결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안보를 증진하는 문제를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PSI 협약”(PSI Convention) 추진

현재 “뜻 맞는 나라들의 연합체”(coalition of willing)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확산방지구상”(PSI)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PSI 협약”(PSI Convention)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제의할 필요가 있다. 핵무기와 핵기술의 확산이 핵안보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고 북한이 국가차원에서 “무책임한 확산”을 자행한 당사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PSI 협약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의제이기도 하다. 북한의 핵기술·핵물질 불법 거래야말로 핵안보의 직접적인 대상이다.

PSI 협약을 추진하는 것은 핵안보정상회의의 기본 취지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핵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규범과 조약의 “보편성”(universality)을 높이는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보편성을 제고하는 것은 각 규범의 참여국을 늘리는 것, 즉 기존 조약의 서명·발효국가를 확대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높이는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PSI 협약 추진은 후자의 방법, 즉 기존 규범의 법적 구속력을 높이는 사례에 해당된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도 2009년 4월 5일 프라하 연설에서 PSI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I
II
III
IV
V
VI
VII

우리는 위험한 물질의 암시장을 분쇄하고 이동을 탐지·차단하며 거래를 막기 위한 금융수단을 사용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이 위협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PSI나 GICNT와 같은 노력을 지속가능한 국제적 기구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¹⁶⁶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5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도 PSI의 제도화 방침을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천명한 바 있다.¹⁶⁷

이동 중인 핵물질을 탐지·차단하고 이런 기술의 불법거래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PSI나 GICNT와 같은 프로그램을 지속가능한 국제적 노력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핵물질이 위협으로 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개선이 계속 되도록 다른 나라 및 국제기구와 함께 포괄적인 협력을 유지할 것이다.

한편, 제2차 회의는 PSI와 관련된 기존 규범에 대해서도 참가국들로부터 보다 강력한 이행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제1차 회의 당시 개별국가 선언 차원에서 일부 국가들이 참여를 약속한

¹⁶⁶ 오바마 대통령은 핵물질 밀거래를 막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PSI와 GICNT를 지속가능한 국제기구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must also build on our efforts to break up black markets, detect and intercept materials in transit, and use financial tools to disrupt this dangerous trade. Because this threat will be lasting, we should come together to turn efforts such as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and the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into durable international institutions.” *Remarks by President Barack Obama*, Hradcany Square, Prague, Czech Republic.

¹⁶⁷ 원문은 다음과 같다. To detect and intercept nuclear materials in transit, and to stop the illicit trade in these technologies, we will work to turn programs such as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and the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into durable international efforts. And we will sustain broad-based cooperation with other nation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to ensure the continued improvements necessary to protect nuclear materials from evolving threats. *National Security Strategy*, p. 24, <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rss.../national_security_strategy.pdf>.

“메가포트 구상”(MI)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나라가 참가하도록 동의를 얻어내고 이런 사실을 정상성명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¹⁶⁸ 이와 별도로 미국 국토보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화물안보구상”(Secure Freight Initiative: SFI)에¹⁶⁹ 대해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차원의 동의와 지지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 HEU 관리지침 수립 및 플루토늄 관리지침의 통합

IAEA가 1998년 3월에 채택한 플루토늄 관리지침과 유사하게 HEU 관리지침을 만들어 이행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두 지침을 통합하도록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80년 말부터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 보유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가 제기되면서 IAEA가 1992년과 1993년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했고, 이후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 일본, 벨기에, 스위스 등 9개국이 실무그룹을 구성해서 만든 지침이 INFCIRC/549로 채택되었다.¹⁷⁰ 이 문서에 서명한 국가들은 자국이 보유한 평화적 목적의 민수용 플루토늄에 대해서 매년 100kg 단위로 다음 내용을 발표한다(군사용에 대해서는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¹⁶⁸- 메가포트 구상은 전세계 주요 항구에 방사능 탐지장비를 설치하고 훈련과 지원을 통해서 핵물질과 방사성물질의 탐지 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2003년 미국 에너지부가 시작한 구상이다. 2011년 초 현재 1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¹⁶⁹- 화물안보구상은 국토보안부가 미국행 컨테이너의 출항지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핵물질과 방사성물질을 이용한 해상교통망 테러나 이들 물질의 미국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2010년 6월 시작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관세청 주도로 2002년 1월부터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화물선에 대량살상무기가 탑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국제 항구에 자국 세관을 파견,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컨테이너 안보구상”(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CSD)이 있는데, 우리나라(부산항)을 포함해서 전세계 33개국의 58개 항구가 참여하고 있다.

¹⁷⁰-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Plutonium.*

I
II
III
IV
V
VI
VII

- 국제적인 안전·안보 기준에 따라서 플루토늄을 생산·추출·처리·가공·사용·운송·저장·처분함.
- 사용·운송·저장중인 플루토늄에 대해서 “핵물질 방호협약”과 INFCIRC/225호에 의거하여 물리적 방호조치를 적용함.
- 보유한 플루토늄의 재고조사를 철저히 하고 효과적인 계량관리와 통제제도를 운영함.
- 50g을 넘는 플루토늄을 다른 나라로 운송할 때, 최종 용도와 사용자 확인, 물리적 방호, 사전동의 없는 제3국 이전 불가 등을 서면으로 약속받음.
- 매년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플루토늄과 재처리를 통해 추출된 플루토늄의 양을 발표함.

라. 한국적 훈련센터 설립

북한과의 상시 대치 상태에 있는 한국은 대테러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과 노하우를 확보한 나라이다. 따라서 핵안보 관련 훈련센터를 설립할 때, 대테러 분야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핵테러 대응이나 핵감식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과 능력을 개발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훈련센터의 기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작업계획에 명시된 ‘핵탐지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집행 및 세관 요원들 간의 공동훈련 실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 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이를 정례화 하도록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매달 실시하는 ‘민방위훈련’과 같이 각급 원자력 시설에 대해 분기별 혹은 격월별 정기 방호훈련을 실

시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방호훈련 표준 매뉴얼’을 개발해서 IAEA 회원국들에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마.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국제협력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인 처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정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문제로서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처분과 핵안보를 연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본회의는 아니더라도 후속회담인 산업체 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련 기술혁신과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미국 GE사의 간부는 사용후핵연료의 완전한 처리를 전제로 하는 “핵주기 완성”(Close Fuel Cycle)이 핵안보에 기여한다고 발언한 바가 있다.¹⁷¹

4. 세부 추진전략

가. 공고한 비핵정책 홍보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는 한국의 평화적인 비핵정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오로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만 전념하는 비핵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해야 한다. 북한의 연속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비핵정책은 흔들림이 없으며, 북

¹⁷¹ 이광석, “원자력계에서 본 핵안보정상회의,”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2010년 12월 21일.

I
II
III
IV
V
VI
VII

핵에 대한 억지는 한·미 동맹과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해 달성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1970년대의 핵개발 시도는 당시의 안보적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고, 2004년 IAEA 미신고 사건은 과학자들의 순수한 탐구열정으로 진행된 과학적 실험이었다는 점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재처리·농축 시설 보유를 금지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다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이 선언을 국제모델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우리의 국익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필요한 경우 이 선언이 북한의 집요한 위반에 의해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입장을 정하고 정상회의에서 논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의 위반으로 완전히 휴지조각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선언의 기본 정신인 ‘핵무기 없는 한반도의 실현’을 위해 비핵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나. 회의의 연속성 유지

핵안보정상회의가 제2차 서울회의를 끝으로 사라지는 회의가 되는 경우 정부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회의’를 개최했다는 비판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고, 국제 외교무대에서도 실속 없는 회의를 개최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제3차 회의 개최국을 지정하고 바통을 넘겨주는 형식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히 차기 회의개최국을 지정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서울 컨센서스”에서와 같이 정상회의의 의제를 보장조치와 안전까지 확대해서 ‘원자력 정상회의’로 발전시키는 지속가능한 형식을 제안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 대북 제안

정부가 제1차 회의 때 초대받지 못했던 북한을 제2차 회의에 공식 초청할 수 있을 것이다. 핵물질 보안을 목표로 하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북한을 초청하는 것은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현재 보유한 핵시설이 평화적 이용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응적 차원에서 김정일을 직접 초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 핵안보 분야에서 기여하고 “百聞이 不如一見”이란 우리 속담처럼 김정일이 직접 국제상황을 체험하고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의 초청이다. 물론 북한 당국이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만 국제무대에서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며, 자연스럽게 북핵문제를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제2차 정상회의를 유치한 직후 가진 회견에서 북한 초청의사를 밝힌 바 있다.¹⁷²

북한이 한국의 초청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제2차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시점의 북한 내부사정, 남북관계, 북·미 관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긍정과 부정 두 입장을 모두 표명했다. 우선 우회적으로 핵안보정상회의 참여할 의사를 밝혔었다. 예를 들어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직후인 2010년 4월 21일 외무성이 발표한 비망록에서 “우리는 다른 핵보유국들과 평등한 입장에서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와 핵물질의 안전관리 노력에 합세할 용의가 있다”고

¹⁷² 이 대통령은 2010년 4월 13일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제2차 정상회의 유치와 관련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바라건대, 이제 북한이 2010년과 11년, 2년 동안에 6자회담을 통해 핵을 포기하는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NPT에 가입해서 세계(에서) 합의된 사항을 따르게 된다면 저는 기꺼이 초대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세계 모든 정상들과 함께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2010년 4월 14일.

I
II
III
IV
V
VI
VII

주장했다.¹⁷³ 반면에 사흘 뒤에 나온 조선신보는 핵을 보유한 나라 가운데 제1차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나라는 북한뿐이며, 북한은 미국의 적대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제2차 회의에 초청받아도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주재 하에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수뇌들이 핵테러의 위협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알카에다와 같은 비국가조직에 핵무기나 핵물질이 넘어가지 않도록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회의에는 NPT 비가입국 이면서 핵국으로 간주되고 있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도 참가하였다. 미국이 회의에 초청하지 않았던 핵보유국은 자기가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명한 조선이 유일하다. 이러한 2중 기준은 언젠가 거될 날 수밖에 없다…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는 2012년 남조선에서 열린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이 핵포기 의지를 보이면 초청하겠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원인과 결과를 가려보지 못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도 분간하지 못한 헛소리에 불과하다. 미국의 대조선 핵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조선의 회의참가는 있을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가 핵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 나라의 대표와 마주앉아 미소를 지으며 핵공조 문제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은 뻔한 일이다.¹⁷⁴

2011년 5월 9일 독일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 초청에 대해서¹⁷⁵ 북한은 이 대통령의 제안이 ‘선 핵포기’, ‘천안함, 연평도 사과’ 등을 전제로 한다며 거부한 바 있다.¹⁷⁶ 그러나 정부는 2011년 말이나

1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비망록,” 『조선중앙통신』, 2010년 4월 21일.

174. 『조선신보』, 2010년 4월 24일.

175. 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제의했다. “핵 포기 문제에 있어 북한이 진정하고 확고하게 포기하겠다는 의견을 국제 사회와 합의한다면 내년 3월 26~27일 제2차 핵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대하고 싶다고 제안드린다.” 『연합뉴스』, 2011년 5월 10일.

176.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질문에 답변, 『조선중앙통신』, 2011년 5월 11일; “핵정상회의초대--공세에 밀린 청와대,” 『조선신보』, 2011년 5월 11일.

2012년 초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 한 번 김정일을 초청할 수 있을 것이다.¹⁷⁷ 김정일의 초청과는 별도로, 핵안보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북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북한으로 하여금 핵안보 관련 모든 국제규범에 조속히 가입하도록 촉구함.
- 남북한 간에 핵안보 협력을 제의하고 쌍방 핵시설에 대한 상호 모니터링과 자료교환을 추진함.
- 남북간 쌍방 핵시설에 대한 사보타지 및 무력사용 금지 협정을 체결함.

이와 관련 통거는 북한도 2010년 4월 외무성 비망록을 통해 핵안보정상회의에 참가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만큼, 북한을 초청하고 정상회의 전후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¹⁷⁸

-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을 초청해서 선진 핵안보 실태를 견학시킴.
- 다음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워크숍을 진행함: ① 컴퓨터 계량기법을 통한 핵물질 재고에 대한 보안, ② 카메라, 울타리, 침입탐지장치 등을 이용한 물리적 방호체계, ③ 비상시 대응 및 통신 기술, ④ 경비요원 훈련, ⑤ 운송중 핵물질에 대한 보안, ⑥ 국경경비, ⑦ 핵물질 밀반출 예방 등.
- 관련 기술의 시현은 북한이 아니라 러시아나 미국의 시험시설에

¹⁷⁷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8월 22일 몽골 방문 중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가동 중인 모든 핵 프로그램의 동결과 폐기 의사를 분명히 하고 국제사회와의 관계 및 경제협력 관계를 천명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내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2011년 8월 23일.

¹⁷⁸ Kenneth Luongo, “The urgent need for a Seoul Declaration: a road map for the 2012 nuclear security summit and beyond.”

I
II
III
IV
V
VI
VII

서 할 수 있음.

이와 함께,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에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반대급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경수로 건설 지원, 북한 핵과학자 재고용, 평화적인 원자력 기술 협력 등을 핵포기의 인센티브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북한의 핵위협 제거라는 우리의 목표와 경제지원이라는 북한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당근이 될 것이다. 그 원형은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소련의 핵무기 등 주요 무기를 해체하고 군사능력을 민수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CTR 프로그램이다.

소련이 해체되고 1991년 8월 모스크바에서 쿠데타가 발생하는 등 불안정 요인이 증대하면서 소련의 네 개 공화국에 분산 배치되어 있던 핵무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핵 기술자와 관련 물질의 유출을 막는 문제가 미국의 중대한 관심사항으로 떠올랐다. 소련 핵무기의 안전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 미 의회는 1991년 11월 님(Sam Nunn)과 루가(Richard Lugar) 두 의원이 발의한 ‘님-루가 협력위협감소’ 법안을 통과시켰다. 1992년부터 이행되기 시작한 CTR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의 된다:¹⁷⁹ ① 핵·화학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의 파괴, ② 무기파괴 과정에서 이들 무기의 안전한 관리, ③ 해당 무기와 관련 부품 및 무기급 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 가능한 보장조치체제의 설립, ④ 다른 나라의 무기개발 프로

¹⁷⁹- Amy Woolf, *Nunn-Luga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Programs: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for Congress (Washington D.C.: The Library of Congress, 2001), pp. 1~2.

그럼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적 전문지식의 유출 방지 등. CTR 프로그램은 냉전 시대에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과 벨로루시 등 4개국에 집중 적용되고 있다. 이런 경험을 원용하여 한국도 좁게는 북한의 핵무기, 넓게는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분야에서 위협적인 부분은 모두 제거하고 민수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은 전환하며, 관련 인력은 평화적 목적의 산업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한반도협력위협감소”(Korean Peninsula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KCTR) 프로그램을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⁸⁰

라. 선물꾸러미 유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참가국에 대해 새로운 “선물꾸러미”(House Gift)를 준비해 오도록 요청하고 제1차 회의 때와 같이 이를 모아서 주요 성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유엔 안보리결의안 1887호 제22항에서 안보리결의안 1540호의 이행을 위한 자발적 기금 조성을 환영하고 있음을 감안, WMD 관련 물질과 기술의 확산을 막고 핵테러를 방지하는데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참가국들이 안보리결의안 1540호 이행을 위한 기금을 일정액 기탁하는 “선물꾸러미”를 준비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제1차 회의에서 미국이 강조한 “House Gift”는 주최국인 미국은 자리를 마련하고 여기에 참가하는 나라들이 선물로 들고 오는 보따리라는 취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주최국인 한국

¹⁸⁰- CTR 프로그램의 한국적 적용에 관해서는 다음 저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Cheon Seongwhun,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Seoul: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6).

I
II
III
IV
V
VI
VII

이 별도로 선물꾸러미를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무리하게 선물 보따리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내법 절차상 기준이 지연되고 있는 개정 핵물질방호협약과 핵테러억제협약의 기준을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 IAEA의 핵안보 평가서비스, 즉 “물리적 방호 자문 서비스”(IPPAS) 역시 서둘러 받을 필요가 없다.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방호현황이 외부에 유출되고 중요한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 국가 원자력신인도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적으로 먼저 평가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한 후 시간을 두고 자문 서비스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핵국 “별도회의”(Side Event) 개최 및 선언문 유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핵국들만의 별도 회의를 개최하고 선언문을 발표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비핵국인 한국이 주최국으로서 다른 대다수 비핵국들을 대표해서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핵국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다. NPT 상의 공인된 핵국인 P5와 NPT 체제 밖에서 핵을 개발한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에 대해서 별도의 접근을 할 수 있다.

먼저 P5에 대해서는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원래 다루기로 했던 군사용 핵물질 생산금지 문제를 의제로 협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즉 군사용 핵물질의 철저한 관리와 보관을 5개 핵국들의 “House Gift”로 규정하고, 5개 핵보유국들이 군사용 핵물질의 관리와 보관을 철저히 할 것을 약속하는 “P5 핵보유국 선언문”(P5 NWS Statement)를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NPT 체제 밖의 3개 비핵국에 대해서도, 세 나라가 군사용 핵물질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점을 약속하고,

“P5 핵보유국 선언문”(P5 NWS Statement)과 유사한 내용의 “3국 선언문”(Trilateral Statement)를 발표하도록 유도한다.

바.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제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확산에 가담한 개인이나 국가 지도자를 국제재판에 회부하는 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논의할 가치가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라고 정의했고, 각국 정상은 2012년 제2차 회의까지 전문가 차원의 논의를 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제2차 정상회의에서는 확산 주동자에 대한 국제재판 회부 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그 가능성 및 실천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제안은 북한 지도부에 대한 외교적 압박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의제’로 간주하고, 제2차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주도로 보다 과감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소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핵테러에 사용된 핵물질을 생산한 국가에 대해 책임을 묻는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확산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국의 핵물질이 불법 유출되어 핵테러에 사용되었다면 해당 국가가 일정부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의도적인 핵확산을 자행한 국가에 대해서는 피해국이 핵보복 등 군사적 옵션을 강구할 수 있겠지만, 핵테러에 사용된 핵물질을 탈취당한 국가는 의도적인 핵확산국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국가에 대해서는 군사적 제재 대신 외교적, 경제적 제재 등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해당국에 대해서 관리부실과 부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I
II
III
IV
V
VI
VII

국제규범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불법 거래된 핵물질의 탐지와 수사를 위한 핵감식 기술 개발과 효과적인 수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핵감식·수사 워킹 그룹”(Nuclear Forensic & Investigation Working Group)을 창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사. 한·미 현안과의 독립성 유지

미국이 시작한 정상회의를 한국이 바로 이어서 개최한다는 점에서 핵안보정상회의는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할 뿐 아니라 양국관계에서 한국의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국이 핵안보정상회의를 자국 이기주의를 위해 이용한다는 비판이 초래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국제문제에서 역할을 해줄기를 바라는 미국의 기대를 저버리고 한·미 동맹, 북핵문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원전 수출 등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만 회의를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 이 회의가 오히려 한·미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한국의 이익을 위해 과도하게 활용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서울 개최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가급적 원자력협정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핵안보정상회의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협정 개정을 위한 우호적인 여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두 사안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미국의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 국가이미지와 원자력산업 홍보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의 하나는 한국의 국가이미지와 원자력산업의 우수성을 제대로 홍보하고 알리느냐에 있다. 한국이 HEU와 플루토늄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수한 원자력 산업을 발전시켜왔고, 우수한 물리적 방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특히 한국이 연구용 원자로용 LEU 핵연료 제조기술을 개발해서 세계와 공유하는 등 국제적으로 핵안보를 위해 기술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끝난 후 참가국 정상과 대표들이 한국의 원자력 산업과 핵안보 수준이 매우 우수하다는 확실한 이미지를 갖고 서울을 떠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와 관련 제2차 정상회의를 한국의 비핵정책의 투명성과 원자력 산업의 우수성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국 고위 관료와 전문가들에게 한국의 원자력 발전 실태와 핵안보 운영체제를 소개하는 ‘Tour Program’을 마련해서 실상을 소개해야 한다. 즉 어렵게 마련된 기회를 그냥 낭비하지 말고, 한국의 원자력 발전상과 비핵정책을 선전·홍보함으로써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핵안보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착

대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핵안보를 잘해야 원자력 발전과 수출도 잘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핵비확산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본전제이지만 선진국들이 비확산을 구실로 삼아 평화적 이용을 다양하게 규제함으로써 핵주기 활동을 제

I
II
III
IV
V
VI
VII

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핵안보는 잘하면 원자력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핵물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핵주기 활동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평화적인 원자력 활동의 반경을 넓혀줄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본이 핵안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원자력계가 핵안보 문제에서 기술 유출 등을 우려한 수세적인 자세보다는 핵주기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자세를 갖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즉 핵안보가 핵주기 활동을 제약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광범위한 핵주기 활동을 보장하고 장려하는 기회라는 적극적인 인식을 갖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차. 남북 통행관련 합의서 개정·보완 추진

한국이 핵물질의 불법거래를 차단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조치가 기존의 남북간 통행 관련 합의서를 개정·보완하는 것이다. 남북한이 통행과 관련해서 합의한 문건은 다음 네 가지로서 모두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졌다: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02.12.6),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02.12.8), “남북사이 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04.4.13), “남북해운합의서와 부속합의서”(’04.5.28). 이들 합의서의 문제점은 국가안보나 핵비확산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류협력에만 초점을 맞춘 합의이기 때문에 핵안보 관점에서 많은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네 합의서의 보완·개정 의사를 밝히는 것은 남북관계에는 다

소 부정적인 영향이 있더라도 핵안보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핵안보에 대한 한국의 의지와 결심을 과시하고 국가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제2차 회의 이전에 관련 합의를 개정·보완하도록 추진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북한이 협상을 거부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일단 남한 단독으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추후 협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각국 대표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I

II

III

IV

V

VI

VII

참고문헌

1. 단행본

전성훈.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서울: 통일연구원, 2007.

Allison, Graham. *Nuclear Terrorism: the Ultimate Preventable Catastrophe*. New York: Owl Books, 2004.

Cheon, Seongwhun.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Seoul: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6.

Graham, Bot and Jim Talent et al. *World at Risk: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n the Prevention of WMD Proliferation and Terrorism*. New York: Vintage Books, December 2008.
<www.preventwmd.org/report>.

IAEA, *Nuclear Security Recommendations on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INFCRIC/225/Revision 5. IAEA Nuclear Security Series, No. 13 (2011).

IAEA Safeguards Glossary 2001 Edition: International Nuclear Verification Series No. 3. Vienna: IAEA, 2002.

IAEA Safety Glossary: Terminology Used in Nuclear Safety and Radiation Protection 2007 Edition. Vienna: IAEA, 2007.

Keohane, Robert. *After Hegemon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erry, William and James R. Schlesinger et al., *America's Strategic Posture: The Final Report of the Congressional Commission on the Strategic Posture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2009.

Stoiber, Carlton, Alec Baer, Norbert Pelzer, and Wolfram Tonhauser. *Handbook On Nuclear Law*. Vienna: IAEA, 2003.

2. 논문

전봉근. “핵안보정상회의 성과와 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 여름호(외교안보연구원), 2010.

전성훈. “핵비확산체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국제정치논총』. 제49집 4호, 2009.

Holgate, Laura. “Nuclear Security Summit, Washington, 2010.” a paper presented at the workshop on *Nuclear Security: A Road to the 2012 Summit*. Seoul, South Korea, August 30, 2010.

International Commission on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Synopsis: a comprehensive action agenda.” *Eliminating Nuclear Threats A Practical Agenda for Global Policymakers*. December 2009. <www.icnnd.org/reference/reports/ent/synopsis.html>.

_____. “13. Sustaining an effective counter-terrorism strategy.” *Eliminating Nuclear Threats A Practical Agenda for Global Policymakers*. December 2009. <www.icnnd.org/reference/reports/ent/part-iii-13.html>.

Khripunov, Igor. “Legal Framework for Nuclear Security and Counterterrorism,” a paper presented at the workshop on

Nuclear Security: A Road to the 2012 Summit. Seoul, South Korea, August 30, 2010.

_____. “Post-nuclear summit agend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 Security*. University of Georgia, May 26, 2010.

Kim, Duyeon. “Fukushima and the Seoul 2012 nuclear security summit.”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March 18, 2011, <www.thebulletin.org>.

Luongo, Kenneth. “Making the nuclear security summit matter: an agenda for action.” *Arms Control Today*. Vol. 40, January/February 2010. <www.armscontrol.org/print/4058>.

_____. “The urgent need for a Seoul Declaration: a road map for the 2012 nuclear security summit and beyond.” *Arms Control Today*. Vol. 41, April 2011. <www.armscontrol.org/print/4769>.

Squassoni, Sharon. “Tailoring the 2012 Nuclear Security Summit: Korea’s Legacy.” *Nuclear Security Summit 2012 Workshop* hosted by IFANS, Seoul, South Korea, May 12~13, 2011.

Wolf, Amy. *Nunn-Luga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Programs: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for Congress*. Washington D.C.: the Library of Congress, 2001.

3. 기타자료

「동아일보」.

「연합뉴스」.

『조선신보』.

『조선중앙통신』.

유호식. “국제 핵안보 동향과 한국의 역할.” 비확산포럼 발제문. 2011.

이광석. “원자력계에서 본 핵안보정상회의.”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2010.

전은주. “핵안보정상회의 주요현황 및 전망.”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2010.

『2010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요』 서울: 외교통상부, 2010.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외교통상부 정책메일 제176호, 2011.

Cabinet Office. *The Road to 2010: Addressing the Nuclear Question in the Twenty First Century*, Presented to Parliament by the Prime Minister, by Command of Her Majesty, July 2009.

Clinton, Hillary Rodham. *Remarks at the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Renaissance Mayflower Hotel, Washington, DC, October 21, 2009. <www.state.gov/secretary/rm/2009a/10/130806.htm>.

Code of Conduct on the Safety and Security of Radioactive Sources. Vienna: IAEA, 2004.

Code of Conduct on the Safety and Security of Radioactive Sources and the Supplementary Guidance on the Import and Export of Radioactive Sources. INFCIRC/663. Vienna: IAEA, December 29, 2005.

Fact Sheet: Obama's New Plan to Confront 21st Century Threats. July 16, 2008. <www.barackobama.com>.

Fact Sheet o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ummit on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Disarmament UNSC Resolution 1887.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September 24, 2009.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fact-sheet-united-nations-security-council-summit-nuclear-nonproliferation-and-nucl>>.

Final Report on 9/11 Commission Recommendations, 9/11 Public Discourse Project, December 5, 2005. <www.cbsnews.com/htdocs/pdf/911reportcard.pdf>.

Gates, Robert. *Statement at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Washington, D.C., October 28, 2008. <www.carnegieendowment.org/files/1028_transcrip_gates_checked.pdf>.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Plutonium. INFCIRC/549. Vienna: IAEA, March 16, 1998.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errorist Bombings. December 15, 1997. <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IND&mtdsg_no=XVIII-9&chapter=18&lang=e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December 9, 1999. <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IND&mtdsg_no=XVIII-11&chapter=18&lang=en>.

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 *Global Fissile Material Report 2009: A Path to Nuclear Disarmament,* 2009. <www.fissilematerials.org>.

Key Facts about the National Security Summit.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April 13, 2010. <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key-facts-about-nuclear-security-summit>.

McConnell, J. Michael. *Testimony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February 27, 2008. <www.fas.org/irp/congress/2008_hr/022708mcconnell.pdf>.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May 2010. <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rss.../national_security_strategy.pdf>.

NNSA. “NNSA contributions to the IAEA.” April 2009. <www.nnsa.energy.gov/news/2326.htm>.

NNSA Public Affairs. “NNSA, University of Pennsylvania and Philadelphia police raise the bar for radiological security.” March 27, 2009. <www.nnsa.energy.gov/news/2301.htm>.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April 2010.

Nuclear Security Work Plan Reference Document.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April 13, 2010. <www.whitehouse.gov>.

Obama, Barack. *A New Strategy for a New World*. July 15, 2008. <my.barackobama.com/page/community/amandascott>.

“Obama plans nuclear security summit.” *Global Security Newswire*. July 9, 2009. <gsn.nti.org>.

Partnership for a Secure America. *WMD Report Card: Evaluating U.S. Policies to Prevent Nuclear, Chemical, & Biological Terrorism Since 2005*. <www.psaonline.org/downloads/>

ReportCard%208-25-08.pdf>.

Press Briefing by Ben Rhodes,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for Strategic Communications; Gary Samore, Senior White House Coordinator for WMD Counterterrorism and Arms Control; and Laura Holgate, Senior Director for WMD Terrorism and Threat Reduction. Washington Convention Center, Washington, D.C.,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April 13, 2010. <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press-briefing-ben-rhodes-deputy-national-security-advisor-strategic-communications>.

Remarks by President Barack Obama, Hradcany Square, Prague, Czech Republic.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April 5, 2009. <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Remarks-By-President-Barack-Obama-In-Prague-As-Delivered/>.

Remarks by the President at the Opening Plenary Session of the Nuclear Security Summit. Washington Convention Center, Washington, D.C.,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April 13, 2010. <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remarks-president-opening-plenary-session-nuclear-security-summit>.

Remarks by the President to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ited Nations Headquarters. New York, New York,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September 23, 2009. <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Remarks-by-the-President-to-the-United-Nations-General-Assembly/>.

- Solomon, Jay. "Myanmar's links with Pyongyang stir nuclear fear." *Wall Street Journal*. December 17, 2010.
- Statement by President Obama on the 40th Anniversary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March 5, 2010. <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statement-president-obama-40th-anniversary-nuclear-nonproliferation-treaty>.
- Statement of Principles, the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Bureau of International Security and Nonproliferation, U.S. Department of State, November 13, 2006. <www.state.gov/t/isn/c37071.htm>.
- Tenet, George. *Testimony before the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February 24, 2004. <www.intelligence.senate.gov/040224/tenet.pdf>.
- The 9/11 Commission Report*.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4.
- The 73rd Plenary Meeting*. The 48th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December 9, 1993.
- UN General Assembly.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UN Doc. A/59/766. April 4, 2005.
- _____. *Measures to Eliminate International Terrorism*. UN Doc. A/RES/46/51. December 9, 1991.
- _____. *Measures to Eliminate International Terrorism*. UN Doc. A/RES/49/60. February 17, 1995.
- _____. *Measures to Eliminate International*

Terrorism: Report of the Sixth Committee. A/48/609.
December 6, 1993.

UN Security Council. *Note by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UN Doc. S/23500. January 31, 1992.

_____. *Resolution 984* (1995). UN Doc. S/RES/984.
April 11, 1995.

_____. *Resolution 1269* (1999). UN Doc. S/RES/1269.
October 19, 1999.

_____. *Resolution 1368* (2001). UN Doc. S/RES/1368.
September 12, 2001.

_____. *Resolution 1373* (2001). UN Doc. S/RES/1373.
September 28, 2001.

_____. *Resolution 1540* (2004). UN Doc. S/RES/1540.
April 28, 2004.

_____. *Resolution 1887* (2009). UN Doc. S/RES/1887.
September 24, 2009.

US-Japan-ROK Nuclear Dialogue Toward A Common Trilateral Approach. organized by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and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Washington, D.C., February 28~March 1, 2011.

2010 Review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Final Document Volume I. NPT/CONF.2010/50 (Vol. I). New York, 2010.

부록



제2차 핵정보정상회의의와 북한 핵문제

Statement of Principles, the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GICNT), November 13, 2006*

Participants in the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GICNT) are committed to the following Statement of Principles to develop partnership capacity to combat nuclear terrorism on a determined and systematic basis, consistent with national legal authorities and obligations they have under relevant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s, notably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its 2005 Amendme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373 and 1540. They call on all states concerned with this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o make a commitment to implement on a voluntary basis the following principles:

1. Develop, if necessary, and improve accounting, control and physical protection systems for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and substances;
2. Enhance security of civilian nuclear facilities;
3. Improve the ability to detect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and substances in order to prevent illicit trafficking in such materials and substances, to include cooperation in the re-

* *Statement of Principles, the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Bureau of International Security and Nonproliferation, U.S. Department of State, November 13, 2006, <www.state.gov/t/isn/c37071.htm>.

search and development of national detection capabilities that would be interoperable;

4. Improve capabilities of participants to search for, confiscate, and establish safe control over unlawfully held nuclear or other radioactive materials and substances or devices using them;
5. Prevent the provision of safe haven to terrorists and financial or economic resources to terrorists seeking to acquire or use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and substances;
6. Ensure adequate respective national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s sufficient to provide for the implementation of appropriate criminal and, if applicable, civil liability for terrorists and those who facilitate acts of nuclear terrorism;
7. Improve capabilities of participants for response, mitigation, and investigation, in cases of terrorist attacks involving the use of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and substance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technical means to identify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and substances that are, or may be, involved in the incident; and
8. Promote information sharing pertaining to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and their facilitation, taking appropriate measures consistent with their 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protect the confidentiality of any information which they exchange in confidence.

Global Initiative participants recognize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IAEA) in the fields of nuclear safety and security and the IAEA has been invited to serve as an observer to the Initiative. All participants commend the IAEA for its action in the field of nuclear security. Participants intend for the IAEA to contribute to the Initiative through its ongoing activities and technical expertise.

The initial partner nations intend to establish a terms of reference for implementation and assessment to support effective fulfillment of the initiative, including by facilitating the provision of assistance to participants that may require it, and facilitating suitable exercises.

They express the desire to broaden participation in the Global Initiative to other countries who share the common goals of the Initiative, are actively committed to combating nuclear terrorism, and endorse the Statement of Principles.

〈부록 2〉

**Remarks by President Barack Obama, Prague,
Czech Republic, April 5, 2009***

PRESIDENT OBAMA: Thank you so much. Thank you for this wonderful welcome. Thank you to the people of Prague. Thank you to the people of the Czech Republic. (Applause.) Today, I'm proud to stand here with you in the middle of this great city, in the center of Europe. (Applause.) And, to paraphrase one of my predecessors, I am also proud to be the man who brought Michelle Obama to Prague. (Applause.)

To Mr. President, Mr. Prime Minister, to all the dignitaries who are here, thank you for your extraordinary hospitality. And to the people of the Czech Republic, thank you for your friendship to the United States. (Applause.)

I've learned over many years to appreciate the good company and the good humor of the Czech people in my hometown of Chicago. (Applause.) Behind me is a statue of a hero of the Czech people -- Tomas Masaryk. (Applause.) In 1918, after America had pledged its support for Czech independence, Masaryk spoke to a crowd in Chicago that was estimated to be over 100,000. I don't think I can match his

* *Remarks by President Barack Obama, Hradcany Square, Prague, Czech Republic,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April 5, 2009, <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Remarks-By-President-Barack-Obama-In-Prague-As-Delivered/>.*

record -- (laughter) -- but I am honored to follow his footsteps from Chicago to Prague. (Applause.)

For over a thousand years, Prague has set itself apart from any other city in any other place. You've known war and peace. You've seen empires rise and fall. You've led revolutions in the arts and science, in politics and in poetry. Through it all, the people of Prague have insisted on pursuing their own path, and defining their own destiny. And this city -- this Golden City which is both ancient and youthful -- stands as a living monument to your unconquerable spirit.

When I was born, the world was divided, and our nations were faced with very different circumstances. Few people would have predicted that someone like me would one day becom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pplause.) Few people would have predicted that an American President would one day be permitted to speak to an audience like this in Prague. (Applause.) Few would have imagined that the Czech Republic would become a free nation, a member of NATO, a leader of a united Europe. Those ideas would have been dismissed as dreams.

We are here today because enough people ignored the voices who told them that the world could not change.

We're here today because of the courage of those who stood up and took risks to say that freedom is a right for all people, no matter what side of a wall they live on, and no matter what they look like.

We are here today because of the Prague Spring -- because the simple and principled pursuit of liberty and opportunity shamed those who relied on the power of tanks and arms to put down the will of a people.

We are here today because 20 years ago, the people of this city took to the streets to claim the promise of a new day, and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that had been denied them for far too long. Sametová Revoluce -- (Applause) -- the Velvet Revolution taught us many things. It showed us that peaceful protest could shake the foundations of an empire, and expose the emptiness of an ideology. It showed us that small countries can play a pivotal role in world events, and that young people can lead the way in overcoming old conflicts. (Applause.) And it proved that moral leadership is more powerful than any weapon.

That's why I'm speaking to you in the center of a Europe that is peaceful, united and free -- because ordinary people believed that divisions could be bridged, even when their leaders did not. They believed that walls could come down; that peace could prevail.

We are here today because Americans and Czechs believed against all odds that today could be possible. (Applause.)

Now, we share this common history. But now this generation -- our generation -- cannot stand still. We, too, have a choice to make. As the world has become less divided, it has become more interconnected. And we've seen events move faster than our ability to control them -- a global economy in crisis, a changing climate, the persistent dangers of old conflicts, new threats and the spread of catastrophic weapons.

None of these challenges can be solved quickly or easily. But all of them demand that we listen to one another and work together; that we focus on our common interests, not on occasional differences; and that we reaffirm our shared values, which are stronger than any force that could drive us apart. That is the work that we must carry on. That is the work that I have come to Europe to begin. (Applause.)

To renew our prosperity, we need action coordinated across borders. That means investments to create new jobs. That means resisting the walls of protectionism that stand in the way of growth. That means a change in our financial system, with new rules to prevent abuse and future crisis. (Applause.)

And we have an obligation to our common prosperity and our common humanity to extend a hand to those emerging markets and impoverished people who are suffering the most, even though they may have had very little to do with financial crises, which is why we set aside over a trillion dollars for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earlier this week, to make sure that everybody -- everybody -- receives some assistance. (Applause.)

Now, to protect our planet, now is the time to change the way that we use energy. (Applause.) Together, we must confront climate change by ending the world's dependence on fossil fuels, by tapping the power of new sources of energy like the wind and sun, and calling upon all nations to do their part. And I pledge to you that in this global effort, the United States is now ready to lead. (Applause.)

To provide for our common security, we must strengthen our alliance. NATO was founded 60 years ago, after Communism took over Czechoslovakia. That was when the free world learned too late that it could not afford division. So we came together to forge the strongest alliance that the world has ever known. And we should -- stood shoulder to shoulder -- year after year, decade after decade -- until an Iron Curtain was lifted, and freedom spread like flowing water.

This marks the 10th year of NATO membership for the Czech Republic. And I know that many times in the 20th century, decisions

were made without you at the table. Great powers let you down, or determined your destiny without your voice being heard. I am here to say that the United States will never turn its back on the people of this nation. (Applause.) We are bound by shared values, shared history -- (Applause.) We are bound by shared values and shared history and the enduring promise of our alliance. NATO's Article V states it clearly: An attack on one is an attack on all. That is a promise for our time, and for all time.

The people of the Czech Republic kept that promise after America was attacked; thousands were killed on our soil, and NATO responded. NATO's mission in Afghanistan is fundamental to the safety of people on both sides of the Atlantic. We are targeting the same al Qaeda terrorists who have struck from New York to London, and helping the Afghan people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future. We are demonstrating that free nations can make common cause on behalf of our common security. And I want you to know that we honor the sacrifices of the Czech people in this endeavor, and mourn the loss of those you've lost.

But no alliance can afford to stand still. We must work together as NATO members so that we have contingency plans in place to deal with new threats, wherever they may come from. We must strengthen our cooperation with one another, and with other nations and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to confront dangers that recognize no borders. And we must pursue constructive relations with Russia on issues of common concern.

Now, one of those issues that I'll focus on today is fundamental to the security of our nations and to the peace of the world -- that's the future of nuclear weapons in the 21st century.

The existence of thousands of nuclear weapons is the most dangerous legacy of the Cold War. No nuclear war was fough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but generations lived with the knowledge that their world could be erased in a single flash of light. Cities like Prague that existed for centuries, that embodied the beauty and the talent of so much of humanity, would have ceased to exist.

Today, the Cold War has disappeared but thousands of those weapons have not. In a strange turn of history, the threat of global nuclear war has gone down, but the risk of a nuclear attack has gone up. More nations have acquired these weapons. Testing has continued. Black market trade in nuclear secrets and nuclear materials abound. The technology to build a bomb has spread. Terrorists are determined to buy, build or steal one. Our efforts to contain these dangers are centered on a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but as more people and nations break the rules, we could reach the point where the center cannot hold.

Now, understand, this matters to people everywhere. One nuclear weapon exploded in one city -- be it New York or Moscow, Islamabad or Mumbai, Tokyo or Tel Aviv, Paris or Prague -- could kill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And no matter where it happens, there is no end to what the consequences might be -- for our global safety, our security, our society, our economy, to our ultimate survival.

Some argue that the spread of these weapons cannot be stopped, cannot be checked -- that we are destined to live in a world where more nations and more people possess the ultimate tools of destruction. Such fatalism is a deadly adversary, for if we believe that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is inevitable, then in some way we are admitting to ourselves that the use of nuclear weapons is inevitable.

Just as we stood for freedom in the 20th century, we must stand together for the right of people everywhere to live free from fear in the 21st century. (Applause.) And as nuclear power -- as a nuclear power, as the only nuclear power to have used a nuclear weapon, the United States has a moral responsibility to act. We cannot succeed in this endeavor alone, but we can lead it, we can start it.

So today, I state clearly and with conviction America's commitment to seek the peace and security of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Applause.) I'm not naive. This goal will not be reached quickly -- perhaps not in my lifetime. It will take patience and persistence. But now we, too, must ignore the voices who tell us that the world cannot change. We have to insist, "Yes, we can." (Applause.)

Now, let me describe to you the trajectory we need to be on. First, the United States will take concrete steps towards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To put an end to Cold War thinking, we will reduce the role of nuclear weapons in our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urge others to do the same. Make no mistake: As long as these weapons exist, the United States will maintain a safe, secure and effective arsenal to deter any adversary, and guarantee that defense to our allies -- including the Czech Republic. But we will begin the work of reducing our arsenal.

To reduce our warheads and stockpiles, we will negotiate a 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with the Russians this year. (Applause.) President Medvedev and I began this process in London, and will seek a new agreement by the end of this year that is legally binding and sufficiently bold. And this will set the stage for further cuts, and we will seek to include all nuclear weapons states in this endeavor.

To achieve a global ban on nuclear testing, my administration will immediately and aggressively pursue U.S. ratification of the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Applause.) After more than five decades of talks, it is time for the testing of nuclear weapons to finally be banned.

And to cut off the building blocks needed for a bomb, the United States will seek a new treaty that verifiably ends the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s intended for use in state nuclear weapons. If we are serious about stopping the spread of these weapons, then we should put an end to the dedicated production of weapons-grade materials that create them. That's the first step.

Second, together we will strengthen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s a basis for cooperation.

The basic bargain is sound: Countries with nuclear weapons will move towards disarmament, countries without nuclear weapons will not acquire them, and all countries can access peaceful nuclear energy. To strengthen the treaty, we should embrace several principles. We need more resources and authority to strengthen international inspections. We need real and immediate consequences for countries caught breaking the rules or trying to leave the treaty without cause.

And we should build a new framework for civil nuclear cooperation, including an international fuel bank, so that countries can access peaceful power without increasing the risks of proliferation. That must be the right of every nation that renounces nuclear weapons, especially developing countries embarking on peaceful programs. And no approach will succeed if it's based on the denial of rights to nations that play by the rules. We must harness the power of nuclear energy on behalf

of our efforts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to advance peace opportunity for all people.

But we go forward with no illusions. Some countries will break the rules. That's why we need a structure in place that ensures when any nation does, they will face consequences.

Just this morning, we were reminded again of why we need a new and more rigorous approach to address this threat. North Korea broke the rules once again by testing a rocket that could be used for long range missiles. This provocation underscores the need for action -- not just this afternoon at the U.N. Security Council, but in our determination to prevent the spread of these weapons.

Rules must be binding. Violations must be punished. Words must mean something. The world must stand together to prevent the spread of these weapons. Now is the time for a strong international response -- (Applause) -- now is the time for a strong international response, and North Korea must know that the path to security and respect will never come through threats and illegal weapons. All nations must come together to build a stronger, global regime. And that's why we must stand shoulder to shoulder to pressure the North Koreans to change course.

Iran has yet to build a nuclear weapon. My administration will seek engagement with Iran based on mutual interests and mutual respect. We believe in dialogue. (Applause.) But in that dialogue we will present a clear choice. We want Iran to take its rightful place in the community of nations,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We will support Iran's right to peaceful nuclear energy with rigorous inspections. That's a path that the Islamic Republic can take. Or the government can choose in-

creased isolation, international pressure, and a potential nuclear arms race in the region that will increase insecurity for all.

So let me be clear: Iran'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activity poses a real threat, not just to the United States, but to Iran's neighbors and our allies. The Czech Republic and Poland have been courageous in agreeing to host a defense against these missiles. As long as the threat from Iran persists, we will go forward with a missile defense system that is cost-effective and proven. (Applause.) If the Iranian threat is eliminated, we will have a stronger basis for security, and the driving force for missile defense construction in Europe will be removed. (Applause.)

So, finally, we must ensure that terrorists never acquire a nuclear weapon. This is the most immediate and extreme threat to global security. One terrorist with one nuclear weapon could unleash massive destruction. Al Qaeda has said it seeks a bomb and that it would have no problem with using it. And we know that there is unsecured nuclear material across the globe. To protect our people, we must act with a sense of purpose without delay.

So today I am announcing a new international effort to secure all vulnerable nuclear material around the world within four years. We will set new standards, expand our cooperation with Russia, pursue new partnerships to lock down these sensitive materials.

We must also build on our efforts to break up black markets, detect and intercept materials in transit, and use financial tools to disrupt this dangerous trade. Because this threat will be lasting, we should come together to turn efforts such as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and the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into durable interna-

tional institutions. And we should start by having a Global Summit on Nuclear Security that the United States will host within the next year. (Applause.)

Now, I know that there are some who will question whether we can act on such a broad agenda. There are those who doubt whether true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possible, given inevitable differences among nations. And there are those who hear talk of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and doubt whether it's worth setting a goal that seems impossible to achieve.

But make no mistake: We know where that road leads. When nations and peoples allow themselves to be defined by their differences, the gulf between them widens. When we fail to pursue peace, then it stays forever beyond our grasp. We know the path when we choose fear over hope. To denounce or shrug off a call for cooperation is an easy but also a cowardly thing to do. That's how wars begin. That's where human progress ends.

There is violence and injustice in our world that must be confronted. We must confront it not by splitting apart but by standing together as free nations, as free people. (Applause.) I know that a call to arms can stir the souls of men and women more than a call to lay them down. But that is why the voices for peace and progress must be raised together. (Applause.)

Those are the voices that still echo through the streets of Prague. Those are the ghosts of 1968. Those were the joyful sounds of the Velvet Revolution. Those were the Czechs who helped bring down a nuclear-armed empire without firing a shot.

Human destiny will be what we make of it. And here in Prague, let us honor our past by reaching for a better future. Let us bridge our divisions, build upon our hopes, accept our responsibility to leave this world more prosperous and more peaceful than we found it. (Applause.) Together we can do it.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Prague. (Applause.)

END

10:49 A.M. (Local)

〈부록 3〉

**Remarks by The President to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ited Nations Headquarters,
New York, September 23, 2009***

THE PRESIDENT: Good morning. Mr. President, Mr. Secretary General, fellow delegates, ladies and gentlemen, it is my honor to address you for the first time as the 44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pplause.) I come before you humbled by the responsibility that the American people have placed upon me, mindful of the enormous challenges of our moment in history, and determined to act boldly and collectively on behalf of justice and prosperity at home and abroad.

I have been in office for just nine months -- though some days it seems a lot longer. I am well aware of the expectations that accompany my presidency around the world. These expectations are not about me. Rather, they are rooted, I believe, in a discontent with a status quo that has allowed us to be increasingly defined by our differences, and out-paced by our problems. But they are also rooted in hope -- the hope that real change is possible, and the hope that America will be a leader in bringing about such change.

* *Remarks by The President to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ited Nations Headquarters, New York, New York,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September 23, 2009, <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Remarks-by-the-President-to-the-United-Nations-General-Assembly/>.*

I took office at a time when many around the world had come to view America with skepticism and distrust. Part of this was due to misperceptions and misinformation about my country. Part of this was due to opposition to specific policies, and a belief that on certain critical issues, America has acted unilaterally, without regard for the interests of others. And this has fed an almost reflexive anti-Americanism, which too often has served as an excuse for collective inaction.

Now, like all of you, my responsibility is to act in the interest of my nation and my people, and I will never apologize for defending those interests. But it is my deeply held belief that in the year 2009 -- more than at any point in human history -- the interests of nations and peoples are shared. The religious convictions that we hold in our hearts can forge new bonds among people, or they can tear us apart. The technology we harness can light the path to peace, or forever darken it. The energy we use can sustain our planet, or destroy it. What happens to the hope of a single child -- anywhere -- can enrich our world, or impoverish it.

In this hall, we come from many places, but we share a common future. No longer do we have the luxury of indulging our differences to the exclusion of the work that we must do together. I have carried this message from London to Ankara; from Port of Spain to Moscow; from Accra to Cairo; and it is what I will speak about today -- because the time has come for the world to move in a new direction. We must embrace a new era of engagement based on mutual interest and mutual respect, and our work must begin now.

We know the future will be forged by deeds and not simply words. Speeches alone will not solve our problems -- it will take persistent action. For those who question the character and cause of my nation,

I ask you to look at the concrete actions we have taken in just nine months.

On my first day in office, I prohibited -- without exception or equivocation -- the use of torture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pplause.) I ordered the prison at Guantanamo Bay closed, and we are doing the hard work of forging a framework to combat extremism within the rule of law. Every nation must know: America will live its values, and we will lead by example.

We have set a clear and focused goal: to work with all members of this body to disrupt, dismantle, and defeat al Qaeda and its extremist allies -- a network that has killed thousands of people of many faiths and nations, and that plotted to blow up this very building. In Afghanistan and Pakistan, we and many nations here are helping these governments develop the capacity to take the lead in this effort, while working to advance opportunity and security for their people.

In Iraq, we are responsibly ending a war. We have removed American combat brigades from Iraqi cities, and set a deadline of next August to remove all our combat brigades from Iraqi territory. And I have made clear that we will help Iraqis transition to full responsibility for their future, and keep our commitment to remove all American troops by the end of 2011.

I have outlined a comprehensive agenda to seek the goal of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In Moscow,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announced that we would pursue substantial reductions in our strategic warheads and launchers. At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we agreed on a work plan to negotiate an end to the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s for nuclear weapons. And this week, my Secretary of State

will become the first senior American representative to the annual Members Conference of the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Upon taking office, I appointed a Special Envoy for Middle East Peace, and America has worked steadily and aggressively to advance the cause of two states -- Israel and Palestine -- in which peace and security take root, and the rights of both Israelis and Palestinians are respected.

To confront climate change, we have invested \$80 billion in clean energy. We have substantially increased our fuel-efficiency standards. We have provided new incentives for conservation, launched an energy partnership across the Americas, and moved from a bystander to a leader in international climate negotiations.

To overcome an economic crisis that touches every corner of the world, we worked with the G20 nations to forge a coordinated international response of over \$2 trillion in stimulus to bring the global economy back from the brink. We mobilized resources that helped prevent the crisis from spreading further to developing countries. And we joined with others to launch a \$20 billion global food security initiative that will lend a hand to those who need it most, and help them build their own capacity.

We've also re-engaged the United Nations. We have paid our bills. We have joined the Human Rights Council. (Applause.) We have signed the Conven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e have fully embraced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we address our priorities here, in this institution -- for instance, through the Security Council meeting that I will chair tomorrow on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nd through the issues that I will discuss today.

This is what we have already done. But this is just a beginning. Some of our actions have yielded progress. Some have laid the groundwork for progress in the future. But make no mistake: This cannot solely be America's endeavor. Those who used to chastise America for acting alone in the world cannot now stand by and wait for America to solve the world's problems alone. We have sought -- in word and deed -- a new era of engagement with the world. And now is the time for all of us to take our share of responsibility for a global response to global challenges.

Now, if we are honest with ourselves, we need to admit that we are not living up to that responsibility. Consider the course that we're on if we fail to confront the status quo: Extremists sowing terror in pockets of the world; protracted conflicts that grind on and on; genocide; mass atrocities; more nations with nuclear weapons; melting ice caps and ravaged populations; persistent poverty and pandemic disease. I say this not to sow fear, but to state a fact: The magnitude of our challenges has yet to be met by the measure of our actions.

This body was founded on the belief that the nations of the world could solve their problems together. Franklin Roosevelt, who died before he could see his vision for this institution become a reality, put it this way -- and I quote: "The structure of world peace cannot be the work of one man, or one party, or one nation... It cannot be a peace of large nations -- or of small nations. It must be a peace which rests on the cooperative effort of the whole world."

The cooperative effort of the whole world. Those words ring even more true today, when it is not simply peace, but our very health and prosperity that we hold in common. Yet we also know that this body is made up of sovereign states. And sadly, but not surprisingly, this body

has often become a forum for sowing discord instead of forging common ground; a venue for playing politics and exploiting grievances rather than solving problems. After all, it is easy to walk up to this podium and point fingers -- point fingers and stoke divisions. Nothing is easier than blaming others for our troubles, and absolving ourselves of responsibility for our choices and our actions. Anybody can do that. Responsibility and leadership in the 21st century demand more.

In an era when our destiny is shared, power is no longer a zero-sum game. No one nation can or should try to dominate another nation. No world order that elevates one nation or group of people over another will succeed. No balance of power among nations will hold. The traditional divisions between nations of the South and the North make no sense in an interconnected world; nor do alignments of nations rooted in the cleavages of a long-gone Cold War.

The time has come to realize that the old habits, the old arguments, are irrelevant to the challenges faced by our people. They lead nations to act in opposition to the very goals that they claim to pursue -- and to vote, often in this body, against the interests of their own people. They build up walls between us and the future that our people seek, and the time has come for those walls to come down. Together, we must build new coalitions that bridge old divides -- coalitions of different faiths and creeds; of north and south, east, west, black, white, and brown.

The choice is ours. We can be remembered as a generation that chose to drag the arguments of the 20th century into the 21st; that put off hard choices, refused to look ahead, failed to keep pace because we defined ourselves by what we were against instead of what we were for. Or we can be a generation that chooses to see the shoreline beyond

the rough waters ahead; that comes together to serve the common interests of human beings, and finally gives meaning to the promise embedded in the name given to this institution: the United Nations.

That is the future America wants -- a future of peace and prosperity that we can only reach if we recognize that all nations have rights, but all nations have responsibilities as well. That is the bargain that makes this work. That must be the guiding principl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oday, let me put forward four pillars that I believe are fundamental to the future that we want for our children: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the promotion of peace and security; the preservation of our planet; and a global economy that advances opportunity for all people.

First, we must stop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nd seek the goal of a world without them.

This institution was founded at the dawn of the atomic age, in part because man's capacity to kill had to be contained. For decades, we averted disaster, even under the shadow of a superpower stand-off. But today, the threat of proliferation is growing in scope and complexity. If we fail to act, we will invite nuclear arms races in every region, and the prospect of wars and acts of terror on a scale that we can hardly imagine.

A fragile consensus stands in the way of this frightening outcome, and that is the basic bargain that shapes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It says that all nations have the right to peaceful nuclear energy; that nations with nuclear weapons have a responsibility to move toward disarmament; and those without them have the responsibility to

forsake them. The next 12 months could be pivotal in determining whether this compact will be strengthened or will slowly dissolve.

America intends to keep our end of the bargain. We will pursue a new agreement with Russia to substantially reduce our strategic warheads and launchers. We will move forward with ratification of the Test Ban Treaty, and work with others to bring the treaty into force so that nuclear testing is permanently prohibited. We will complete a Nuclear Posture Review that opens the door to deeper cuts and reduces the role of nuclear weapons. And we will call upon countries to begin negotiations in January on a treaty to end the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for weapons.

I will also host a summit next April that reaffirms each nation's responsibility to secure nuclear material on its territory, and to help those who can't -- because we must never allow a single nuclear device to fall into the hands of a violent extremist. And we will work to strengthen the institutions and initiatives that combat nuclear smuggling and theft.

All of this must support efforts to strengthen the NPT. Those nations that refuse to live up to their obligations must face consequences. Let me be clear, this is not about singling out individual nations -- it is about standing up for the rights of all nations that do live up to their responsibilities. Because a world in which IAEA inspections are avoided and the United Nation's demands are ignored will leave all people less safe, and all nations less secure.

In their actions to date, the governments of North Korea and Iran threaten to take us down this dangerous slope. We respect their rights as members of the community of nations. I've said before and I will

repeat, I am committed to diplomacy that opens a path to greater prosperity and more secure peace for both nations if they live up to their obligations.

But if the governments of Iran and North Korea choose to ignore international standards; if they put the pursuit of nuclear weapons ahead of regional stability and the security and opportunity of their own people; if they are oblivious to the dangers of escalating nuclear arms races in both East Asia and the Middle East -- then they must be held accountable. The world must stand together to demonstrate that international law is not an empty promise, and that treaties will be enforced. We must insist that the future does not belong to fear.

That brings me to the second pillar for our future: the pursuit of peace.

The United Nations was born of the belief that the people of the world can live their lives, raise their families, and resolve their differences peacefully. And yet we know that in too many parts of the world, this ideal remains an abstraction -- a distant dream. We can either accept that outcome as inevitable, and tolerate constant and crippling conflict, or we can recognize that the yearning for peace is universal, and reassert our resolve to end conflicts around the world.

That effort must begin with an unshakeable determination that the murder of innocent men, women and children will never be tolerated. On this, no one can be -- there can be no dispute. The violent extremists who promote conflict by distorting faith have discredited and isolated themselves. They offer nothing but hatred and destruction. In confronting them, America will forge lasting partnerships to target terrorists, share intelligence, and coordinate law enforcement and protect our people. We will permit no safe haven for al Qaeda to launch at-

tacks from Afghanistan or any other nation. We will stand by our friends on the front lines, as we and many nations will do in pledging support for the Pakistani people tomorrow. And we will pursue positive engagement that builds bridges among faiths, and new partnerships for opportunity.

Our efforts to promote peace, however, cannot be limited to defeating violent extremists. For the most powerful weapon in our arsenal is the hope of human beings -- the belief that the future belongs to those who would build and not destroy; the confidence that conflicts can end and a new day can begin.

And that is why we will support -- we will strengthen our support for effective peacekeeping, while energizing our efforts to prevent conflicts before they take hold. We will pursue a lasting peace in Sudan through support for the people of Darfur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prehensive Peace Agreement, so that we secure the peace that the Sudanese people deserve. (Applause.) And in countries ravaged by violence -- from Haiti to Congo to East Timor -- we will work with the U.N. and other partners to support an enduring peace.

I will also continue to seek a just and lasting peace between Israel, Palestine, and the Arab world. (Applause.) We will continue to work on that issue. Yesterday, I had a constructive meeting with Prime Minister Netanyahu and President Abbas. We have made some progress. Palestinians have strengthened their efforts on security. Israelis have facilitated greater freedom of movement for the Palestinians.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on both sides, the economy in the West Bank has begun to grow. But more progress is needed. We continue to call on Palestinians to end incitement against Israel, and we continue to emphasize that America does not accept the legitimacy of continued Israeli

settlements. (Applause.)

The time has come -- the time has come to re-launch negotiations without preconditions that address the permanent status issues: security for Israelis and Palestinians, borders, refugees, and Jerusalem. And the goal is clear: Two states living side by side in peace and security -- a Jewish state of Israel, with true security for all Israelis; and a viable, independent Palestinian state with contiguous territory that ends the occupation that began in 1967, and realizes the potential of the Palestinian people. (Applause.)

As we pursue this goal, we will also pursue peace between Israel and Lebanon, Israel and Syria, and a broader peace between Israel and its many neighbors. In pursuit of that goal, we will develop regional initiatives with multilateral participation, alongside bilateral negotiations.

Now, I am not naive. I know this will be difficult. But all of us -- not just the Israelis and the Palestinians, but all of us -- must decide whether we are serious about peace, or whether we will only lend it lip service. To break the old patterns, to break the cycle of insecurity and despair, all of us must say publicly what we would acknowledge in private. The United States does Israel no favors when we fail to couple an unwavering commitment to its security with an insistence that Israel respect the legitimate claims and rights of the Palestinians. (Applause.) And -- and nations within this body do the Palestinians no favors when they choose vitriolic attacks against Israel over constructive willingness to recognize Israel's legitimacy and its right to exist in peace and security. (Applause.)

We must remember that the greatest price of this conflict is not paid by us. It's not paid by politicians. It's paid by the Israeli girl in Sderot

who closes her eyes in fear that a rocket will take her life in the middle of the night. It's paid for by the Palestinian boy in Gaza who has no clean water and no country to call his own. These are all God's children. And after all the politics and all the posturing, this is about the right of every human being to live with dignity and security. That is a lesson embedded in the three great faiths that call one small slice of Earth the Holy Land. And that is why, even though there will be setbacks and false starts and tough days, I will not waver in my pursuit of peace. (Applause.)

Third, we must recognize that in the 21st century, there will be no peace unless we take responsibility for the preservation of our planet. And I thank the Secretary General for hosting the subject of climate change yesterday.

The danger posed by climate change cannot be denied. Our responsibility to meet it must not be deferred. If we continue down our current course, every member of this Assembly will see irreversible changes within their borders. Our efforts to end conflicts will be eclipsed by wars over refugees and resources. Development will be devastated by drought and famine. Land that human beings have lived on for millennia will disappear. Future generations will look back and wonder why we refused to act; why we failed to pass on -- why we failed to pass on an environment that was worthy of our inheritance.

And that is why the days when America dragged its feet on this issue are over. We will move forward with investments to transform our energy economy, while providing incentives to make clean energy the profitable kind of energy. We will press ahead with deep cuts in emissions to reach the goals that we set for 2020, and eventually 2050. We will continue to promote renewable energy and efficiency, and share

new technologies with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we will seize every opportunity for progress to address this threat in a cooperative effort with the entire world.

And those wealthy nations that did so much damage to the environment in the 20th century must accept our obligation to lead. But responsibility does not end there. While we must acknowledge the need for differentiated responses, any effort to curb carbon emissions must include the fast-growing carbon emitters who can do more to reduce their air pollution without inhibiting growth. And any effort that fails to help the poorest nations both adapt to the problems that climate change have already wrought and help them travel a path of clean development simply will not work.

It's hard to change something as fundamental as how we use energy. I know that. It's even harder to do so in the midst of a global recession. Certainly, it will be tempting to sit back and wait for others to move first. But we cannot make this journey unless we all move forward together. As we head into Copenhagen, let us resolve to focus on what each of us can do for the sake of our common future.

And this leads me to the final pillar that must fortify our future: a global economy that advances opportunity for all people.

The world is still recovering from the worst economic crisis since the Great Depression. In America, we see the engine of growth beginning to churn, and yet many still struggle to find a job or pay their bills. Across the globe, we find promising signs, but little certainty about what lies ahead. And far too many people in far too many places live through the daily crises that challenge our humanity -- the despair of an empty stomach; the thirst brought on by dwindling water supplies;

the injustice of a child dying from a treatable disease; or a mother losing her life as she gives birth.

In Pittsburgh, we will work with the world's largest economies to chart a course for growth that is balanced and sustained. That means vigilance to ensure that we do not let up until our people are back to work. That means taking steps to rekindle demand so that global recovery can be sustained. And that means setting new rules of the road and strengthening regulation for all financial centers, so that we put an end to the greed and the excess and the abuse that led us into this disaster, and prevent a crisis like this from ever happening again.

At a time of such interdependence, we have a moral and pragmatic interest, however, in broader questions of development -- the questions of development that existed even before this crisis happened. And so America will continue our historic effort to help people feed themselves. We have set aside \$63 billion to carry forward the fight against HIV/AIDS, to end deaths from tuberculosis and malaria, to eradicate polio, and to strengthen public health systems. We are joining with other countries to contribute H1N1 vaccines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e will integrate more economies into a system of global trade. We will support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approach next year's summit with a global plan to make them a reality. And we will set our sights on the eradication of extreme poverty in our time.

Now is the time for all of us to do our part. Growth will not be sustained or shared unless all nations embrace their responsibilities. And that means that wealthy nations must open their markets to more goods and extend a hand to those with less, while reforming international institutions to give more nations a greater voice. And developing nations must root out the corruption that is an obstacle to progress --

for opportunity cannot thrive where individuals are oppressed and business have to pay bribes. That is why we support honest police and independent judges; civil society and a vibrant private sector. Our goal is simple: a global economy in which growth is sustained, and opportunity is available to all.

Now, the changes that I've spoken about today will not be easy to make. And they will not be realized simply by leaders like us coming together in forums like this, as useful as that may be. For as in any assembly of members, real change can only come through the people we represent. That is why we must do the hard work to lay the groundwork for progress in our own capitals. That's where we will build the consensus to end conflicts and to harness technology for peaceful purposes, to change the way we use energy, and to promote growth that can be sustained and shared.

I believe that the people of the world want this future for their children. And that is why we must champion those principles which ensure that governments reflect the will of the people. These principles cannot be afterthoughts -- democracy and human rights are essential to achieving each of the goals that I've discussed today, because governments of the people and by the people are more likely to act in the broader interests of their own people, rather than narrow interests of those in power.

The test of our leadership will not be the degree to which we feed the fears and old hatreds of our people. True leadership will not be measured by the ability to muzzle dissent, or to intimidate and harass political opponents at home. The people of the world want change. They will not long tolerate those who are on the wrong side of history.

This Assembly's Charter commits each of us -- and I quote -- "to reaffirm faith in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in the equal rights of men and women." Among those rights is the freedom to speak your mind and worship as you please; the promise of equality of the races, and the opportunity for women and girls to pursue their own potential; the ability of citizens to have a say in how you are governed, and to have confidence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For just as no nation should be forced to accept the tyranny of another nation, no individual should be forced to accept the tyranny of their own people. (Applause.)

As an African American, I will never forget that I would not be here today without the steady pursuit of a more perfect union in my country. And that guides my belief that no matter how dark the day may seem, transformative change can be forged by those who choose to side with justice. And I pledge that America will always stand with those who stand up for their dignity and their rights -- for the student who seeks to learn; the voter who demands to be heard; the innocent who longs to be free; the oppressed who yearns to be equal.

Democracy cannot be imposed on any nation from the outside. Each society must search for its own path, and no path is perfect. Each country will pursue a path rooted in the culture of its people and in its past traditions. And I admit that America has too often been selective in its promotion of democracy. But that does not weaken our commitment; it only reinforces it. There are basic principles that are universal; there are certain truths which are self-evident --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never waver in our efforts to stand up for the right of people everywhere to determine their own destiny. (Applause.)

Sixty-five years ago, a weary Franklin Roosevelt spoke to the American people in his fourth and final inaugural address. After years of war, he sought to sum up the lessons that could be drawn from the terrible suffering, the enormous sacrifice that had taken place. "We have learned," he said, "to be citizens of the world, members of the human community."

The United Nations was built by men and women like Roosevelt from every corner of the world -- from Africa and Asia, from Europe to the Americas. These architect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had an idealism that was anything but naive -- it was rooted in the hard-earned lessons of war; rooted in the wisdom that nations could advance their interests by acting together instead of splitting apart.

Now it falls to us -- for this institution will be what we make of it. The United Nations does extraordinary good around the world -- feeding the hungry, caring for the sick, mending places that have been broken. But it also struggles to enforce its will, and to live up to the ideals of its founding.

I believe that those imperfections are not a reason to walk away from this institution -- they are a calling to redouble our efforts. The United Nations can either be a place where we bicker about outdated grievances, or forge common ground; a place where we focus on what drives us apart, or what brings us together; a place where we indulge tyranny, or a source of moral authority. In short, the United Nations can be an institution that is disconnected from what matters in the lives of our citizens, or it can be an indispensable factor in advancing the interests of the people we serve.

We have reached a pivotal moment. The United States stands ready to

begin a new chapter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 one that recognizes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all nations. And so, with confidence in our cause, and with a commitment to our values, we call on all nations to join us in building the future that our people so richly deserve.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Applause.)

〈부록 4〉

**Fact Sheet o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ummit on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Disarmament, UNSC Resolution 1887,
September 24, 2009***

“We harbor no illusions about the difficulty of bringing about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We know there are plenty of cynics, and that there will be setbacks to prove their point. But there will also be days like today that push us forward ? days that tell a different story. It is the story of a world that understands that no difference or division is worth destroying all that we have built and all that we love. It is a recognition that can bring people of different nationalities and ethnicities and ideologies together. In my own country, it has brought Democrats and Republican leaders together.”

President Barack Obama

In an historic meeting,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oday convened at the head of state/government level and unanimously co-sponsored and adopted a resolution committing to work toward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and endorsing a broad framework of actions to reduce global nuclear dangers.

* *Fact Sheet o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ummit on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Disarmament UNSC Resolution 1887*,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September 24, 2009,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fact-sheet-united-nations-security-council-summit-nuclear-nonproliferation-and-nucl>>.

The meeting, which was called for and chaired by President Obama during the United States' Presidency of the Security Council, shows concrete progress and growing international political will behind the nuclear agenda that President Obama announced in his speech in Prague in April 2009.

The session was the fifth Summit-level meeting of the Council in its 63 years of existence and the first time that a Security Council Summit has been chaired by a U.S. President.

The new measure, UNSC Resolution 1887, expresses the Council's grave concern about the threat of nuclear proliferation and the need for international action to prevent it. It reaffirms that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means of delivery are threat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shows agreement on a broad range of actions to address nuclear 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nd the threat of nuclear terrorism. Broadly, the resolution supports:

- A revitalized commitment to work toward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and calls for further progress on nuclear arms reductions, urging all states to work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measures of nuclear arms reduction and disarmament.
- A strengthened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and a Review Conference in 2010 that achieves realistic and achievable goals in all three pillars: nuclear disarmament, non-proliferation and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The resolution supports universality of the NPT, calls on all states to adhere to its terms and makes clear the Council's intent to immediately address any notice of intent to withdraw from the Treaty. The resolution also notes the ongoing efforts in the NPT review to identify mechanisms for responding collectively to

any notification of withdrawal.

- Better security for nuclear weapons materials to prevent terrorists from acquiring materials essential to make a bomb, including through the convening of a Nuclear Security Summit in 2010, locking down vulnerable nuclear weapons materials in four years, a goal originally proposed by President Obama, minimizing the civil use of highly enriched uranium to the extent feasible, and encouraging the sharing of best practices as a practical way to strengthen nuclear security and the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and the G-8 Global Partnership.
- The Security Council's authority and vital role in addressing the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posed by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nd underscoring the Council's intent to take action if nuclear weapons or related material are provided to terrorists.
- Addressing the current major challenges to the nonproliferation regime, demanding full compliance with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n Iran and North Korea and calling on the parties to find an early negotiated solution.
-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s (IAEA) essential role in preventing nuclear proliferation and ensuring access to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under effective safeguards.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ensure that the growing interest in nuclear energy does not result in additional countries with nuclear weapons capabilities.
- Encouraging efforts to ensure development of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in a framework that reduces proliferation risk and adheres to the highest standards for safeguards, security and safety and recognizing the inalienable right of parties to the

NPT to develop research, production and use of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 National efforts to make it more difficult for proliferating states and non-state actors to access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s well as efforts to strengthen export controls on proliferation-related materials and stronger detection, deterrence and disruption of illicit trafficking in such materials.
- Key nuclear agreements, including START follow-on agreement, the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the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and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s and its 2005 Amendment.

UNSC Resolution 1887 includes new provisions to deter withdrawal from the NPT and to ensure that nuclear energy is used in a framework that reduces proliferation dangers and adheres to high standards for security. The Council committed to address without delay any state's notification of withdrawal from the NPT and affirmed that states will be held responsible for any violations of the NPT committed prior to their withdrawal from the Treaty.

The Council also endorsed important norms to reduce the likelihood that a peaceful nuclear program can be diverted to a weapons program, including support for stricter national export controls on sensitive nuclear technologies and having nuclear supplier states consider compliance with safeguards agreements when making decisions about nuclear exports and reserve the right to require that material and equipment provided prior to termination be returned if safeguards agreements are abrogated .

The Council also expressed strong support for ensuring the IAEA has

the authority and resources necessary to carry out its mission to verify both the declared use of nuclear materials and facilities and the absence of undeclared activities and affirmed the Council's resolve to support the IAEA's efforts to verify whether states are in compliance with their safeguards obligations.

The resolution calls upon states to conclude safeguards agreements and an Additional Protocol with the IAEA, so that the IAEA will be in a position to carry out all of the inspections necessary to ensure that materials and technology from peaceful nuclear uses are not used to support a weapons program. The Council also endorsed IAEA work on multilateral approaches to the fuel cycle, including assurances of fuel supply to make it easier for countries to choose not to develop enrichment and reprocessing capabilities.

These steps are important in helping address situations where a country uses access to the civilian nuclear benefits of the NPT to cloak a nascent nuclear weapons program and then withdraws from the NPT once it has acquired sufficient technical expertise for its weapons program.

The resolution strengthens implementation for resolution 1540 which requires governments to establish domestic controls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Full implementation of resolution 1540 by all UN member states will require additional financial and political support. The Council reaffirmed the need to give added impetus to the implementation of resolution 1540 by highlighting the options for improving the funding of the 1540 Committee's activities, including through a voluntary trust fund, and reinforcing the Council's commitment to ensure effective and sustainable support for the 1540 Committee's activities.

The Security Council meeting was attended by:

President Barack Obama, United States of America

President Oscar Arias Sanchez, Republic of Costa Rica

President Stjepan Mesic, Republic of Croatia

President Dmitry Anatolyevich Medvedev, Russian Federation

President Felipe Calderon Hinojosa, United Mexican States

President Heinz Fischer, Republic of Austria

President Nguyen Minh Triet,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President Yoweri Kaguta Museveni, Republic of Uganda

President Hu Jintao, People's Republic of China

President Nicolas Sarkozy, France

President Blaise Compaore, Burkina Faso

Prime Minister Gordon Brown,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Prime Minister Yukio Hatoyama, Japan

Prime Minister Recep Tayyip Erdogan, Republic of Turkey

Ban Ki-moon,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

Director General Mohamed Elbaradei,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bdurrahman Mohamed Shalgham,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Libyan Arab Jamahiriya

〈부록 5〉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87,
6191st meeting, September 24 2009***

The Security Council,

Resolving to seek a safer world for all and to create the conditions for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in accordance with the goals of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in a way that promotes international stability, and based on the principle of undiminished security for all,

Reaffirming the Statement of its President adopted at the Council's meeting at the level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n 31 January 1992 (S/23500), including the need for all Member States to fulfil their obligations in relation to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nd to prevent proliferation in all its aspects of al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Recalling also that the above Statement (S/23500) underlined the need for all Member States to resolve peacefully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any problems in that context threatening or disrupting the maintenance of regional and global stability,

Reaffirming that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 UN Security Council,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87* (2009), UN Doc. S/RES/1887 (24 September 2009), <[daccess-dds-ny.un.org/doc/UNDOC/GEN/N09/523/74/PDF/N0952374.pdf?OpenElement](https://access-dds-ny.un.org/doc/UNDOC/GEN/N09/523/74/PDF/N0952374.pdf?OpenElement)>.

means of delivery, constitute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earing in mind the responsibilities of other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and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field of disarmament,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as well as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and supporting them to continue to play their due roles,

Underlining that the NPT remains the cornerstone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and the essential foundation for the pursuit of nuclear disarmament and for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Reaffirming its firm commitment to the NPT and its conviction that the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should be maintained and strengthened to ensure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recalling in this regard the outcomes of past NPT Review Conferences, including the 1995 and 2000 final documents,

Calling for further progress on all aspects of disarmament to enhance global security,

Recalling the Statement by its President adopted at the Council's meeting held on 19 November 2008 (S/PRST/2008/43),

Welcoming the decisions of those non-nuclear-weapon States that have dismantled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s or renounced the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Welcoming the nuclear arms reduction and disarmament efforts undertaken and accomplished by nuclear-weapon States, and underlining the need to pursue further efforts in the sphere of nuclear disarma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VI of the NPT,

Welcoming in this connection the decis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conduct negotiations to conclude a new comprehensive legally binding agreement to replace the Treaty on the Reduction and Limitation of Strategic Offensive Arms, which expires in December 2009,

Welcoming and *supporting* the steps taken to conclude nuclear-weapon-free zone treaties and reaffirming the conviction that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ly recognized nuclear-weapon-free zones on the basis of arrangements freely arrived at among the States of the region concerned, and in accordance with the 1999 United Nations Disarmament Commission guidelines, enhances global and regional peace and security, strengthens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and contributes toward realizing the objectives of nuclear disarmament,

Noting its support, in this context, for the convening of the Second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and signatories of the Treaties that establish Nuclear-Weapon-Free Zones to be held in New York on 30 April 2010,

Reaffirming its resolutions 825 (1993), 1695 (2006), 1718 (2006), and 1874 (2009),

Reaffirming its resolutions 1696 (2006), 1737 (2006), 1747 (2007), 1803 (2008), and 1835 (2008),

Reaffirming all other relevant non-proliferation resolutions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Gravely concerned about the threat of nuclear terrorism, and recognizing the need for all States to take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nuclear

material or technical assistance becoming available to terrorists,

Noting with interest the initiative to convene, in coordination wit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Expressing its support for the convening of the 2010 Global Summit on Nuclear Security,

Affirming its support for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its 2005 Amendment, and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Recognizing the progress made by the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and the G-8 Global Partnership,

Noting the contribution of civil society in promoting all the objectives of the NPT,

Reaffirming its resolution 1540 (2004) and the necessity for all States to implement fully the measures contained therein, and calling upon all Member States and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to cooperate actively with the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that resolution, including in the course of the comprehensive review as called for in resolution 1810 (2008),

1. *Emphasizes* that a situation of non-compliance with non-proliferation obligations shall be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Security Council, which will determine if that situation constitute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emphasizes the Security Council's primary responsibility in addressing such threats;

2. *Calls upon* States Parties to the NPT to comply fully with all their obligations and fulfil their commitments under the Treaty,
3. *Notes* that enjoyment of the benefits of the NPT by a State Party can be assured only by its 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s thereunder;
4. *Calls upon* all States that are not Parties to the NPT to accede to the Treaty as non-nuclear-weapon States so as to achieve its universality at an early date, and pending their accession to the Treaty, to adhere to its terms;
5. *Calls upon* the Parties to the NPT, pursuant to Article VI of the Treaty, to undertake to pursue negotiations in good faith on effective measures relating to nuclear arms reduction and disarmament, and on a Treaty on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under strict and effective international control, and calls on all other States to join in this endeavour;
6. *Calls upon* all States Parties to the NPT to cooperate so that the 2010 NPT Review Conference can successfully strengthen the Treaty and set realistic and achievable goals in all the Treaty's three pillars: non-proliferatio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and disarmament;
7. *Calls upon* all States to refrain from conducting a nuclear test explosion and to sign and ratify the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CTBT), thereby bringing the treaty into force at an early date;
8. *Calls upon*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to negotiate a Treaty

banning the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for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as soon as possible, welcomes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s adoption by consensus of its Program of Work in 2009, and requests all Member States to cooperate in guiding the Conference to an early commencement of substantive work;

9. *Recalls* the statements by each of the five nuclear-weapon States, noted by resolution 984 (1995), in which they give security assurances against the use of nuclear weapons to non-nuclear-weapon State Parties to the NPT, and affirms that such security assurances strengthen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10. *Expresses* particular concern at the current major challenges to the non-proliferation regime that the Security Council has acted upon, demands that the parties concerned comply fully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the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reaffirms its call upon them to find an early negotiated solution to these issues;
11. *Encourages* efforts to ensure development of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by countries seeking to maintain or develop their capacities in this field in a framework that reduces proliferation risk and adheres to the highest international standards for safeguards, security, and safety;
12. *Underlines* that the NPT recognizes in Article IV the inalienable right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to develop research, production and use of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without discrimination and in conformity with Articles I and II, and recalls in this context Article III of the NPT and Article

II of the IAEA Statute;

13. *Calls upon* States to adopt stricter national controls for the export of sensitive goods and technologies of the nuclear fuel cycle;
14. *Encourages* the work of the IAEA on multilateral approaches to the nuclear fuel cycle, including assurances of nuclear fuel supply and related measures, as effective means of addressing the expanding need for nuclear fuel and nuclear fuel services and minimizing the risk of proliferation, and urges the IAEA Board of Governors to agree upon measures to this end as soon as possible;
15. *Affirms* that effective IAEA safeguards are essential to prevent nuclear proliferation and to facilitat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and, in that regard:
 - a. *Calls upon* all non-nuclear-weapon States party to the NPT that have yet to bring into force a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 or a modified small quantities protocol to do so immediately,
 - b. *Calls upon* all States to sign, ratify and implement an additional protocol, which together with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s constitute essential elements of the IAEA safeguards system,
 - c. *Stresses* the importance for all Member States to ensure that the IAEA continue to have all the necessary resources and authority to verify the declared use of nuclear materials

and facilities and the absence of undeclared activities, and for the IAEA to report to the Council accordingly as appropriate;

16. *Encourages* States to provide the IAEA with the cooperation necessary for it to verify whether a state is in compliance with its safeguards obligations, and affirms the Security Council's resolve to support the IAEA's efforts to that end, consistent with its authorities under the Charter;
17. *Undertakes* to address without delay any State's notice of withdrawal from the NPT, including the events described in the statement provided by the State pursuant to Article X of the Treaty, while noting ongoing discussions in the course of the NPT review on identifying modalities under which NPT States Parties could collectively respond to notification of withdrawal, and affirms that a State remains responsible under international law for violations of the NPT committed prior to its withdrawal;
18. *Encourages* States to require as a condition of nuclear exports that the recipient State agree that, in the event that it should terminate, withdraw from, or be found by the IAEA Board of Governors to be in non-compliance with its IAEA safeguards agreement, the supplier state would have a right to require the return of nuclear material and equipment provided prior to such termination, non-compliance or withdrawal, as well as any special nuclear material produced through the use of such material or equipment;
19. *Encourages* States to consider whether a recipient State has

signed and ratified an additional protocol based on the model additional protocol in making nuclear export decisions;

20. *Urges* States to require as a condition of nuclear exports that the recipient State agree that, in the event that it should terminate its IAEA safeguards agreement, safeguards shall continue with respect to any nuclear material and equipment provided prior to such termination, as well as any special nuclear material produced through the use of such material or equipment;
21. *Calls for* universal adherence to the Convention on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s and its 2005 Amendment, and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22. *Welcomes* the March 2009 recommendations of the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540 (2004) to make more effective use of existing funding mechanisms, including the conside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voluntary fund, and affirms its commitment to promote full implementation of resolution 1540 (2004) by Member States by ensuring effective and sustainable support for the activities of the 1540 Committee;
23. *Reaffirms* the need for full implementation of resolution 1540 (2004) by Member States and, with an aim of preventing access to, or assistance and financing fo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related material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by non-State actors, as defined in the resolution, calls upon Member States to cooperate actively with the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that resolution and the IAEA, including

rendering assistance, at their request, for their implementation of resolution 1540 (2004) provisions, and in this context welcomes the forthcoming comprehensive review of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of resolution 1540 (2004) with a view to increasing its effectiveness, and calls upon all States to participate actively in this review;

24. *Calls upon* Member States to share best practices with a view to improved safety standards and nuclear security practices and raise standards of nuclear security to reduce the risk of nuclear terrorism, with the aim of securing all vulnerable nuclear material from such risks within four years;
25. *Calls upon* all States to manage responsibly and minimize to the greatest extent that is technically and economically feasible the use of highly enriched uranium for civilian purposes, including by working to convert research reactors and radioisotope production processes to the use of low enriched uranium fuels and targets;
26. *Calls upon* all States to improve their national capabilities to detect, deter, and disrupt illicit trafficking in nuclear materials throughout their territories, and calls upon those States in a position to do so to work to enhance international partnerships and capacity building in this regard;
27. *Urges* all States to take all appropriate national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authorities and legislation,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to prevent proliferation financing and shipments, to strengthen export controls, to secure sensitive materials, and to control access to intangible

transfers of technology;

28. *Declares* its resolve to monitor closely any situations involving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heir means of delivery or related material, including to or by non-State actors as they are defined in resolution 1540 (2004), and, as appropriate, to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nsure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29. *Decides* to remain seized of the matter.

〈부록 6〉

Statement by President Obama on the 40th Anniversary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March 5, 2010*

Forty years ago today, in the midst of a Cold War,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entered into force, becoming the cornerstone of the world's efforts to prevent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Today, the threat of global nuclear war has passed, but the danger of nuclear proliferation endures, making the basic bargain of the NPT more important than ever: nations with nuclear weapons will move toward disarmament, nations without nuclear weapons will forsake them, and all nations have an “inalienable right” to peaceful nuclear energy.

Each of these three pillars -- disarmament, nonproliferation and peaceful uses -- are central to the vision that I outlined in Prague of stopping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nd seeking a world without them.

To promote disarmament, the United States is working with Russia to complete negotiations on a new START Treaty that will significantly reduce our nuclear arsenals. Our forthcoming Nuclear Posture Review will move beyond outdated Cold War thinking and reduce the number

* *Statement by President Obama on the 40th Anniversary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March 5, 2010, <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statement-president-obama-40th-anniversary-nuclear-nonproliferation-treaty>.

and role of nuclear weapons in our national security strategy, even as we maintain a safe, secure and effective nuclear deterrent. In addition, we will seek to ratify the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and negotiate a treaty to end the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for use in nuclear weapons.

To prevent proliferation, we will build on the historic resolution that we achieved at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last September by bringing together more than 40 nations at our Nuclear Security Summit next month with the goal of securing the world's vulnerable nuclear materials in four years. At this spring's treaty review conference and beyond,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allies and partners to strengthen the NPT and to enforce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every nation, because the world cannot afford additional proliferation or regional arms races.

Finally, to ensure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the United States seeks a new framework for civil nuclear cooperation among nations, including an international fuel bank and the necessary resources and authority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For nations that uphold their responsibilities, peaceful nuclear energy can help unlock advances in medicine, agricul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It took years of focused effort among many nations to bring the NPT into force four decades ago and to sustain it as the most widely embraced nuclear agreement in history. On this 40th anniversary, the United States reaffirms our resolve to strengthen the nonproliferation regime to meet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as we pursue our ultimate vision of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World Leaders and Heads of Delegation Attending the Nuclear Security Summit, April 10, 2010*

Below and attached is a list of world leaders and Heads of Delegation attending the Nuclear Security Summit in Washington on April 12-13: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Algeria

His Excellency Mourad Medelci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Algeria

Argentine Republic

Her Excellency Cristina Fernandez de Kirchner

President of the Argentine Republic

Republic of Armenia

His Excellency Serzh Sargsyan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Armenia

Australia

The Honorable Senator John Faulkner

Minister for Defense of Australia

* *World Leaders and Heads of Delegation Attending the Nuclear Security Summit*, April 10, 2010, <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world-leaders-and-heads-delegation-attending-nuclear-security-summit>.

Belgium

His Excellency Yves Leterme
Prime Minister of Belgium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His Excellency Luiz Inacio Lula da Silva
President of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Canada

The Right Honorable Stephen Harper, P.C., M.P.
Prime Minister of Canada

Republic of Chile

His Excellency Sebastian Pinera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Chile

People's Republic of China

His Excellency Hu Jintao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zech Republic

His Excellency Jan Fischer
Prime Minister of the Czech Republic

Arab Republic of Egypt

His Excellency Ahmed Aboul Gheit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European Union

His Excellency Herman Van Rompuy
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

Republic of Finland

Her Excellency Tarja Halonen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Finland

French Republic

His Excellency Nicolas Sarkozy
President of the French Republic

Georgia

His Excellency Mikheil Saakashvili
President of Georgia

Federal Republic of Germany

Her Excellency Dr. Angela Merkel
Chancellor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Republic of India

His Excellency Dr. Manmohan Singh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India

Republic of Indonesia

His Excellency Dr. Boediono
Vic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Mr. Yukiya Amano
Director General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srael

His Excellency Dan Meridor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Intelligence and Atomic Energy
of Israel

Italian Republic

His Excellency Silvio Berlusconi

President of the Council of Ministers of the Italian Republic

Japan

His Excellency Yukio Hatoyama

Prime Minister of Japan

Hashemite Kingdom of Jordan

His Majesty King Abdullah II ibn Al Hussein

King of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Republic of Kazakhstan

His Excellency Nursultan Nazarbayev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Republic of Korea

His Excellency Lee Myung-bak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alaysia

The Honorable Dato' Sri Mohd Najib bin Tun Haji Abdul Razak

Prime Minister of Malaysia

United Mexican States

His Excellency Felipe Calderon Hinojosa

Presid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Kingdom of Morocco

His Excellency Abbas El Fassi

Prime Minister of the Kingdom of Morocco

Kingdom of the Netherlands

His Excellency Dr. Jan Peter Balkenende
Prime Minister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New Zealand

The Honorable John Key
Prime Minister of New Zealand

Federal Republic of Nigeria

His Excellency Dr. Goodluck E. Jonathan
Acting Presid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Norway

His Excellency Jens Stoltenberg
Prime Minister of Norway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His Excellency Syed Yusuf Raza Gilani
Prime Minister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Republic of Philippines

Her Excellency Gloria Macapagal-Arroyo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Republic of Poland

His Excellency Radoslaw Sikorski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Poland

Russian Federation

His Excellency Dmitry A. Medvedev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Kingdom of Saudi Arabia

His Royal Highness Prince Muqrin bin Abd al-Aziz Al Saud
President of the General Intelligence Presidency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Republic of Singapore

His Excellency Lee Hsien Loong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Republic of South Africa

His Excellency Jacob Zuma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Spain

His Excellency Jose Luis Rodriguez Zapatero
President of the Government of Spain

Sweden

His Excellency Fredrik Reinfeldt
Prime Minister of Sweden

Swiss Confederation

Her Excellency Doris Leuthard
President of the Swiss Confederation

Kingdom of Thailand

His Excellency Trairong Suwankiri
Deputy Prime Minister of the Kingdom of Thailand

Republic of Turkey

His Excellency Recep Tayyip Erdogan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Turkey

Ukraine

His Excellency Viktor Yanukovich
President of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His Highness Sheikh Mohamed bin Zayed Al Nahyan
Crown Prince of Abu Dhabi and Deputy Supreme Commander of the
UAE Armed Forces

United Kingdom

The Right Honorable David Miliband, M.P.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nd Commonwealth Affairs

United Nations

His Excellency Ban Ki-moon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United States

The Honorable Barack Obam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His Excellency Nguyen Tan Dung
Prime Minister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부록 8〉

**Remarks by the President at the Opening Plenary Session
of the Nuclear Security Summit, Washington Convention
Center, Washington, D.C., April 13, 2010***

THE PRESIDENT: Good morning, everybody. I'd like to get started. Let me begin by thanking all of you for your participation last night. I thought it was a very important discussion.

Before I begin, I want to take this moment once again to acknowledge the terrible tragedy that struck the Polish people this weekend. We are joined today by a distinguished delegation from Poland, led by Ambassador Kupiecki. Mr. Ambassador, all of us were shocked and deeply saddened by the devastating loss of President Kaczynski, the First Lady, and so many distinguished civilian and military leaders from your country. This was a loss, not just for Poland, but for the world.

As a close friend and ally, the United States stands with Poland and Poles everywhere in these very difficult days. As an international community, I know that we will all rally around the Polish people, who have shown extraordinary strength and resilience throughout their

* *Remarks by the President at the Opening Plenary Session of the Nuclear Security Summit, Washington Convention Center, Washington, D.C.,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April 13, 2010, <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remarks-president-opening-plenary-session-nuclear-security-summit>.*

history. So our hearts go out to your people. Our thoughts and prayers are with them. We join them in this time of mourning. And so, if everybody is agreeable, I would like to ask for a moment of silence to show that solidarity and to honor those who were lost.

(Pause for moment of silence.)

Thank you. It is my privilege to welcome you to Washington and to formally convene this historic summit. We represent 47 nations from every region of the world, and I thank each of you for being here. This is an unprecedented gathering to address an unprecedented threat.

Two decades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we face a cruel irony of history -- the risk of a nuclear confrontation between nations has gone down, but the risk of nuclear attack has gone up.

Nuclear materials that could be sold or stolen and fashioned into a nuclear weapon exist in dozens of nations. Just the smallest amount of plutonium -- about the size of an apple -- could kill and injure hundreds of thousands of innocent people. Terrorist networks such as al Qaeda have tried to acquire the material for a nuclear weapon, and if they ever succeeded, they would surely use it. Were they to do so, it would be a catastrophe for the world -- causing extraordinary loss of life, and striking a major blow to global peace and stability.

In short, it is increasingly clear that the danger of nuclear terrorism is one of the greatest threats to global security -- to our collective security.

And that's why, one year ago today in -- one year ago in Prague, I called for a new international effort to secure all vulnerable nuclear ma-

terials around the world in four years. This is one part of a broader, comprehensive agenda that the United States is pursuing -- including reducing our nuclear arsenal and stopping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 an agenda that will bring us closer to our ultimate goal of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Over the past year, we've made progress. At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last fall, we unanimously passed Resolution 1887 endorsing this comprehensive agenda, including the goal of securing all nuclear materials. Last night, in closed session, I believe we made further progress, pursuing a shared understanding of the grave threat to our people.

And today, we have the opportunity to take the next steps.

We have the opportunity, as individual nations, to take specific and concrete actions to secure the nuclear materials in our countries and to prevent illicit trafficking and smuggling. That will be our focus this morning.

We have the opportunity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he IAEA, with the resources and authorities it needs to meet its responsibilities. That will be our focus at our working lunch.

We have the opportunity, as an international community, to deepen our cooperation and to strengthen the institutions and partnerships that help prevent nuclear materials from ever falling into the hands of terrorists. And that will be our focus this afternoon.

And we have the opportunity, as partners, to ensure that our progress is not a fleeting moment, but part of a serious and sustained effort.

And that's why I am so pleased to announce that President Lee has agreed to host the next Nuclear Security Summit in the Republic of Korea in two years. This reflects South Korea's leadership, regionally and globally, and I thank President Lee and the South Korean people for their willingness to accept this responsibility.

I'd ask President Lee just to say a few words.

PRESIDENT LEE: Thank you for all colleagues, for supporting Korea to host next summit in 2012.

I assure you I will do best to make this summit a success. So I hope to see all of you in Korea. Thank you. (Applause.)

THE PRESIDENT: Thank you very much.

So today is an opportunity -- not simply to talk, but to act. Not simply to make pledges, but to make real progress on the security of our people. All this, in turn, requires something else, which is something more fundamental. It will require a new mindset -- that we summon the will, as nations and as partners, to do what this moment in history demands.

I believe strongly that the problems of the 21st century cannot be solved by any one nation acting in isolation. They must be solved by all of us coming together.

At the dawn of the nuclear age that he helped to unleash, Albert Einstein said: "Now everything has changed..." And he warned: "We are drifting towards a catastrophe beyond comparison. We shall require a substantially new manner of thinking if mankind is to survive."

That truth endures today. For the sake of our common security, for the sake of our survival, we cannot drift. We need a new manner of thinking -- and action. That is the challenge before us. And I thank all of you for being here to confront that challenge together, in partnership.

And with that, I'm going to ask that we take a few moments to allow the press to exit before our first session.

END

9:53 A.M. EDT

Communiqué of the Washington Nuclear Security Summit, April 13, 2010*

Nuclear terrorism i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threats to international security, and strong nuclear security measures are the most effective means to prevent terrorists, criminals, or other unauthorized actors from acquiring nuclear materials.

In addition to our shared goals of nuclear disarmament,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we also all share the objective of nuclear security. Therefore those gathered here in Washington, D.C. on April 13, 2010, commit to strengthen nuclear security and reduce the threat of nuclear terrorism. Success will require responsible national actions and sustained and effe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We welcome and join President Obama's call to secure all vulnerable nuclear material in four years, as we work together to enhance nuclear security.

Therefore, we:

1. Reaffirm the fundamental responsibility of States, consistent

* *Communiqué of the Washington Nuclear Security Summit*, April 13, 2010, <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communiqu-washington-nuclear-security-summit>.

with their respective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maintain effective security of all nuclear materials, which includes nuclear materials used in nuclear weapons, and nuclear facilities under their control; to prevent non-state actors from obtaining the information or technology required to use such material for malicious purposes;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robust national legislative and regulatory frameworks for nuclear security;

2. Call on States to work cooperatively as an international community to advance nuclear security, requesting and providing assistance as necessary;
3. Recognize that highly enriched uranium and separated plutonium require special precautions and agree to promote measures to secure, account for, and consolidate these materials, as appropriate; and encourage the conversion of reactors from highly enriched to low enriched uranium fuel and minimization of use of highly enriched uranium, where technically and economically feasible;
4. Endeavor to fully implement all existing nuclear security commitments and work toward acceding to those not yet joined, consistent with national laws, policies and procedures;
5. Support the objectives of international nuclear security instruments, including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s amended,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as essential elements of the global nuclear security architecture;

6. Reaffirm the essential role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n the international nuclear security framework and will work to ensure that it continues to have the appropriate structure, resources and expertise needed to carry out its mandated nuclear security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its Statute, relevant General Conference resolutions and its Nuclear Security Plans;
7. Recognize the role and contributions of the United Nations as well as the contributions of the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and the G-8-led Global Partnership Against the Spread of Weapons and Materials of Mass Destruction within their respective mandates and memberships;
8. Acknowledge the need for capacity building for nuclear security and cooperation at bilateral, regional and multilateral levels for the promotion of nuclear security culture through technology developm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education, and training; and stress the importance of optimiz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of assistance;
9. Recognize the need for cooperation among States to effectively prevent and respond to incidents of illicit nuclear trafficking; and agree to share, subject to respective national laws and procedures, information and expertise through bilateral and multilateral mechanisms in relevant areas such as nuclear detection, forensics, law enforcement, and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10. Recognize the continuing role of nuclear industry, including the private sector, in nuclear security and will work with in-

dustry to ensure the necessary priority of physical protection, material accountancy, and security culture;

11.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strong nuclear security practices that will not infringe upon the rights of States to develop and utilize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and technology and will facilit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nuclear security; and
12. Recognize that measures contributing to nuclear material security have value in relation to the security of radioactive substances and encourage efforts to secure those materials as well.

Maintaining effective nuclear security will require continuous national efforts facilitated by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undertaken on a voluntary basis by States. We will promote the strengthening of global nuclear security through dialogue and cooperation with all states.

Thus, we issue the Work Plan as guidance f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action including through cooperation within the context of relevant international fora and organizations. We will hold the next Nuclear Security Summit in the Republic of Korea in 2012.

April 13, 2010

Work Plan of the Washington Nuclear Security Summit, April 13, 2010*

This Work Plan supports the Communiqué of the Washington Nuclear Security Summit. It constitutes a political commitment by the Participating States to carry out, on a voluntary basis, applicable portions of this Work Plan, consistent with respective national laws and international obligations, in all aspects of the storage, use, transportation and disposal of nuclear materials and in preventing non-state actors from obtaining the information required to use such material for malicious purpose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as an important legally binding multilateral instrument addressing threats posed by acts of nuclear terrorism:

1. Participating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will work together to achieve universality of the Convention, as soon as possible;
2. Participating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will assist States, as appropriate and upon their request, to implement the Convention; and

* *Work Plan of the Washington Nuclear Security Summit*, 13 April, 2010, <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work-plan-washington-nuclear-security-summit>.

3. Participating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encourage discussions among States Parties to consider measures to ensure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as called for in Article 20 of the Convention.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s the only multilateral legally binding agreement dealing with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in peaceful uses, and the value of the 2005 Amendment to the Convention in strengthening global security:

1. Participating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will work towards its universal adherence and where applicable, to accelerate the ratification processes of the Amendment to the Convention and to act for early implementation of that Amendment;
2. Participating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call on all States to act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Amendment until such time as it enters into force; and
3. Participating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will assist States, as appropriate and upon their request, to implement the Convention and the Amendment.

Noting the need to fully impleme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UNSCR) 1540 (2004) on preventing non-State actors from obtain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their means of delivery and related materials, in particular as it relates to nuclear material:

1. Participating States support the continued dialogue between the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UNSCR

1540 and States and support strengthene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is regard, in accordance with relevant United Nations resolutions an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United Nations Global Counterterrorism Strategy;

2. Participating States support the activities of the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UNSCR 1540 to promote full implementation;
3. Participating Stat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omplete and timely reporting as called for by UNSCR 1540, and will work with other States to do so, including by providing technical support or assistance, as requested;
4. Participating States note the outcome of Comprehensive Review by the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UNSCR 1540, including the conside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voluntary fund, and express their support for ensuring the effective and sustainable support for the activities of the 1540 Committee;
5. With respect to the nuclear security-related aspects of Paragraph 3, sections (a) and (b) of UNSCR 1540, Participating Stat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valuating and improving their physical protection systems to ensure that they are capable of achieving the objectives set out in relevant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Nuclear Security Series documents and as contained in the document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INFCIRC/225); and
6. Participating States in a position to do so are encouraged to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to those States that request it through appropriate mechanisms, including through the Committee's efforts to match needs with available resources.

Welcoming IAEA activities in support of national efforts to enhance nuclear security worldwide and commending the work of the IAEA for the provision of assistance, upon request, through its Nuclear Security Programme an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uclear Security Plan 2010 - 2013, approved by the Board of Governors in September 2009 and noted by the IAEA General Conference, and welcoming IAEA programs to advance new technologies to improve nuclear security and nuclear materials accountancy.

Recognizing that the IAEA is facilitating the development by member states, in the framework of the Nuclear Security Series, of guidance and recommendations relating to the prevention and detection of, and response to, theft, sabotage, unauthorized access and illegal transfer, or other malicious acts involving, inter alia, nuclear material, and associated facilities, and is providing guidance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effective nuclear security measures.

Noting that pursuit of the objectives of this Work Plan will not be interpreted so as to alter the mandate or responsibilities of the IAEA:

1. Participating States note that the IAEA's Nuclear Security Series of documents provides recommendations and guidance to assist States in a wide range of aspects of nuclear security, and encourage the widest possible participation by all its member states in the process;
2. Participating States in a position to do so, will work actively

with the IAEA towards the completion and implementation, as appropriate, of the guidance provided by the Nuclear Security Series, and to assist, upon request, other States in doing so;

3. Participating States in particular welcome and support the IAEA's efforts to finalize the fifth revision of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INFCIRC/225, which will be published in the Nuclear Security Series;
4. Participating Stat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nuclear material accountancy in support of nuclear security and look forward to the completion of the technical guidance document on "Nuclear Material Accountancy Systems at Facilities";
5. Participating States will endeavor to incorporate, as appropriate, the relevant principles set out in the Nuclear Security Series documents, into the planning,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nuclear facilities;
6. Participating States, when implementing their national nuclear security measures, will support the use of the IAEA Implementing Guide on the Development, Use and Maintenance of the Design Basis Threat to elaborate their national design basis threat as appropriate, to include the consideration of outsider and insider threats;
7. Participating States welcome the IAEA's efforts to assist States to develop, upon request, Integrated Nuclear Security Support Plans to consolidate their nuclear security needs into integrated plans for nuclear security improvements and assistance;

8. Participating States recognize the value of IAEA support mechanisms such as the International Physical Protection Advisory Service missions to review, as requested, their physical protection systems for civilian nuclear material and facilities; and
9. Participating States call upon all member states of the IAEA in a position to do so to provide the necessary support to enable the IAEA to implement these important activities.

Noting the contributions to the promotion of nuclear security by the U.N. and initiatives such as the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the G-8 Global Partnership Against the Spread of Weapons and Materials of Mass Destruction, as well as other bilateral, regional, multilateral, and nongovernmental activities within their respective mandates and memberships:

1. Participating States will work together, as appropriate, to ensure that nuclear security cooperation mechanisms are complementary, reinforcing, efficient, consistent with related IAEA activities, and appropriately matched to identified needs in those States requesting assistance;
2. Participating States encourage, where appropriate, expanded participation in and commitment to international initiatives and voluntary cooperative mechanisms aimed at improving nuclear security and preventing nuclear terrorism; and
3. Participating States welcome the intent of the members of the G-8 Global Partnership, in a position to do so, to undertake additional programming to enhance nuclear security.

Recognizing States' rights to develop and use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and noting the responsibility of each State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all nuclear materials and facilities under its jurisdiction and recognize that highly enriched uranium and separated plutonium are particularly sensitive and require special precautions:

1. Participating States will consider, where appropriate, the consolidation of national sites where nuclear material is held;
2. Participating States will continue to exercise particular care in ensuring the safe and secure transport of nuclear materials, both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nsport;
3. Participating States, where appropriate, will consider on a national basis the safe, secure and timely removal and disposition of nuclear materials from facilities no longer using them;
4. Participating States will continue to exercise particular care in securing and accounting for separated plutonium,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otential of various forms for use in a nuclear explosive device;
5. Participating States will consider, where appropriate, converting highly-enriched-uranium fueled research reactors, and other nuclear facilities using highly enriched uranium, to use low enriched uranium, where it is technically and economically feasible;
6. Participating States, as appropriate, will collaborate to research and develop new technologies that require neither highly enriched uranium fuels for reactor operation nor highly enriched

uranium targets for producing medical or other isotopes, and will encourage the use of low enriched uranium and other proliferation-resistant technologies and fuels in various commercial applications such as isotope production;

7. Participating States in a position to do so will provide assistance to those States requesting assistance to secure, account for, consolidate, and convert nuclear materials; and
8. Participating States will consider how to best address the security of radioactive sources, as well as consider further steps as appropriate.

Mindful of the responsibilities of every Participating State to maintain effective nuclear security and a robust domestic regulatory capacity:

1. Participating States will establish and maintain effective national nuclear security regulations, including the periodic review and adjustment of the regulations as the State considers appropriate;
2. Participating States undertake to maximize regulatory independence, consistent with each State's particular legal and institutional structures;
3. Participating States will undertake to build regulatory capacity and ensure sufficiently trained and fully vetted professional nuclear security staff and adequate resources, taking into account current needs and future expansion of their respective nuclear programs; and
4. Participating States will pursue the review and enforcement of compliance with national nuclear security regulations as a

matter of priority.

Understanding the role of the nuclear industry, including the private sector, in nuclear security and recognizing that national governments are responsible for standard setting within each State:

1. Participating States will work, in guiding the nuclear industry, to promote and sustain strong nuclear security culture and corporate commitment to implement robust security practices, including regular exercises and performance testing of nuclear security features, consistent with national regulations;
2. Consistent with State requirements, Participating States will facilitate exchange of best practices, where legally and practically feasible, in nuclear security in the nuclear industry, and in this respect, will utilize relevant institutions to support such exchanges; and
3. Participating States encourage nuclear operators and architect/engineering firms to take into account and incorporate, where appropriate, effective measures of physical protection and security culture into the planning,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civilian nuclear facilities and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upon request, to other States in doing so.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he human dimension of nuclear security, the need to enhance security culture, and the need to maintain a well-trained cadre of technical experts:

1. Participating States will promote cooperation, as appropriate, amo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overnments, industries,

other stakeholders, and academia for effective capacity building, including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nuclear security programs;

2. Participating States will encourage the creation of and networking among nuclear security support centres for capacity building to disseminate and share best practices and will support IAEA activities in this area;
3. Participating States encourage the creation of adequate national nuclear security capacities, and encourage supplier countries and technology suppliers to support those capacities in the recipient countries, including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upon request and consistent with each State's particular legal and institutional structures;
4. Participating States will encourage an integrated approach to education and training and institutional capacity building by all stakeholders having a key role in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dequate security infrastructure; and
5. Participating States will encourage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measures to ensure the proper management of sensitive information in order to prevent illicit acquisition or use of nuclear material, and, where appropriate, will support bilateral and multilateral capacity building projects, upon request.

Underscoring the value of exchanging accurate and verified information, without prejudice to confidentiality provisions, to detect, prevent, suppress, investigate, and prosecute acts or attempted acts of illicit nuclear trafficking and nuclear terrorism:

1. Participating States will strive to improve their national criminal laws, as needed, to ensure that they have the adequate authority to prosecute all types of cases of illicit nuclear trafficking and nuclear terrorism and commit to prosecuting these crimes to the full extent of the law;
2. Participating States are encouraged to develop and apply mechanisms to expand sharing of information on issues, challenges, risks and solutions related to nuclear security, nuclear terrorism and illicit nuclear trafficking in a comprehensive and timely manner; and
3. Participating States are encouraged to develop methods and mechanisms, where appropriate, to enhance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llaboration in sharing urgent and relevant information on nuclear security and incidents involving illicit nuclear trafficking.

Noting the IAEA's and Participating States' work in the field of nuclear detection and nuclear forensics, aimed at assisting States in connection with the detection of and response to illicitly trafficked nuclear material, and determination of its origin, an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respecting provisions on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1. Participating States will consider taking further steps, nationally, bilaterally or multilaterally, to enhance their technical capabilities, including the appropriate use of new and innovative technologies, to prevent and combat illicit nuclear trafficking;
2. Participating States will explore ways to work together to develop national capacities for nuclear forensics, such as the creation

of national libraries and an international directory of points of contact, to facilitate and encourage cooperation between States in combating illicit nuclear trafficking , including relevant IAEA activities in this area; and

3. Participating States will explore ways to enhance broader cooperation among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customs and law enforcement bodies to prevent illicit nuclear trafficking and acts of nuclear terrorism, including through joint exercises and sharing of best practices.

April 13, 2010

Press Conference by the President at the Nuclear Security Summit, Washington Convention Center, Washington, D.C., April 13, 2010*

THE PRESIDENT: Good afternoon, everybody. We have just concluded an enormously productive day.

I said this morning that today would be an opportunity for our nations, both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to make concrete commitments and take tangible steps to secure nuclear materials so they never fall into the hands of terrorists who would surely use them.

This evening, I can report that we have seized this opportunity, and because of the steps we've taken -- as individual nations and as an international community -- the American people will be safer and the world will be more secure.

I want to thank all who participated in this historic summit -- 49 leaders from every region of the world. Today's progress was possible because these leaders came not simply to talk, but to take action; not simply to make vague pledges of future action, but to commit to meaningful steps that they are prepared to implement right now.

* *Press Conference by the President at the Nuclear Security Summit, April 13, 2010*, <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press-conference-president-nuclear-security-summit>.

I also want to thank my colleagues for the candor and cooperative spirit that they brought to the discussions. This was not a day of long speeches or lectures on what other nations must do. We listened to each other, with mutual respect. We recognized that while different countries face different challenges, we have a mutual interest in securing these dangerous materials.

So today is a testament to what is possible when nations come together in a spirit of partnership to embrace our shared responsibility and confront a shared challenge. This is how we will solve problems and advance the security of our people in the 21st century. And this is reflected in the communiqué that we have unanimously agreed to today.

First, we agreed on the urgency and seriousness of the threat. Coming into this summit, there were a range of views on this danger. But at our dinner last night, and throughout the day, we developed a shared understanding of the risk.

Today, we are declaring that nuclear terrorism i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threats to international security. We also agreed that the most effective way to prevent terrorists and criminals from acquiring nuclear materials is through strong nuclear security -- protecting nuclear materials and preventing nuclear smuggling.

Second, I am very pleased that all the nations represented here have endorsed the goal that I outlined in Prague one year ago -- to secure all vulnerable nuclear materials around the world in four years' time. This is an ambitious goal, and we are under no illusions that it will be easy. But the urgency of the threat, and the catastrophic consequences of even a single act of nuclear terrorism, demand an effort that is at once bold and pragmatic. And this is a goal that can be achieved.

Third, we reaffirmed that it is the fundamental responsibility of nations, consistent with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maintain effective security of the nuclear materials and facilities under our control. This includes strengthening national laws and policies, and fully implementing the commitments we have agreed to.

And fourth, we recognized that even as we fulfill our national responsibilities, this threat cannot be addressed by countries working in isolation. So we've committed ourselves to a sustained, effective progra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national [sic] security, and we call on other nations to join us.

It became clear in our discussions that we do not need lots of new institutions and layers of bureaucracy. We need to strengthen the institutions and partnerships that we already have -- and make them even more effective. This includes the United Nations,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he multilateral partnership that strengthens nuclear security, prevent nuclear trafficking and assist nations in building their capacity to secure their nuclear materials.

But as I said, today was about taking tangible steps to protect our people. So we've also agreed to a detailed work plan to guide our efforts going forward -- the specific actions we will take. I want to commend my partners for the very important commitments that they made in conjunction with this summit. Let me give some examples.

Canada agreed to give up a significant quantity of highly enriched uranium. Chile has given up its entire stockpile. Ukraine and Mexico announced that they will do the same. Other nations -- such as Argentina and Pakistan -- announced new steps to strengthen port security and prevent nuclear smuggling.

More nations -- including Argentina, the Philippines, Thailand and Vietnam -- agreed to join, and thus strengthen, the treaties and international partnerships that are at the core of our global efforts. A number of countries -- including Italy, Japan, India and China -- will create new centers to promote nuclear security technologies and training. Nations pledged new resources to help the IAEA meet its responsibilities.

In a major and welcomed development, Russia announced that it will close its last weapons-grade plutonium production reactor. After many years of effort, I'm pleased that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agreed today to eliminate 68 tons of plutonium for our weapons programs -- plutonium that would have been enough for about 17,000 nuclear weapons. Instead, we will use this material to help generate electricity for our people.

These are exactly the kind of commitments called for in the work plan that we adopted today, so we've made real progress in building a safer world.

I would also note that the United States has made its own commitments. We are strengthening security at our own nuclear facilities, and will invite the IAEA to review the security at our neutron research center. This reflects our commitment to sharing the best practices that are needed in our global efforts. We're seeking significant funding increases for programs to prevent nuclear proliferation and trafficking.

And today, the United States is joining with our Canadian partners and calling on nations to commit \$10 billion to extending our highly successful Global Partnership to strengthen nuclear security around the world.

So this has been a day of great progress. But as I said this morning, this can't be a fleeting moment. Securing nuclear materials must be a serious and sustained global effort. We agreed to have our experts meet on a regular basis -- to measure progress, to ensure that we're meeting our commitments and to plan our next steps.

And I again want to thank President Lee and the Republic of Korea for agreeing to host the next Nuclear Security Summit in two years.

Finally, let me say while this summit is focused on securing nuclear materials, this is part of a larger effort -- the comprehensive agenda that I outlined in Prague last year to pursue the peace and security of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Indeed, in recent days we've made progress on every element of this agenda.

To reduce nuclear arsenals, President Medvedev and I signed the historic new START treaty -- not only committing our two nations to significant reductions in deployed nuclear weapons, but also setting the stage for further cuts and cooperation between our countries.

To move beyond outdated Cold War thinking and to focus on the nuclear dangers of the 21st century, our new Nuclear Posture Review reduces the role and number of nuclear weapons in our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for the first time, preventing nuclear proliferation and nuclear terrorism is at the top of America's nuclear agenda, which reaffirms the central importance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nd next month in New York, we will join with nations from around the world to strengthen the NPT as the cornerstone of our global efforts to prevent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even as we pursue greater civil nuclear cooperation. Because for nations that uphold their

responsibilities, peaceful nuclear energy can unlock new advances in medicine, in agricul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All of these efforts are connected. Leadership and progress in one area reinforces progress in another. When the United States improves our own nuclear security and transparency, it encourages others to do the same, as we've seen today. When the United States fulfills our responsibilities as a nuclear power committed to the NPT, we strengthen our global efforts to ensure that other nations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So again, I want to thank my colleagues for making this unprecedented gathering a day of unprecedented progress in confronting one of the greatest threats to our global security. Our work today not only advances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it advances the security of all mankind, and preventing nuclear proliferation and nuclear terrorism will remain one of my highest priorities as President.

So with that, I'm going to take a few questions. I'm going to start with Bill Plante from CBS.

Q: Mr. President, thank you. The communiqué states in no uncertain terms that all of the unprecedented cooperation for which you're calling will be done on a voluntary basis, not a binding commitment. What's the likelihood that countries which have been at odds over these issues for a number of years are now going to cooperate? How can this be enforced?

THE PRESIDENT: Well, let's just take a specific example, Bill. For about 10 years, we had been encouraging Ukraine to either ship out its highly enriched uranium or transform it to a lower-grade -- a lower-enriched uranium. And in part because of this conference,

Ukraine took that step, announced that it would complete this step over the next couple of years.

So all the commitments that we talked about are ones that we've already booked, even before the communiqué and the work plan gets put into place. And that indicates the degree to which I think that there's actually strong unanimity about the importance of this issue as a threat to the global and international community.

Now, keep in mind that we also have a number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that have been put in place. Not all of them have been ratified. In fact, the United States needs to work on a couple of these conventions dealing with the issues of nuclear terrorism and trafficking. But what this does is it sets out a bold plan. And what I'm encouraged about is the fact that we've already seen efforts that had been delayed for years, in some case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actually finally coming to fruition here at this -- at this summit.

Q: It all depends on goodwill, sir?

THE PRESIDENT: Bill, the point is that we've got world leaders who have just announced that in fact this is a commitment that they're making. I believe they take their commitments very seriously.

If what you're asking is, is do we have a international "one world" law enforcement mechanism -- we don't. We never have.

So in all of our efforts internationally, in every treaty that we sign, we're relying on goodwill on the part of those who are signatories to those efforts. That's the natu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Jake Tapper, ABC.

Q: Thank you, Mr. President. The Chinese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said today that pressure and sanctions -- speaking of Iran's nuclear program -- pressure and sanctions cannot fundamentally solve the problem.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clarify exactly what you believe President Hu Jintao has agreed to, whether you think there actually will be economic sanctions with teeth that the Chinese will sign off on; and what you have told the Chinese in terms of their concern about how much fuel they get from Iran, what the U.S. can help them with in that regard. Thank you, sir.

THE PRESIDENT: Here's what I know. The Chinese have sent official representatives to negotiations in New York to begin the process of drafting a sanctions resolution. That is part of the P5-plus-1 effort. And the United States is not moving this process alone; we've got the participation of the Russians as well as the other members of the P5-plus-1, all of whom believe that it is important for us to send a strong signal to Iran that their consistent violation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s well as their obligations under the NPT have consequences, and that they've got a better path to take.

Now, you're exactly right, Jake, that the Chinese are obviously concerned about what ramifications this might have on the economy generally. Iran is an oil-producing state. I think that a lot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trade relationships with Iran. And we're mindful of that. But what I said to President Hu and what I've said to every world leader that I talked to is that words have to mean something, there have to be some consequences. And if we are saying that the NPT is important, if we're saying that non-proliferation is important, then when those obligations are repeatedly flouted, then it's importan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me together.

And what I would say is that if you consider where we were, say, a year ago, with respect to the prospect of sanctions, the fact that we've got Russia and China, as well as the other P5-plus-1 members having a serious discussion around a sanctions regime, following up on a serious sanctions regime that was passed when North Korea flouted its obligations towards the NPT, it's a sign of the degree to which international diplomacy is making it more possible for us to isolate those countries that are breaking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as I said I think several weeks ago, my interest is not having a long, drawn-out process for months. I want to see us move forward boldly and quickly to send the kind of message that will allow Iran to make a different calculation.

And keep in mind, I have said repeatedly that under the NPT Iran has the right to develop peaceful civilian nuclear energy -- as do all signatories to the NPT. But given the repeated violations that we've seen on the part of Iran, I think understandably the world community questions their commitment towards a peaceful civilian energy program.

They have a way of restoring that trust. For example, we put before them -- I'm saying the P5-plus-1, now, as well as the IAEA -- put before them a very reasonable approach that would have allowed them to continue their civilian peaceful nuclear energy needs, but would have allayed many of the concerns around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 They have rejected that so far. And that's why it's important -- and I said from the start that we're going to move on a dual track, and part of that dual track is making sure that a sanctions regime is in place.

Last point I'll make about sanctions. Sometimes I hear the argument

that, well, sanctions aren't really going to necessarily work. Sanctions aren't a magic wand. What sanctions do accomplish is hopefully to change the calculus of a country like Iran so that they see that there are more costs and fewer benefits to pursuing a nuclear weapons program. And in that process what we hope is, is that if those costs get high enough and the benefits are low enough, that in time they make the right decision not just for the security and prosperity of the world but also for their own people.

Scott Wilson, Washington Post. Where's Scott? There we go.

Q: Thank you, Mr. President. You have spoken often about the need to bring U.S. policy in line with its treaty obligations internationally to eliminate the perception of hypocrisy that some of the world sees toward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In that spirit and in that venue, will you call on Israel to declare its nuclear program and sign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nd if not, why wouldn't other countries see that as an incentive not to sign on to the treaty that you say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 PRESIDENT: Well, Scott, initially you were talking about U.S. behavior and then suddenly we're talking about Israel. Let me talk about the United States. I do think that as part of the NPT our obligation as the largest nuclear power in the world is to take steps to reducing our nuclear stockpile. And that's what the START treaty was about -- sending a message that we are going to meet our obligations.

And as far as Israel goes, I'm not going to comment on their program. What I'm going to point to is the fact that consistently we have urged all countries to become members of the NPT.

So there's no contradiction there. We think it is important that we have a international approach that is universal and that rests on three pillars: that those of us who have nuclear weapons are making serious efforts to reduce those stockpiles; that we all are working against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those countries that don't currently have nuclear weapons make the decision not to pursue nuclear weapons; and that all countries have access to peaceful nuclear energy.

And so whether we're talking about Israel or any other country, we think that becoming part of the NPT is important. And that, by the way, is not a new position. That's been a consistent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even prior to my administration.

Let me call on Stephen Collinson of AFP.

Q: Thank you, Mr. President. In your meeting with President Hu, did he give you any indication he would heed your call for a more market-oriented exchange rate for the yuan? If there's going to be a change, when would you envisage that taking place? And what happened in the last few weeks to help you move on from a period of -- quite a stormy period of public disagreements with China?

THE PRESIDENT: The fact is, actually,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my administration and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very productive during the course of the last year and a half. We started off working together at various multilateral fora -- the first one in London with the G20. I then, out of the bilateral meetings that we had, worked with President Hu to set up 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that looks at a whole range of areas in whic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an cooperate. I made a visit to China that both of us considered very successful.

Now, there are some areas where we've got disagreement. And those disagreements are not new, and I have to say that the amount of turbulence, as you put it, that occurred was actually relatively modest when you look at the overall trajectory of U.S.-China relations. I mean, at no point was there ever a suggestion that it's not in the interest of both our countries to cooperate, and that we have not only important bilateral business to do but also we are two very important countries in multilateral settings that have to deal with issues like climate change and the world economy in concert.

With respect to the currency issue, President Hu and I have had a number of frank conversations. As part of the G20 process we all signed on to the notion that a rebalancing of the world economy would be important for sustained economic growth and the prevention of future crises. And China, like the United States, agreed to that framework.

We believe that part of that rebalancing involves making sure that currencies are tracking roughly the market and not giving any one country an advantage over the other. And I've been very clear of the fact that it is my estimation that the RMB is under-valued and that China's own decision in previous years to begin to move towards a more market-oriented approach is the right one. And I communicated that once again to President Hu. I think China, rightly, sees the issue of currency as a sovereign issue. I think they are resistant to international pressure when it comes to them making decisions about their currency policy and monetary policy.

But it is my belief that it is actually in China's interest to achieve this rebalancing, because over time China is going to have to shift away from an economy that is solely oriented on exports and is going to have to start shifting towards an economy that is emphasizing domestic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is preventing bubbles from building up within the economy. And all of that will be facilitated with a more market-oriented currency approach.

So I don't have a timetable, but it is my hope that China will make a decision that ultimately will be in their best interest.

Bob Burns of AP.

Q: Mr. President, a few minutes ago when you were explaining the purpose of sanctions against Iran you said the point is to change Iranian government calculations, leading to altered behavior. Why hasn't that happened in the case of North Korea, which, unlike Iran, actually does have nuclear weapons?

THE PRESIDENT: Well, I'm not going to give you a full dissertation on North Korean behavior. I think it's fair to say that North Korea has chosen a path of severe isolation that has been extraordinarily damaging to its people, and that it is our hope that as pressure builds for North Korea to improve its economic performance, for example, to break out of that isolation that we'll see a return to the six-party talks and that we will see a change in behavior.

As I said, sanctions are not a magic wand. Unfortunately, nothing in international relations is. But I do think that the approach that we've taken with respect to North Korea makes it more likely for them to alter their behavior than had there been no consequences whatsoever to them testing a nuclear weapon.

Chuck Todd.

Q: Thank you, Mr. President. Given the goals of this conference and

the goals of your administration on nuclear policy, why does it appear as if Pakistan is playing by a different set of rules? I know they have not signed on to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but it appears they're expanding their nuclear program and the proximity to al Qaeda. Should there be more pressure internationally on Pakistan, not just coming from the United States, but the world?

THE PRESIDENT: I don't think Pakistan is playing by a different set of rules. I think we've been very clear to Pakistan, as we have been to every country, that we think they should join the NPT. I have actually seen progress over the last several years with respect to Pakistan's nuclear security issues.

I want to lower tensions throughout South Asia when it comes to nuclear programs. And I think that the fact that President [sic] Gilani came here, signed on to a communiqué, and made a range of commitments that will make it more likely that we don't see proliferation activities or trafficking occurring out of Pakistan is a positive thing.

Do we have a lot more work to do? Absolutely. But I think that President -- Prime Minister Gilani's presence here was an important step in assuring that we do not see a nuclear crisis anywhere in South Asia.

Okay? All right, Jeff Mason.

Q: Thank you, Mr. President. A follow-up question on two that have been asked. First, how realistic do you believe it is that countries will agree on sanctions in the coming weeks, which is the deadline that you're looking for? And a second, a follow-up on Pakistan -- is the United States confident that Pakistan's nuclear materials are protected

and will not be vulnerable to terrorists like al Qaeda?

THE PRESIDENT: To take the second question first, just as a part of a follow-up on Chuck's question, I feel confident about Pakistan's security around its nuclear weapons programs. But that doesn't mean that there isn't improvement to make in all of our nuclear security programs. You'll recall that we had a little incident a while back where we had nuclear-tipped missiles on a bomber flying across the United States and nobody knew about it. And Secretary Gates took exactly the right step, which was to hold those in charge accountable and to significantly alter our practices to make sure something like that didn't happen again.

So I think it's important to note that every nuclear power, every country that has a civilian nuclear energy program, has to take better steps to secure these materials. And Pakistan is not exempt from that, but we aren't, either. And that's I think the goal of this summit, and that was the goal of the communiqué and the work plan that we put forward.

With respect to sanctions, I think that we have a strong number of countries on the Security Council who believe this is the right thing to do. But I think these negotiations can be difficult. And I am going to push as hard as I can to make sure that we get strong sanctions that have consequences for Iran as it's making calculations about its nuclear program and that those are done on a timely basis.

I'm not going to speculate beyond that in terms of where we are.

Last question, Ed Chen of Bloomberg.

Q: Thank you, Mr. President. Good afternoon. Given the progress you have cited in recent days on your foreign policy agenda, to what extent do you feel like you have gained political capital with which to take further to the international stage for the rest of this year, to perhaps rejuvenate some initiatives in trouble spots such as the Middle East and elsewhere?

THE PRESIDENT: Well, I think the work that we've done in recent days around nuclear security and nuclear disarmament are intrinsically good. They're good just in and of themselves. And so we're very pleased with the progress that we've made. And we could not have done this without extraordinary cooperation first from President Medvedev when it came to the START treaty, and then from my colleagues who were here today when it came to this Nuclear Security Summit.

What I think it signifies is the fact that so many of the challenges that we face internationally can't be solved by one nation alone. But I do think that America's leadership is important in order to get issues on the international agenda and to move in concert with other countries to have an effective response.

There are a host of other issues, obviously, that have to be addressed and one of the points that was made actually during the communiqué is we're talking here about the instruments of potential war or terrorism, but obviously there are also the reasons, the rationales, the excuses for conflict, that have to be addressed as well.

And I remain committed to being a partner with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in particular hot spots around the world, to see if we can reduce those tensions and ultimately resolve those conflicts. And the

Middle East would be a prime example. I think that the need for peace between Israelis and Palestinians and the Arab states remains as critical as ever.

It is a very hard thing to do. And I know that even if we are applying all of our political capital to that issue, the Israeli people through their government, and the Palestinian people through the Palestinian Authority, as well as other Arab states, may say to themselves, we are not prepared to resolve this -- these issues -- no matter how much pressure the United States brings to bear.

And the truth is, in some of these conflicts the United States can't impose solutions unless the participants in these conflicts are willing to break out of old patterns of antagonism. I think it was former Secretary of State Jim Baker who said, in the context of Middle East peace, we can't want it more than they do.

But what we can make sure of is, is that we are constantly present, constantly engaged, and setting out very clearly to both sides our belief that not only is it in the interests of each party to resolve these conflicts but it's also in the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It is a vital national security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to reduce these conflicts because whether we like it or not, we remain a dominant military superpower, and when conflicts break out, one way or another we get pulled into them. And that ends up costing us significantly in terms of both blood and treasure.

So I'm going to keep on at it. But I think on all these issues -- nuclear disarmament, nuclear proliferation, Middle East peace -- progress is going to be measured not in days, not in weeks. It's going to take time. And progress will be halting. And sometimes we'll take one step for-

ward and two steps back, and there will be frustrations. And so it's not going to run on the typical cable news 24/7 news cycle. But if we're persistent, and we've got the right approach, then over time, I think that we can make progress.

All right?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END

5:11 P.M. EDT

Press Briefing by Ben Rhodes,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for Strategic Communications; Gary Samore, Senior White House Coordinator for WMD Counterterrorism and Arms Control; and Laura Holgate, Senior Director for WMD Terrorism and Threat Reduction, Washington Convention Center, Washington, D.C., April 13, 2010*

MR. RHODES: Good evening, everybody. Thanks for sticking around after a long couple days. I'll just say a few words by way of introduction, and then I'll pass it on to my colleagues, Gary Samore, who is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oordinator on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nd Laura Holgate, who is the senior director for WMD terrorism and threat reduction.

We just completed I think what we believe is to be a very important and positive nuclear security summit. You heard the President speak to the outcome.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really walk you through what's in the communiqué, what's in the work plan, and

* *Press Briefing by Ben Rhodes,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for Strategic Communications; Gary Samore, Senior White House Coordinator for WMD Counterterrorism and Arms Control; and Laura Holgate, Senior Director for WMD Terrorism and Threat Reduction,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Washington Convention Center, Washington, D.C., April 13, 2010, <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press-briefing-ben-rhodes-deputy-national-security-advisor-strategic-communications>.*

what's in some of the national commitments that came out of the summit. Gary and Laura can do that, because I know there are a lot of questions.

I'd just say, by way of introduction, that -- two things. Number one, the President obviously has a comprehensive agenda as it relates to nuclear weapons, and we've had a very busy week on that front. We had the introduction of our new Nuclear Posture Review, which reduces the role of nuclear weapons in our national security strategy, reinforces the Non-Proliferation Treaty, invests in a reliable stockpile and modernizing stockpile without the production of new nuclear weapons.

We saw the President sign the START treaty, the New START treaty in Prague with President Medvedev, keeping one of the core commitments coming out of the Prague speech within a year, to reduce the deployed warheads and launchers that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have; to reinvigorate U.S. and Russian leadership on the non-proliferation regime. And we're very pleased with that, of course.

But what this summit was focused on in a very specific way was nuclear security, securing nuclear materials and the threat of nuclear terrorism. You've heard us say that we believe that this issue demanded this level of focus because it's the highest-consequence threat that the American people face. And we also know that there are tangible steps that could be taken to secure nuclear materials around the world.

We know where we want to get. We want to get to a place where the high-enriched uranium, plutonium, the materials for a nuclear bomb are at an adequate level of security that we are confident that they're not going to fall into the hands of terrorists or those who would use

them to do harm.

So the President has set an ambitious goal of securing those materials within four years. He called this unprecedented gathering of world leaders to galvanize action at the highest levels of government behind that goal.

And I think what we've seen today is several layers of action. We have the communiqué, which is the statement and the commitment by all these leaders to take actions in support of the goal of securing all of these nuclear materials. We have a work plan that essentially lays out a series of steps that nations will take in pursuit of the goal.

And I think that part of what's important about the summit is we saw a series of national commitments that illustrated precisely the kind of actions that we'd like to see that are embedded in the work plan, which ranged from nations giving up, literally, their high-enriched uranium, eliminating high-enriched uranium and plutonium from within their borders; to nations suppor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efforts, such as the IAEA, which are fundamental to the nuclear security; to nations investing in regional centers of excellence that can enhance nuclear security standards, an exchange of best practices.

So with that, I think I'll call Gary up here, and what he can really do is walk you through the communiqué, what we believe is important -- and Laura can walk you through that as well -- and also what these specific national commitments are and how they are indicative of the kind of action that we expect to see going forward.

And the only other thing I'd say is that we believe that this is of course

the beginning of a very robust effort. We feel like we have a lot of momentum coming out of this summit.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at this at the working level, with Gary and his colleagues carrying out on these -- carrying through these commitments that have been made and pursuing new ones, and implementing this work plan. And we're very confident that we'll make substantial progress between now and the next Nuclear Security Summit, which is slated to be in the Republic of Korea in 2012.

So with that I'll turn it over to Gary.

MR. SAMORE: Thanks, Ben.

What I'd like to do is focus on the broad atmospherics in the room, as well as the overall outcome. And then Laura is going to go through with you in much more detail the elements of the summit communiqué, the work plan, and the specific actions that countries have taken.

There are really four points I want to make -- first, what I'm calling the spirit of Washington. This was a really remarkable show of unity of purpose of commitment to deal with the nuclear terrorism threat. I've been working in this field since 1984, and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where so many countries represented by their leaders reached an agreement that nuclear terrorism is a serious threat, the consequences of which would be catastrophic, and, therefore, in order to deal with that threat, the steps necessary and the resources necessary are something that governments are prepared to commit.

In the past in this area there's been a lot of skepticism whether nuclear terrorism is really serious. Could terrorists really build nuclear weap-

ons? Could they really get their hands on fissile material? I think this summit really removed that doubt.

And keep in mind, this is from countries and all regions of the world representing Europe, Asia, Latin America, Africa, the Middle East. When Laura and I started this process after the President's speech in Prague, I think we encountered some of that skepticism. But after a series of meetings at the expert level and now this summit, I really do think that we've achieved very strong international agreement that the threat is serious enough to justify the kind of resources needed to solve the problem.

The second big consensus that came out of this summit is that the solution to the threat is actually pretty simple. In concept, it's just making sure that terrorists don't acquire separated plutonium or highly enriched uranium. Now, there's a lot of that material in the world, more than 2,000 tons of it. But physical protection is something that governments know how to do, something that private companies know how to do -- if they invest the resources. Just like we guard gold in banks, we can guard plutonium in storage facilities.

And I think from that standpoint -- now, the exact solution may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In some cases, countries may choose to eliminate the fissile material that they have, or to transform it into a form that can't be directly used in nuclear weapons. But to the extent that countries maintain nuclear materials -- whether in their civil or military sector -- the solution to making sure that terrorists don't get it is straightforward. It's just a question of putting the resources in place -- the programs in place in order to ensure that it's well protected and accounted for.

The third big outcome is that the President told us he doesn't want a gauzy set of communiqués. So we got him a geeky set of communiqués and work plans. And as Laura will describe to you, the work plan and the communiqué get into the real nuts and bolts of the nuclear security system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nd I think we -- I hope you got -- we did sort of a little primer, a glossary, so you could understand when we talk abou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or the G8 Partnership, or the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 these are not things that people normally deal with and we wanted to try to explain to you that at the expert level, endorsed by the leaders, we're dealing with the real nuts and bolts in terms of both firm commitments and concrete actions.

And I want to just amplify what Ben said. Whenever you bring leaders together, there's a lot of pressure for countries to come to meeting with not just something positive to say but some demonstration of their commitment. And we used the summit shamelessly as a forcing event to ask countries to bring house gifts. And as Laura will go over with you, almost every country came to this meeting with something new -- something new that they were going to do. And I think we want to try to keep up that spirit and momentum as we proceed in the future. And that's the fourth and last point I want to make.

Coming out of this summit, there's a tremendous sense of keeping this process alive. I really do think the 50 countries -- or 47 countries and thre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I think we really developed a good working relationship. I think everybody felt -- at my level -- felt really positive about the outcome and felt that it was a solid piece of work. I hope you'll have a chance to ask some of the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their view. I was really struck at how pleased people were with

the outcome, and of course that was then endorsed by the leaders.

And bringing leaders together forces governments to explain to their leaders what these issues are involved and it naturally elevates it within every government, and therefore I think brings it to a higher level attention and makes it more likely that you'll get action on some projects that have been frankly -- frankly, had been lingering for years. And this summit forced action and forced decisions to be made.

As Ben mentioned, we're going -- this is just a kickoff of what we think will be an intense process. We expect to have the next round of experts meetings by the end of the year in Buenos Aires. And I would expect to have two or three more before the summit in Korea in 2012. And my prediction is that we are likely to have even more concrete results in 2012; we'll be able to do better than we did this time because I think we've set a pattern -- countries will want to come to the next meeting with even bigger and better house gifts.

So I'm going to stop there and ask Laura to go through with you in more detail some of the things that we've achieved.

MS. HOLGATE: Good evening. I wanted to say just a few words about the documents and then some of the national actions that we've been talking about in terms of concrete outcomes.

The communiqué is a high-level political statement by all of the 47 countries who are participating that pledges to strengthen nuclear security and reduce the threat of nuclear terrorism. It endorses the President's call to secure all vulnerable nuclear materials in four years. And it pledges to work together towards that end.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uniqué will result in focused national efforts to improve security and accounting of nuclear materials and strengthen regulations at the national level. And it's important to say that this is with a special focus on highly enriched uranium and plutonium, which is the raw ingredients of nuclear weapons.

We would expect to see consolidation of stocks of highly enriched uranium and plutonium, and reduction in the use of highly enriched uranium. Action on the communiqué would increase the number of countries signing up to some of the key international treaties that you've been hearing about on nuclear security/nuclear terrorism, as well as add to those countries who are cooperating under mechanisms like the global initiatives to combat nuclear terrorism, building capacity for nuclear security among law enforcement, industry and technical personnel.

The communiqué also calls for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o receive the financial and expert support that it needs to develop nuclear security guidelines and to provide advice for its member states on how to implement them.

Under the communiqué, bilateral and multilateral security assistance will also be applied where it can do the most good.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ould increase, including new opportunities for U.S. bilateral security programs. We'd see that nuclear industry sharing best practices for nuclear security, at the same time making sure that the security measures do not prevent countries from enjoying the benefits of peaceful nuclear energy.

So that's kind of what the communiqué covers in a nutshell. It launches

a summit work plan, which is issued as guidance f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actions to carry out the communiqué. This detailed document lays out the specific steps that it will take to bring the vision of the communiqué into effect.

These steps include ratifying and implementing treaties; cooperating through the United Nations to implement and assist others in meet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 particula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working wit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o update and implement security guidance and carry out advisory services; reviewing national regulatory and legal requirements that relate to nuclear security and nuclear trafficking; converting civilian facilities that use highly enriched uranium to non-weapons-useable materials; research on new nuclear fuels, detection methods and forensic technologies; development of corporate and institutional cultures that prioritize nuclear security; education and training to ensure that countries and facilities have the people they need to protect their materials; and joint exercises among law enforcement and Customs officials to enhance nuclear detection opportunities.

So many of these activities are already underway, but this summit is elevating, expanding and energizing a number of these very effective mechanisms and institutions that have been created over the last decade.

This isn't a pledging conference and it's not a context in which we're inventing big, new international institutions. It's really a way to try to elevate and implement all of the good words that have been said over the last two years.

And so building on those general commitments and, in the sense of the rising tide lifting all boats, we also have a number of boats that are moving out fast. And, Jeff, if you could put up the slide -- this is just kind of a summary of the clusters of types of activities that we've seen national -- participating countries present. I counted on my list of countries about 30 countries out of the 50 participants here who have committed to take various actions, and these can be clustered in the following way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the context of dealing with the threats of nuclear terrorism is actually removing and eliminating material. And we have had a number of countries who've committed to take those activities: Canada, Chile, Kazakhstan, Mexico, Russia, Ukraine, and the United States.

Related to that, in many cases, is a determination to convert research reactors that often are the sources of these highly enriched uranium or weapons-usable materials. So we've seen those commitments be created or reiterated in Chile, Kazakhstan, Mexico, and Vietnam.

We've seen Russia celebrate the end of their plutonium production reactor this week, which is a longtime project but it's finally at the endpoint. We've also seen in other countries -- a number of countries commit to accelerate their treaty ratification process, and so there's a few countries here that have either just completed them or in the process of completing them. And the U.S. is among those that's in the process. We just introduced legislation -- we just provided legislation to the Congress in the last couple of weeks that will complete our ratification requirements for these key treaties that you've been hearing so much about.

We've had new pledges to support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n its activities. And we've seen three -- four countries talk about a review service that the IAEA provides in terms of bringing in peer review of the nuclear security at certain facilities. And Finland mentioned the success that they have with their facility, and at this summit we've seen France, the U.K., and the U.S. commit to those kinds of reviews.

This is significant because often these reviews are seen as part of an assistance process, and they're requested by countries who are not necessarily thought of as the most capable in nuclear security. What we're seeing here is countries beginning to look at this possibility as a peer review process, as a way to enhance and improve their own security.

We've seen several countries committing to support capacity-building activities or centers of excellence. We've seen -- and in that case we see China, France, Italy, India, Japan, Kazakhstan, the U.S., and the U.K.

A number of countries have signed up anew to the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or are working hard to extend and expand the G8 global partnership against weapons and materials of mass destruction. And in terms of the global initiative, we have brand-new commitments from Argentina, the Philippines, Thailand, and Vietnam to join and be part of that effort.

Several countries have chosen this opportunity to talk about their new national regulations around nuclear security and export control, and we've seen progress in Armenia, Egypt, and Malaysia in that context. And we've also seen some movement in the context of nuclear

detection. And here I have a late add -- just this afternoon, Argentina signed a megaports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That was after I did this slide, so it's not on here. But Italy, the UAE, have also just recently announced megaports cooperation with the U.S. to install radiation detectors at major ports to ensure against nuclear trafficking. And the U.S. is working very hard on dealing with -- on developing new detection technologies.

We've seen an increase in bilateral contributions and cooperation from Canada, New Zealand, Norway, and the United States. And we've also seen a number of countries announcing their intent to hold regional or national conferences or meetings in support of nuclear security, and that's Canada, Japan, Kazakhstan, Korea, and Saudi Arabia.

So hopefully this gives you a little bit of texture, and there will be some documents that are released here shortly that have more specifics on what each country has committed. But I think this gives real life to the commitments that have been made that may sometimes sound dry or technical. And these are things that will really change the status of security on the planet.

Thank you.

MR. RHODES: Thanks, Laura. So we'll take any questions you guys have about this stuff.

Q: Two questions. Gary, you said you had seen nothing like this since 1984. And if you could describe for a moment exactly how this differs -- because certainly through the past 10 years we've see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Laura just referred to; we've seen a Security Council

agreement, which was obviously debated thoroughly at the Security Council -- so why we should think that these are more binding.

And a specific question on the agreement with Russia that Secretary Clinton signed today. My recollection is this also goes back to the Clinton administration when I think that President Clinton himself may have announced this in 1998.

MR. SAMORE: I think that the 9/11 terrorist attacks galvanized the United States under the Bush administration to take the threat of nuclear terrorism much more seriously than the U.S. did in the past. And as a consequence, I think the Bush administration deserves credit for putting in place a number of important -- and working with other countries to put in place -- a number of important instruments that we now have -- we are now using to pursue our own efforts. And that include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the G8 Global Partnership, the revision on the Convention of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the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All of these building blocks are things that began under the Bush administration.

Where I think we have been able to build on is that I think -- and this in part was a reflection of the perception of U.S. policy in that period -- I think we've been much more global. This is not a concern just limited to the United States and its Western allies. I think we've been able to bring in, in this summit, the whole world, including regions of the world which up to now, I think, have not been very invested with the credibility of the threat. And I mean Asia and the Middle East, Latin America, Africa. I think this is a much more international, global effort.

So I think that's an important achievement. I also think that in terms of the concrete measures that this conference has stimulated countries to take, when you do these kinds of things at the leader level, you're much more likely to get big decisions made. And I think a lot of the things the Bush administration did were very good, but there never was a summit of 47 leaders and three bi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o I think that really is a difference in kind that will I think pay benefits in the future.

On the plutonium disposition agreement, this is something I remember very well, because I helped negotiate it in the Clinton administration. But it's been languishing for 10 years because we and the Russians couldn't reach agreement on some implementing language.

It was in 2000, when President Clinton went to Moscow in 2000, we announced the completion -- and we did complete it, but there was some implementing details. For 10 years it's been languishing. And when President Obama came in, we intensified our negotiations with the Russians and finally reached agreement. And now I'm very happy to say, after all this time, we've signed the implementing legislation so that we can begin the process of disposing of 34 metric tons of weapons-grade plutonium each.

So I think it's another indication that President Obama's commitment and passion on this issue has helped to produce results.

MR. RHODES: David, I'd just add one thing. Across this agenda, there has been a sense the President had when he came in that some of our efforts in the areas of nuclear weapons, non-proliferation, nuclear security, were fraying; that the NPT was fraying; our nuclear security ini-

tatives were not proceeding with the kind of urgency that the threat demanded and that, in general, there wasn't a sense of momentum around nuclear security and non-proliferation.

That was precisely the rationale that led him to make his speech in Prague as his first major foreign policy address on foreign soil and to lay out this agenda. And essentially what he did there is try to re-invigorate the U.S. government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ound a very broad set of goals, including nuclear security, and again, as Gary said, taking this issue, which had been of concern and where steps had been taken, and elevating it to the level of leaders and broadening the coalition to include all regions of the world is fundamental to our ability to achieve our objectives.

You've heard the President say many times that this is not the kind of thing that we can do alone, nor is it the kind of thing that we can do with a small group of our allies -- that it's going to take broad collective action and global action to make progress, and it's also going to take the intensive efforts of leaders focusing on this and, as Gary has pointed out, holding their own governments accountable to the kinds of actions that you've seen announced today.

So, yes, Jonathon.

Q: This is probably for Gary or for Laura. When you look at the language, they talk about participating state parties to the convention will assist states as appropriate and upon their request to implement the convention. Participating states will consider where appropriate converting highly enriched uranium fuel to research reactors where it is technically and economically feasible. You see these "where appro-

appropriate” caveats throughout the language. And I’d like to just get an explanation of why those are in there, who insisted on them, and how much they -- given out to countries that don’t want to participate.

MR. RHODES: I’d say two things and then I’d turn it over to Gary. The first thing I’d say is we believe that this is a situation where every nation has an interest in achieving nuclear security. So the notion that a nation would not want to secure its nuclear materials is not the same obstacle to robust international collaboration that you might have on a separate issue. So we believe that, as Gary spoke to, galvanizing nations to the threat, again, is fundamental to creating that sense of urgency for moving forward.

The second thing I’d say before turning it over to Gary is that different nations have different things that they need to do in order to achieve the President’s goal of locking down all these materials, right? So for some nations, it’s going to be the kinds of actions you’ve seen in terms of shipping HEU out of the country, disposition of plutonium. For some nations it’s going to be the adoption of new security standards.

So it has to be an approach that is flexible enough to take into account the targeted needs of different nations. So there’s not going to be one size fits all that you can drop on somebody and say, this is what’s required out of you. It’s going to be a more focused effort into figuring out, okay, what does X nation need to do in service of this global goal? And the communiqué enables that kind of focused action so that we’re looking at nations saying, okay, what kind of actions do they need to take, what kind of assistance do they need to achieve those actions, what kind of standards do they need to put in place.

But I'll turn it to Gary now.

MR. SAMORE: Jonathon, I think it's important to realize that the structure of nuclear security is fundamentally a sovereign responsibility of nation states. And countries guard very jealously their freedom of action and their responsibility for making sure that their nuclear materials, whether in the civil or the military sector, are well secured.

Now, as Ben said, every country has an interest in making sure that those materials are secure. So we've got something to work with. But in my view, trying to construct an international regime that would require countries to take certain steps and to have an enforcement mechanism to take certain steps on nuclear security is not attainable. And the effort to try to create such a regime I think would distract our efforts from the near-term need to secure these materials.

So as the President said, it might be nice if there was a world policeman -- but there isn't. I think we've got to work with the structure we have. Given the interest that countries have in securing this material, I think we can do it with the fundamentally national-based structure that exists.

Q: Just to follow up, I mean, there isn't an international policeman, but there is the IAEA, there is the U.N. Security Council -- they exist to enforce international law. And we have made international law that is enforceable.

MR. SAMORE: Well, I think the IAEA is a perfect example. The IAEA role in nuclear security is to provide advice and assistance. It's not like safeguards. In the safeguards area, the IAEA has the authority to con-

duct inspections, and if they find that a country is violating their safeguards inspections and they're carrying out nuclear activities inconsistent with peaceful uses, the IAEA has a responsibility to report that to the board of governors and then to the U.N. Security Council.

There's no comparable authority in the nuclear security area. And in my view, it is not attainable. It is not possible to get an international agreement to give the IAEA the same kind of authority in nuclear security that it has in nuclear safeguards. I might wish that it were, but we have to deal in a world as it exists. And given the urgency of the threat, in my view, we would just waste a lot of time and effort trying to create something that I honestly do not believe is possible. Much better to work with the system we have, build on countries', A, self-interest in securing nuclear material and avoiding terrorism -- and I think there are mechanisms available, but it requires a cooperative approach as opposed to approach that has an enforcement mechanism.

Q: While you haven't -- you're not in favor of an enforcement mechanism or don't believe it's practical, you did require that countries, many of them bring a housewarming gift or some sort of commitment in connection with their appearance here. And a number of those have been announced. However, with respect to Russia, as David was mentioning earlier, aside from the plutonium issue there's also the issue of research reactor convergence, which you have up on the list there I believe. Russia has more of those than any other country. In fact, I believe they're about to open another such reactor soon. Can you say whether there were any discussions about that issue with the Russians in connection with this summit? And is there any hope of having that issue move in the right direction, as opposed to what the U.S. views as the wrong direction? Thank you.

MR. RHODES: The first thing I'd say is we believe that Russia -- the steps announced by Russia as relates to plutonium disposition and the closing of the plutonium reactor are precisely the kinds of actions that this summit was intended to galvanize. Because here you have tangible steps that in many cases have been languishing for years, steps that we hadn't created a sense of urgency around implementation, that had been -- they had fallen prey to a drift in the U.S.-Russia relationship. And the combination of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that the President and President Medvedev have forged together and the broader international effort around the summit helped to galvanize those very important commitments to the summit.

As it relates to the reactor, I don't know if you want to take it.

MS. HOLGATE: As you properly point out, Russia has a number of research reactors that continue to use highly enriched uranium. But in -- I think this is precisely the kind of area where the political space that Ben referenced is going to help us; where we -- this notion of how do we work with Russia to develop new fuel types to deal with the conversion issues or to help them shut down those reactors has been on the table for a number of years. It persists, it's part of the conversations that go on all the time at all levels with our Russian counterparts.

But the context of this kind of a global effort, the renewal and, in some ways, intensification of the commitments around conversion and moving away from HEU, blending down HEU, we think will help move our work with Russia in this particular area along. We didn't see any particular advances on that in this meeting, but I firmly intend to take advantage of this moment to reengage and try to push -- continue to

try to push that issue with the Russians, because it is a key part of achieving our goals on HEU minimization.

Q: Hi, thank you. Just a couple quick questions. One, on the Russia disposition program -- is there any way to ensure that they eventually won't produce plutonium from those reactors, because they are breeder reactors after all? And my second question is just on the Times article about China receiving oil, in case they enforce sanctions on Iran. Is that true? And if so, is that a policy? Are we going to do that for other countries as well?

MR. RHODES: Can you repeat the first question one more time? I'm sorry, I didn't quite hear.

Q: Sure. Just on the Russia disposition program, is there any way to ensure that those reactors eventually won't be used to produce plutonium? Because they are, after all, breeder reactors.

MR. RHODES: I'd take the second question first and Laura can take the first one.

The efforts that we've had through the P5-plus-1 with China have been focused upon our common interests in preventing, frankly, what would be very damaging to global security, which is an Iran that continues to fail to live up to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that damages, therefore, the NPT, the credibil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also sees potential nuclear arms races in the Middle East and a very destabilizing activity over the next several years.

So our fundamental discussions with China have been focused on taking action on sanctions because of the common threat that we both

face from Iran. I wouldn't get into -- I'm not going to -- so I wouldn't speculate around the kinds of scenarios you outlined.

The point that the President makes President Hu is that we have a shared interest in preventing nations from violating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from causing NPT to fray, is that foundation of preventing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nd that's the basis upon which the President has engaged President Hu. But I'll turn it over to Laura.

MS. HOLGATE: On the plutonium management and disposition agreement, the U.S. and Russia are committed to transparency provisions that allow us to look at each other's facilities as we proceed with the disposition efforts. And the Russian reactors that will be burning this plutonium, transforming it to a form that can't be used as weapons, will be looked at and made sure that they are not operating in a mode that breeds new plutonium into the fuel and the Russians' ability to reprocess that fuel -- I mean, the U.S. ability for that matter as well. Neither country is allowed to reprocess the fuel until after all of the 34 tons that the agreement covers have been disposed of.

And we fully expect that there will be additional material that will flow into that disposal pipeline as dismantlements proceed under START and New START and other future arms control agreements. So we expect that the disposition effort will continue for some time before the reprocessing of that fuel is allowed.

MR. RHODES: We'll take one or two more here. Yes.

Q: Thank you. President Sarkozy, during the dinner last night, suggested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uld think about a mecha-

nism to -- for jurisdiction, an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prosecute individuals or heads of state responsible that would be involved in some proliferation. Do you think that's a good idea? Do you -- it's not on your slide, but is it something that --

MR. SAMORE: Well, President Sarkozy introduced this idea of some kind of tribunal to deal with state officials that provide assistance, nuclear assistance to terrorist groups, at the dinner last night. And there was a very lively discussion among the world leaders, who had a lot of different views about the proposal.

What President Obama said to summarize the discussion is that this was an interesting idea, a creative idea; certainly merited further discussion. And the leaders agreed that this is one of the things the experts will be discussing as we continue to meet between now and the 2012 summit.

MR. RHODES: Separate and apart from that, the only thing I'd add as it relates to the passage of nuclear materials to terrorists, within our own Nuclear Posture Review, recognizing that this is the nature of the threat in the 21st century, we embrace the notion that those nations that do pass nuclear materials to terrorists will be held accountable for that action through our nuclear deterrent. So this is an issue that the United States has brought into its own nuclear policy, recognizing that the passage of materials from a state to a terrorist group is really a first-order threat that we face.

We'll take one more in the back here.

Q: The focus of your summit was on weapons-grade fissile materials.

But there are vast amounts in the world of nuclear waste that can be used in dirty bombs. Now, I'm wondering whether or not that was just a road too far to deal with in this summit. To what extent does the threat posed by the nuclear waste rival the threat posed by terrorists getting their hands on weapons-grade material?

MR. RHODES: I'll provide an answer and then see if my colleagues want to join in.

I think that the reason for the focus on the materials that can be used to make a weapon -- plutonium, high-enriched uranium -- are that is the highest-consequence threat. When you look at the possible scenarios for a terrorist attack in an American city or any city in the world, that the nuclear yield produced by a weapon is by many, many orders of magnitude the most devastating threat. That doesn't diminish the fact that there -- that doesn't do away with the fact that there are many other threats that we take very seriously and that we're doing a number of things on, that my colleagues may speak to, including a potential for the release of a dirty bomb or a radiological device.

But given the orders of magnitude by which a nuclear yield threatens our people and people around the world, we wanted to focus on this.

And I think -- the important thing -- as you look at the national actions that come out of the summit, as you look at the communiqué and the work plan, as Gary said, there is a -- there is material -- we know precisely what this material is, and we know that there are measures that can be taken to secure it. And each step that we take in pursuit of that goal makes the United States more secure and makes the world more secure.

So we believe just the actions that were announced today at this summit enhance our security, because as we're securing more HEU, as nations are giving up that HEU, as nations are disposing of plutonium, as nations are adopting best practices -- all of those efforts contribute towards lessening the pool that terrorists have to acquire a weapon and securing the materials so that they can be used for peaceful purposes.

So each step that we take down this road makes us safer, because each step that we take, again, diminishes that pool. And where we want to get to is a point where, through our national actions, through the kind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that are embedded in this communiqué, through the adoption of best practices and standards that will be funded through some of the kinds of efforts that we've already seen announced today, and through the kind of bilateral techn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that nations like the United States can provide, we are facilitating the shrinking of that pool of materials that are vulnerable to exploitation by terrorists.

So, again, this is -- the reason for the focus is because it's the highest-consequence threat that we face, and because we believe that we can take tangible steps down this road of lessening those materials and preventing them from falling into the wrong hands.

I don't know if you want to speak to the -- as it relates to dirty bombs, we have separate efforts, of course, taking place that my colleagues work on and many other parts of government work on -- biological weapons, chemical weapons, and dirty bombs. But the yield from, say, a conventional explosion with the release of radiological materials would not, while a weapon of mass effect, would not have the kind of mass destruction from a nuclear yield, which could kill tens if not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And so that's why we have this kind of focus.

And again, on both the nuclear side and the terrorism side, the President has -- this is one piece of a comprehensive puzzle. So on the nuclear side, this is the nuclear security piece. We have the non-proliferation piece, which is focused through our efforts to strengthen the NPT, keep our own obligations, reduce our own arsenals. Then on the terrorism side, we have, again, our broader counterterrorism policy of disrupting, dismantling, and defeating terrorist networks. But what this summit was focused on in a very clear way was securing those materials that could lead to the highest-consequence attack so we're not dealing with a 9/11 that is by many more orders of magnitude devastating to our people or to global security.

So with that, I think we've got to wrap and catch a motorcade. But thanks, everybody, and be in touch with any more questions.

END

6:37 P.M. EDT

Key Facts about the National Security Summit, April 13, 2010*

An Historic Event

Not since 1945 has a U.S. President hosted a gathering of so many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This unprecedented meeting is to address an unprecedented threat—the threat of nuclear materials in the hands of terrorists or criminals.

The Promise of Prague

In April 2009, in Prague, President Obama spoke of his vision of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even as he recognized the need to create the conditions to bring about such a world. To that end, he put forward a comprehensive agenda to stop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reduce nuclear arsenals, and secure nuclear materials.

In April 2010, the United States took three bold steps in the direction of creating those conditions with the release of a Nuclear Posture Review that reduces our dependence on nuclear weapons while strengthening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nd maintaining a strong deterrent; signing a New START treaty with Russia that limits

* *Key Facts about the National Security Summit*,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April 13, 2010, <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key-facts-about-nuclear-security-summit>.

the number of strategic arms on both sides, and renews U.S.-Russian leadership on nuclear issues; and now has convened a gathering of world leaders to Washington to discuss the need to secure nuclear materials and prevent acts of nuclear terrorism and trafficking.

The Threat

Over 2000 tons of plutonium and highly enriched uranium exist in dozens of countries with a variety of peaceful as well as military uses. There have been 18 documented cases of theft or loss of highly enriched uranium or plutonium, and perhaps others not yet discovered. We know that al-Qa'ida, and possibly other terrorist or criminal groups, are seeking nuclear weapons - as well as the materials and expertise needed to make them. The consequences of a nuclear detonation, or even an attempted detonation, perpetrated by a terrorist or criminal group anywhere in the world would be devastating. Any country could be a target, and all countries would feel the effects.

The Solution

The best way to keep terrorists and criminals from getting nuclear weapons is to keep all weapons and materials, as well as the know-how to make and use them, secure. That is our first and best line of defense. We must also bolster our ability to detect smuggled material, recover lost material, identify the materials origin and prosecute those who are trading in these materials.

The Nuclear Security Summit

Just as the United States is not the only country that would suffer from nuclear terrorism, we cannot prevent it on our own. The Nuclear

Security Summit highlights the global threat posed by nuclear terrorism and the need to work together to secure nuclear material and prevent illicit nuclear trafficking and nuclear terrorism.

The leaders of 47 nations came together to advance a common approach and commitment to nuclear security at the highest levels. Leaders in attendance have renewed their commitment to ensure that nuclear materials under their control are not stolen or diverted for use by terrorists, and pledged to continue to evaluate the threat and improve the security as changing conditions may require, and to exchange best practices and practical solutions for doing so. The Summit reinforced the principle that all states are responsible for ensuring the best security of their materials, for seeking assistance if necessary, and providing assistance if asked. It promoted the international treaties that address nuclear security and nuclear terrorism and led to specific national actions that advanced global security.

The Communiqué

The Summit Communiqué is a high-level political statement by the leaders of all 47 countries to strengthen nuclear security and reduce the threat of nuclear terrorism and:

- Endorses President Obama's call to secure all vulnerable nuclear material in four years, and pledges to work together toward this end;
- Calls for focused national efforts to improve security and accounting of nuclear materials and strengthen regulations - with a special focus on plutonium and highly enriched uranium;
- Seeks consolidation of stocks of highly enriched uranium and

plutonium and reduction in the use of highly enriched uranium;

- Promotes universality of key international treaties on nuclear security and nuclear terrorism;
- Notes the positive contributions of mechanisms like the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to build capacity among law enforcement, industry, and technical personnel;
- Calls for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o receive the resources it needs to develop nuclear security guidelines and provide advice to its members on how to implement them;
- Seeks to ensure that bilateral and multilateral security assistance would be applied where it can do the most good; and
- Encourages nuclear industry to share best practices for nuclear security, at the same time making sure that security measures do not prevent countries from enjoying the benefits of peaceful nuclear energy.

The Work Plan

The Summit Work Plan represents guidance f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actions to carry out the pledges of the Communiqué. This detailed document lays out the specific steps that will need to be taken to bring the vision of the Communiqué into reality. These steps include:

- Ratifying and implementing treaties on nuclear security and nuclear terrorism;
- Cooperating through the United Nations to implement and assist others in connection with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 Working wit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o up-

date and implement security guidance and carry out advisory services;

- Reviewing national regulatory and legal requirements relating to nuclear security and nuclear trafficking;
- Converting civilian facilities that use highly enriched uranium to non-weapons-usable materials;
- Research on new nuclear fuels, detection methods, and forensics techniques;
- Development of corporate and institutional cultures that prioritize nuclear security;
- Education and training to ensure that countries and facilities have the people they need to protect their materials; and
- Joint exercises among law enforcement and customs officials to enhance nuclear detection approaches.

Country Commitments

In addition to signing on to the Communiqué and Work Plan, many Summit Participants have made commitments to support the Summit either by taking national actions to increase nuclear security domestically or by working through bilateral or multilateral mechanisms to improve security globally. These specific commitments will enhance global security, provide momentum to the effort to secure nuclear materials, and represent the sense of urgency that has been galvanized by the nature of the threat and the occasion of the Summit. Many of these commitments are outlined in National Statements.

Next Steps

In preparation for the Summit, each participating entity named a — Sherpa to prepare their leadership for full participation. This cadre of

specialists, each of whom has both the expertise and leadership positions in their countries to effect change, is a natural network to carrying out the goals of the Summit. The Sherpas plan to reconvene in December to evaluate progress against Summit goals. Additionally, Summit participants plan to reach out to countries who were not able to attend the Washington Summit to explain its goals and outcomes and to expand the dialogue among a wider group. In 2012, leaders will gather again—this time the Republic of Korea—to take stock of the post-Washington work and set new goals for nuclear security.

Nuclear Security Summit National Statement of the United States, April 13, 2010*

In April 2009, President Obama addressed the citizens of Prague and the world, stating clearly and with conviction America's commitment to seek the peace and security of a world free of nuclear weapons. Recognizing this goal is not immediately achievable, the President laid the groundwork to ensure that through the steady accumulation of progress we move continually along the path toward this critical objective.

In that speech, the President identified the risk of nuclear terrorism as the most immediate and extreme threat to global security, called for an international four-year effort to secure vulnerable nuclear material, and announced his intent to host a Nuclear Security Summit. Over the past year, with the leadership of President Obama, we have made progress on this unprecedented call to action. At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last fall, we unanimously passed Resolution 1887 endorsing the goal of securing all nuclear materials and preventing the spread and use of nuclear weapons.

This Nuclear Security Summit takes place on April 12-13, 2010.

* *Nuclear Security Summit National Statement of the United States*, April 13, 2010, <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nuclear-security-summit-national-statement-united-states>.

Leaders from 47 nations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the European Union will gather in Washington, DC - the largest gathering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in Washington's history.

Our objective is clear: ensure that terrorists never gain access to plutonium or highly-enriched uranium - the essential ingredients of a nuclear weapon. The challenge we face is how to lock down the over 2000 tons of plutonium and highly enriched uranium exist in dozens of countries with a variety of peaceful as well as military uses. The consequences of a nuclear detonation, or even an attempted detonation, perpetrated by a terrorist or criminal group anywhere in the world would be devastating. Not only could there be an enormous loss of life but there would also be overwhelming economic, political and psychological consequences that would reverberate worldwide.

Just as the United States is not the only country that would suffer from nuclear terrorism, we cannot prevent it on our own. The goal of the Nuclear Security Summit is to highlight this global threat and agree to steps we can take together to secure nuclear material and prevent illicit nuclear trafficking. The Nuclear Security Summit provides an occasion for the United States to highlight some of its recent and future efforts to show leadership in improving the security of nuclear materials both at home and abroad.

Domestic Nuclear Security: Our first priority is to ensure that nuclear materials and facilities in the United States are secure. Through sustainable security programs, including a continual evaluation of the threat, inspections, and emergency response, preparedness and coordination programs, the United States keeps its materials secure. Following September 11, 2001, security at domestic facilities was enhanced and

is evaluated on a continuous basis. Most recently, on March 22, 2010, the Highly Enriched Uranium Materials Facility in Oak Ridge, Tennessee—an ultra-secure uranium warehouse that replaces multiple aging facilities with a single, state-of-the-art storage facility— came on-line as one measure of our increased security posture.

As part of our ongoing efforts to evaluate the security of its nuclear facilities, we will request an advisory mission from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s International Physical Protection Advisory Service to review physical protection at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s Center for Neutron Research, licensed by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The Center's reactor supports a broad program of research using neutron techniques, and develops and applies new neutron measurement technologies. NIST has committed to convert its reactor from highly enriched uranium to a new low enriched uranium fuel once that has been tested and approved for use. This advisory mission will provide an independent, confidential comparison of the physical protection regulations and their implementation with international guidelines and best practices.

Ratifying Conventions: The United States has accelerated efforts to complete ratification procedures for the two key international treaties governing nuclear securit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and the 2005 Amendment to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Legislation that brings U.S. laws into line with these treaties has been submitted to the Congress. Once laws are in place implementing the conventions, the United States will deposit its instruments of ratification.

Minimizing Highly Enriched Uranium: In 2009, the United States

completed conversion of all 20 of our highly-enriched-uranium-fueled reactors that could be converted to use low enriched uranium fuel. There are six remaining highly-enriched-uranium-fueled reactors in the United States that will be converted to use low enriched uranium fuel once acceptable fuel has been developed.

Plutonium Dispositio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have just signed the Protocol to the Plutonium Management and Disposition Agreement, which commits both countries to eliminate 68 metric tons of plutonium (34 each) from their weapons programs—enough material for approximately 17,000 nuclear weapons combined. Furthermore, the United States is in the final stages of approval to bring up to 100 kilograms of plutonium from sites of concern into the United States pending disposition, thereby eliminating vulnerable, weapons-usable plutonium in certain cases where no other solution is available.

Nuclear Detection: Due to shortages in materials for current neutron detectors, the United States is working to develop and deploy new neutron detection technologies through an aggressive program of research, development, test, and evaluation. The time frame for this effort has been shortened from 5 years to 18 months.

Nuclear Forensics: With the emerging discipline of nuclear —archeology, the United States has launched an international effort to develop nuclear forensics library, exercises, common lexicons, and other foundational elements that will provide the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s investigating the illicit use of nuclear materials.

Sharing Best Practices: Nuclear security can be advanced through sharing best practices among those with responsibility for securing and accounting for nuclear materials i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We

are working with Russia and other members to turn the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into a durable international institution. The United States strongly supports the World Institute for Nuclear Security as an effective forum for sharing best security practices, based on its broad membership in 44 countries, representing private industry, police, government agencies, state regulators and national laboratories. We will continue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and expertise and encourage other countries to do so as well.

International Cooperation: Working within existing legal and multilateral nuclear security frameworks, U.S. nuclear security cooperative activities help states worldwide meet their nuclear security obligations, uphold the highest international nuclear security recommendations and standards, and maximize the peaceful benefits of nuclear materials while reducing the risks of their misuse. In its Fiscal Year 2011 budget request, the U.S. has requested the largest amount ever - \$1.6 billion, a 31% increase over the previous year - for these programs across multiple agencies working with countries around the world.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In 2009 the UN Security Council created a committee to assist states in implementing their obligations under this universal, binding resolution. The United States has proposed, and intends to contribute to, a voluntary fund to help countries meet the obligations this resolution places on them, and to match them up with wide range of national, international, and non-governmental sources of assistance.

Nuclear Security Programme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n 2009, the United States led efforts to gain agreement of the 150-plus nation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o establish for the first time a dedicated budget line for nuclear security,

which had until then been funded exclusively through voluntary contributions from member states. The U.S. voluntary contribution to this effort has risen 59% since 2007.

G8 Global Partnership Against the Spread of Weapons and Materials of Mass Destruction: In 2002, under the leadership of Canada, the G8 committed \$20 billion over ten years to stop the spread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Eight years later, the 23 G8 Partners have allocated more than \$18 billion to this effort. We have made progress with Russia to eliminate stocks of chemical weapons and to dismantle decommissioned nuclear submarines. We are ready to join with our Canadian colleagues and call for another ten-year extension with an expanded scope/mission and to commit up to another \$10 billion towards new projects, including expanding our efforts to improving nuclear security to countries not previously eligible for G8 assistance.

Highlights of the National Commitments made at the Nuclear Security Summit, April 12-13, 2010*

Armenia: Ratified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passed new export control law

Argentina: Joined the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moving toward the ra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and 2005 Amendment of the Convention on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s

Australia: Moving toward the ra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Belgium: Contributing \$300,000 to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s Nuclear Security Fund

Canada: Returning a large amount of spent highly enriched uranium fuel from their medical isotope production reactor to the United States; championing the extension of the G8 Global Partnership Against the Spread of Weapons and Materials of Mass Destruction; funding highly enriched uranium removals from Mexico and Vietnam; hosting and funding a World Institute of Nuclear Security best practices workshop

* *Highlights of the National Commitments made at the Nuclear Security Summit*, April 13, 2010, <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highlights-national-commitments-made-nss>.

in Ottawa; unveiling \$100 million in new b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with Russia

Chile: Removed all highly enriched uranium (18kgs) in March 2010

China: Announce cooperation on nuclear security Center of Excellence

Egypt: Passed new comprehensive nuclear law in March 2010 that includes nuclear security, criminalization of sabotage and illicit trafficking provisions as well as envisaging an independent regulatory authority

France: Ratifying the 2005 Amendment to the Convention on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s; inviting an International Physical Protection Advisory Service security review from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ncorporating training in nuclear security at the European Nuclear Safety Training and Tutoring Institute and the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Institute (announced during March 2010 Paris nuclear energy conference)

Finland: Invited an International Physical Protection Advisory Service security review from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Germany: Moving toward ratifying 2005 Amendment of the Convention on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s

Georgia: Signed instrument of approval for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on April 7, 2010

India: Announcing the creation of a Nuclear Energy Center with a nuclear security component

Italy: Signed a Megaports agreement (to install detection equipment at

ports) with U.S.; establishing a school of nuclear security in Trieste, in collaboration with the Abdus Salam International Center for Theoretical Physics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to train nuclear personnel from developing countries

Japan: Launching an integrated regional support center; research and development on detection and forensics; contributing new resources to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s Nuclear Security Fund; hosting and funding a World Institute of Nuclear Security best practices conference

Kazakhstan: Converting a highly enriched uranium research reactor and eliminating remaining highly enriched uranium; cooperative work on BN-350 reactor shutdown and fuel security; hosting a Global Initiative Activity in June; considering a International Nuclear Security Training Center.

Malaysia: Passed new export control law

Mexico: Converting a highly enriched uranium research reactor and eliminating remaining highly enriched uranium working through IAEA

New Zealand: Contributing to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s Nuclear Security Fund; contributing to the U.S. Nuclear Smuggling Outreach Initiative

Norway: Contributing \$3.3 million over the next four years to the IAEA nuclear security fund (flexible funds for use for activ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contributing \$500,000 in additional support to Kazakhstan's efforts to upgrade portal monitors to prevent nuclear smuggling as part of the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Philippines: Joining the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Republic of Korea: Hosting 2012 Nuclear Security Summit; hosting a Global Initiative activity

Russia: Signing Plutonium Disposition protocol; ending plutonium production; contributing to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s Nuclear Security Fund

Saudi Arabia: Hosting a UNSCR 1540 conference for Gulf Cooperation Council

Thailand: Joining the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Ukraine: Removing all highly enriched uranium by next Summit—half of it by year's end

United Arab Emirates: Signed a Megaports Agreement with the U.S.

United Kingdom: Contributing \$6 million to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s Nuclear Security Fund; inviting an International Physical Protection Advisory Service security review from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ra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and 2005 Amendment of the Convention on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s

Vietnam: Converting a highly enriched uranium research reactor; joining the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IAEA: Completing final review of the next revision of INFCIRC 225, the IAEA nuclear physical security guidance document.

Statement of President Obama on Russia Shutting Down Final Plutonium Reactor, April 13, 2010*

“I welcome this significant announcement from President Medvedev. This important step forward continues to demonstrate Russia’s leadership on nuclear security issues, and will add momentum to our shared global effort.”

BACKGROUND: The ADE-2 reactor has been producing weapons-grade plutonium for nearly 52 years in the formerly secret Siberian city of Zheleznogorsk. Russian President Medvedev announced the imminent shutdown at President Obama’s Nuclear Security Summit in Washington.

* *Statement of President Obama on Russia Shutting Down Final Plutonium Reactor*, April 13, 2010, <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statement-president-obama-russia-shutting-down-final-plutonium-reactor>.

Trilateral Announcement Between Mexico,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on Nuclear Security, April 13, 2010*

At the Nuclear Security Summit in Washington, D.C., Mexico,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reached agreement to work together, along wit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to convert the fuel in Mexico's research reactor. President Calderon expressed "the strong commitment of Mexico to prevent and suppress nuclear terrorism; with this kind of cooperation with the IAEA and our North American partners, we definitely contribute to reducing the risks associated with illicit trafficking of nuclear materials."

The three countries acknowledged that this project also provides an important step towards the replacement of the research reactor with a new low-enriched uranium fuelled reactor in support of Mexico's nuclear energy development.

The conversion of the reactor's use of highly enriched uranium (HEU) to low enriched uranium (LEU) fuel will enable the elimination of all the remaining highly enriched uranium from Mexico. This effort, a specific outcome of Nuclear Security Summit, will be completed under the

* *Trilateral Announcement Between Mexico,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on Nuclear Security*, April 13, 2010, <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trilateral-announcement-between-mexico-united-states-and-canada-nuclear-security>.

auspices of the IAEA. It will further strengthen nuclear security on the North American continent.

President Obama indicated, “I welcome this critical step forward, which is a signal of our strong trilateral partnership, and our shared commitment to nuclear security in North America.” Prime Minister Harper added that “this nuclear security project demonstrates that collective action can deliver concrete results.”

This decision to eliminate the remaining highly enriched uranium reaffirms Mexico’s leadership in nuclear security and nonproliferation and serves as an example for other nations to follow.

Nuclear Security Work Plan Reference Document, April 13, 2010*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The international treaty against nuclear terrorism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April 2005 bolsters the global legal framework to counterterrorist threats, including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opened for signature in September of 2005.

The Convention is a key part of global efforts to prevent terrorists from gaining access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the use of which could lead to catastrophic consequences. Based on an instrument originally proposed by the Russian Federation in 1998, the Convention provides for a definit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and covers a broad range of possible targets, including those against nuclear power plants and nuclear reactors. Under its provisions, the alleged offenders must be either extradited or prosecuted. It also encourages States to cooperate in preventing terrorist attacks by sharing information and assisting each other in connection with criminal investigations and extradition

* *Nuclear Security Work Plan Reference Document*, April 13, 2010, <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nuclear-security-work-plan-reference-document>.

proceedings. The treaty requires that any seized nuclear or radiological material is held in accordance with IAEA safeguards, and handled in regard to the IAEA's health, safety, and physical protection standards. http://www.iaea.org/NewsCenter/News/2005/conv_nuclterror.html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CPPNM)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entered into force on February 8, 1987 and as of March 2010 had 142 Parties as signatories. The Convention is the only 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instrument in the area of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1 of the 13 international counterterrorism instruments. It establishes measures related to the prevention, detection, and punishment of offenses related to nuclear material.

On July 8, 2005, States Parties to the CPPNM adopted by consensus an Amendment to the CPPNM. Whereas the obligations for physical protection under the CPPNM covered nuclear material during international transport, the Amendment to the CPPNM makes it legally binding for States Parties to protect nuclear facilities and material in peaceful domestic use, storage and transport. It also provides for expanded cooperation between and among States regarding rapid measures to locate and recover stolen or smuggled nuclear material, mitigate any radiological consequences of sabotage, and prevent and combat related offences.

The Amendment will enter into force when it has been ratified by two-thirds of the States Parties of the Convention. The Amendment constitutes an important milestone in international efforts to improve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facilities. The

Amendment is vitally important for nuclear security and will have a major impact in reducing the vulnerability of States Parties to nuclear terrorism.

The General Conference has appealed to all States that have not yet done so to adhere to the CPPNM as soon as possible. The IAEA's Board of Governors and General Conference have both encouraged all States Parties to ratify the Amendment and to act in accordance with its object and purpose pending its entry into force.

<http://www-ns.iaea.org/security/cppnm.htm>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UNSCR) 1540

In April 2004,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 adopted UNSCR 1540, establishing for the first time binding obligations on all U.N. member states under Chapter VII of the U.N. Charter to take and enforce effective measures against the proliferation of WMD, their means of delivery and related materials. UNSCR 1540, if fully implemented, can help ensure that no State or non-State actor is a source or beneficiary of WMD proliferation. All states have three primary obligations under UNSCR 1540 relating to such items: to prohibit support to non-State actors seeking such items; to adopt and enforce effective laws prohibiting the proliferation of such items to non-State actors, and prohibiting assisting or financing such proliferation; and to take and enforce effective measures to control these items, in order to prevent their proliferation, as well as to control the provision of funds and services that contribute to proliferation. If implemented successfully, each state's actions will significantly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ing to the export of sensitive items and support for proliferators (including financing) and ensure that non-state actors, including terrorist and black-market networks, do

not gain access to chemical, nuclear or biological weapons, their means of delivery or related materials.

<http://www.state.gov/t/isn/c18943.htm>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UNSCR) 1540 Voluntary Fund

The United States is strongly committed to establishing a voluntary fund to help provide the technical support and expertise to support implementation of UNSCR 1540. The United States will seek to make a meaningful contribution to such a trust fund once it is established, provided it contains effectiv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mechanisms.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work with the UNSCR 1540 Committee and others to make that happen.

A voluntary U.N. trust fund could help match donors with states who need help to help strengthen national export laws and detection systems to prevent materiel, technology, and financial resources from making their way to governments and terrorists seeking to build these weapons. A number of na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provide bilateral assistance to countries to combat WMD and missile proliferation. Other multilateral organizations, such as the IAEA, offer assistance. Nongovernment organizations are another source of expertise and support. Expanding the multilateral efforts at the U.N. through a voluntary trust fund should inject more coordination, cohesion, and effectiveness into the many diverse national, multinational and non-governmental assistance efforts.

<http://usun.state.gov/briefing/statements/2009/september/130100.htm>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INFCIRC/225/Rev. 5

The IAEA's Information Circular (INFCIRC) 225, which provides guidance and recommendations for developing and implementing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was last published in 1999 in its fourth revision. The United States has long pushed for the INFCIRC/225 to be revised again to address the post 9/11/2001 threat environment and to conform with and provide guidance for implementation of the amended CPPNM and UNSCR 1540 obligations. The Department of Energy/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led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nd a core group of like-minded member states to draft a revision that was presented to the IAEA. Subsequently, the IAEA called a number of member states consultant meetings and, most recently, a final stage technical meeting for concurrence on a revised text that is being sent to all member states for a final 120-day review. Publication of this important fifth revision (INFCIRC/225/Rev. 5), which provides guidance for planning and implementing effective physical protection regime, is anticipated in calendar year 2010.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Nuclear Security Plan 2010-2013

The objective of the Nuclear Security Plan for 2010 - 2013, submitted by the IAEA's Director General and approved by its Board of Governors, is to contribute to global efforts to achieve worldwide, effective security wherever nuclear or other radioactive material is in use, storage and/or transport, and of associated facilities, by supporting States, upon request, in their efforts to establish and maintain effective nuclear security through assistance in capacity building, guidance, human resource development, sustainability and risk reduction. The objective is also to assist adherence to and implementation of nuclear se-

curity related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and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of assistance given through bilateral programs and other international initiatives in a manner which also would contribute to enabling the safe, secure and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and of such applications with radioactive substances.

The Plan is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 of the Agency's Medium Term Strategy 2006 - 2011, to "establish and achieve global acceptance of an agreed international framework for nuclear security and support its application".

http://www.iaea.org/About/Policy/GC/GC53/GC53Documents/English/gc53-18_en.pdf

IAEA Nuclear Security Series

Nuclear security issues relating to the prevention and detection of, and response to, theft, sabotage, unauthorized access and illegal transfer, or other malicious acts involving nuclear material and other radioactive substances and their associated facilities are addressed in the IAEA Nuclear Security Guidelines series of publications. These publications are consistent with, and complement, international nuclear security instruments such as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its 2005 Amendment, the UNSCRs 1373 and 1540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Publications in the IAEA Nuclear Security Guidelines series are issued in the following categories:

- Nuclear Security Fundamentals contain objectives, concepts, and principles of nuclear security and provide the basis for security

recommendations.

- Recommendations present best practices that should be adopted by member states in the application of the Nuclear Security Fundamentals.
- Implementing Guides provide further elaboration of the Recommendations in broad areas and suggest measures for their implementation.
- Technical Guidance publications comprise: Reference Manuals, with detailed measures and/or guidance on how to apply the Implementing Guides in specific fields or activities; Training Guides, covering the syllabus and/or manuals for IAEA training courses in the area of nuclear security; and Service Guides, which provide guidance on the conduct and scope of IAEA nuclear security advisory missions.

http://www-ns.iaea.org/security/nuclear_security_series.htm

IAEA Implementing Guide on Development, Use and Maintenance of the Design Basis Threat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INFCIRC/225/Rev. 4 (Corrected) describes the design basis threat (DBT) tool and recommends development of a notional DBT. Recognizing the importance assigned to the DBT tool in INFCIRC/225, a number of IAEA member states requested that workshops be developed and conducted to present a methodology for developing, maintaining, and using a DBT. As an adjunct to the workshops, a draft was developed and circulated for comment.

The draft was intended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in INFCIRC/225/Rev. 4 (Corrected), which was issued in 1999. Since then, further developments have occurred to strengthen the interna-

tional regime for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radioactive material and associated facilities, including endorsement of The Physical Protection Objectives and Fundamental Principles (GOV/2001/41/Attachment) by the IAEA Board of Governors in September 2001, and endorsement of the revised Code of Conduct on the Safety and Security of Radioactive Sources by the Board of Governors in 2004. These objectives and principles were then incorporated into the July 8, 2005 Amendment to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The Implementing Guide represents an update of the original draft guidance reflecting further developments.

A DBT is a comprehensive description of the motivation, intentions, and capabilities of potential adversaries against which protection systems are designed and evaluated. Such definitions permit security planning on the basis of risk management. A DBT is derived from credible intelligence information and other data concerning threats, but is not intended to be a statement about actual, prevailing threats. Historically, states have used DBTs in their regulatory system to achieve appropriate allocations of resources to the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against malicious acts by potential adversaries that could result in high consequences, particularly radiological consequences or consequences of proliferation; however, a DBT can also be used to protect any asset with associated high potential consequences (e.g., other radioactive material of high activity).

The Implementing Guide:

- Describes a DBT, including what it is and why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it is used;
- Identifies and recommends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or-

ganizations that should be involved in the development, use, and maintenance of a DBT;

- Describes how to conduct a national threat assessment as a precursor to a DBT;
- Explains how a DBT can be developed, including:
 - the information required to develop a DBT;
 - the decision making processes for the development of a DBT;
- Explains how a DBT is incorporated into a State's nuclear security regime;
- Explains the conditions for a review of the DBT, and how the review and update are conducted

http://www-pub.iaea.org/MTCD/publications/PDF/Pub1386_web.pdf

International Physical Protection Advisory Service (IPPAS)

The International Physical Protection Advisory Service (IPPAS) was created by the IAEA to assist states in strengthening their national nuclear security regime. IPPAS provides peer advice on implementing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agency guidance on the protection of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 and associated facilities.

During the IPPAS mission, the state's physical protection system is reviewed and compared with international guidelines (INFCIRC/225/Rev.4) and internationally recognized best practices. Based on this review,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s are provided including follow-up activities and assistance. Following IPPAS recommendations, actual upgrades of physical protection systems were initiated in several Member States through bilateral support programs.

At the request of a member state, IPPAS assembles a team of international experts who assess the state's system of physical protection, com-

pare it with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and make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s. IPPAS missions are conducted both on a nation-wide and facility-specific basis. As of June 30, 2008, 41 IPPAS missions have been completed in all regions of the world.

<http://www-ns.iaea.org/security/ippas.htm>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Participants in the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are committed to the following Statement of Principles to develop partnership capacity to combat nuclear terrorism on a determined and systematic basis, consistent with national legal authorities and obligations they have under relevant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s, notably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its 2005 Amendment, UNSCRs 1373 and 1540. They call on all states concerned with this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o make a commitment to implement on a voluntary basis the following principles:

- Develop, if necessary, and improve accounting, control and physical protection systems for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and substances;
- Enhance security of civilian nuclear facilities;
- Improve the ability to detect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and substances in order to prevent illicit trafficking in such materials and substances, to include cooperation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ational detection capabilities that would be interoperable;
- Improve capabilities of participants to search for, confiscate, and establish safe control over unlawfully held nuclear or other

radioactive materials and substances or devices using them. Prevent the provision of safe haven to terrorists and financial or economic resources to terrorists seeking to acquire or use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and substances;

- Ensure adequate respective national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s sufficient to provide for the implementation of appropriate criminal and, if applicable, civil liability for terrorists and those who facilitate acts of nuclear terrorism;
- Improve capabilities of participants for response, mitigation, and investigation, in cases of terrorist attacks involving the use of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and substance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technical means to identify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and substances that are, or may be, involved in the incident; and
- Promote information sharing pertaining to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and their facilitation, taking appropriate measures consistent with their 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protect the confidentiality of any information which they exchange in confidence.

Global Initiative participants recognize the role of the IAEA in the fields of nuclear safety and security and the IAEA has been invited to serve as an observer to the Initiative. All participants commend the IAEA for its action in the field of nuclear security. Participants intend for the IAEA to contribute to the Initiative through its ongoing activities and technical expertise.

The initial partner nations intend to establish a terms of reference for implementation and assessment to support effective fulfillment of the initiative, including by facilitating the provision of assistance to partic-

ipants that may require it, and facilitating suitable exercises.

They express the desire to broaden participation in the Global Initiative to other countries who share the common goals of the Initiative, are actively committed to combating nuclear terrorism, and endorse the Statement of Principles.

<http://www.state.gov/t/isn/rls/other/126995.htm>

The G-8 Global Partnership Against the Spread of Weapons and Materials of Mass Destruction

Since its launch by G-8 Leaders at the June 2002 Kananaskis G-8 Summit, the Global Partnership Against the Spread of Weapons and Materials of Mass Destruction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toward its aim of preventing terrorists or states that support them from acquiring or developing WMD. The Global Partnership is addressing non-proliferation, disarmament, counterterrorism, and nuclear safety issues through cooperative projects in such areas as destruction of chemical weapons; the dismantlement of decommissioned nuclear submarines; the security and disposition of fissile materials; and rechanneling employment of former weapons scientists to peaceful civilian endeavors. The G-8 Global Partnership Working Group under the G-8 Senior Group coordinates international activities to advance the initiative. Progress to date is reported and goals and plans for coming years are discussed and approved during the annual G-8 summits.

<http://www.state.gov/t/isn/c12743.htm>

April 13, 2010

〈부록 19〉

이명박 대통령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유치 기자회견,
워싱턴 D.C. 컨벤션센터, 2010년 4월 13일*

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워싱턴에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50개
국 정상들이 모여서 열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 핵안보정상회의에서 2012년 차기 핵안보정상회의를 대한민
국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결정을 먼저
국민들에게 보고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는 2012년에 워싱턴(회의)에 이어서 열립니다.
여기는 50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세계 핵을 확산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또 핵을 감축하고 원자력 평화적 이용을 논의하는 최상위 안보회의가
되겠습니다.

그것(2차 회의 개최지)은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을 하고, 모든 정상들이
동의를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11월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세계 경제의 최상위 정상회의라고 한다면, 2012년 서울에서 열릴 핵안

19. “한국,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확정”, 『연합뉴스』, 2010년 4월 14일, <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4/14/0200000000AKR20100414000700001.HTML>.

보정상회의는 안보적 측면, 원자력 산업의 평화적 이용에 관련된 최상위 안보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회의가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열리게 된 것은 국민들의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대한민국이 북한으로부터 핵의 위협을 벗어나고, 또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노력하고, 저 자신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면 인류의 꿈인 ‘핵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가히 역사적인 회의라고 할 수 있고, 우리 한반도는 핵의 위협을 받는 나라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 이것(서울 개최 결정)을 수락하는 회의를 열었고, 세계 여러 정상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문일답

〈질문〉 제2차 회의에 북한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할 의사가 있습니까?

〈답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한과 이란은 제외됐다. 사실 두 나

라는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NPT(핵비확산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또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핵을 평화적 이용이 아니라 무기로써 이용하는 나라로 지목돼서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라건대, 이제 북한이 2010년과 11년, 2년 동안에 6자회담을 통해 핵을 포기하는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NPT에 가입해서 세계(에서) 합의된 사항을 따르게 된다면 저는 기꺼이 초대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세계 모든 정상들과 함께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 회의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답변〉 북한이 이번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50개국 정상들의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북한을 중심으로 한 몇 개 나라가 대상이 되고, 이 정상회의를 통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그런 회의가 될 것입니다. 50개국 정상들이 핵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런 나라들로부터 핵물질이 테러집단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핵이 테러 집단에도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세계는 정말 공포에 빠질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생명이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자유, 평화, 번영, 미래 등 모든 것이 다 위협을 받게 될 것이고, 어쩌면 우리는 핵을 가진 테러단 집단 테러단에게 굴복해야 되는 그런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개국 이번의 1차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정말 핵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핵확산을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 중심에 북한이 물론 들어

가 있습니다. 핵물질이 테러단에 불법 거래되는 것, 또 불량 국가들, 핵을 개발하는 사람들끼리 기술 협력을 하고 거래하는 것들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모든 국가들의 토론 대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의가 그런 나라들의 핵을 억제하는데 굉장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원전 세일즈 외교에 주력하셨다고 들었는데 구체적 성과가 있었습니까?

〈답변〉 이런 정상회의를 통해서 너무 노골적으로 원자력 발전 세일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전략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핵 가동률이 세계 최고이고, 사고율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것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물론 (한국 원전에 대해) 관심 가는 게 맞습니다. 저는 벌써 개별적으로 정상들끼리 이야기한 것이 있지만 여기서 밝힐 수가 없습니다.(웃음) 이것은 서로 견제하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지만, 개별적으로 핵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해 얘기를 많이 나눴고, 특히 UAE(아랍에미리트)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세계 원자력 발전 세일의 큰 성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아주 조용하게, 이 전략은 노출되면 안 되니까,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총서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곤 외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민 외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20,000원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의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II)	김규륜 외	13,000원

학술회의총서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협동연구총서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근 외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7,500원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근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2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1 (2011)		2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이금순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i>	김국신 외	17,500원

기타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도 동향 1994-2008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2010 김정일 현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010 독일통일백서		13,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2010	통일 환경 평가(통일대계 연구 2010-01)	박종철 외	18,000원
2010	통일비전 개발(통일대계 연구 2010-02)	조민 외	12,000원
2010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통일대계 연구 2010-03)	황병덕 외	16,000원
2010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통일-중국, 베트남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중심(통일대계 연구 2010-04)	황병덕 외	15,000원
2010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통일대계 연구 2010-05)	배정호 편저	11,000원
2010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통일대계 연구 2010-06)	최진욱 편저	11,000원
2010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통일대계 연구 2010-07)	최진욱 편저	13,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 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 · 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임강택, 임순희, 정영태, 김진하, 한기범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2009-02(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02(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에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 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2호	김국신,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Studies Series

비매품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R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wook, Lee Kyo-Duk, Cho Jeong-Ah, Lee Jin-Yeong, Cha Moon-Seok
-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기타

비매품

-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e Meet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KINU 연구총서 11-01

www.kinu.or.kr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